R 2025-06 | 2025. 12. |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

Securing the Growth Base of Livestock Industry in Response to Workforce Shifts

송우진 이용건 김경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2025-06 | 2025. 12. |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

Securing the Growth Base of Livestock Industry in Response to Workforce Shifts

송우진 이용건 김경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송우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 6, 7장 집필
이용건 | 연구위원 | 제2, 4장, 부록 집필
김경진 | 연구원 | 제3, 5장, 부록 집필

연구보고 R2025-06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803-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농업·농촌 경제의 핵심이자 국민 식생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축산업은 구조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질적 저하를 넘어 후계 인력 부재로 인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경영 승계 후계자가 없다는 농가가 69.7%에 달하는 현실은 축적된 자본과 기술의 순환 단절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고령 농가 폐업으로 폐축사가 급증하여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높은 규제 장벽과 자본 부담으로 축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자원은 버려지는데 신규 진입은 막히는 구조적 모순이자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설, 기술 세 분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인력 위기 해결을 목표로 유휴·폐축사 자원을 청년 농업인에게 연결하는 '자산 순환' 방안, ICT 기반 스마트축산 확산 전략, 청년 세대의 안정적 진입·정착을 위한 금융·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인프라로서 축사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 중개를 넘어 정보 제공, 가치 평가, 컨설팅, 매입·비축 및 임대, ICT 기술 도입과 폐축사 환원 정책을 연계하는 축산 자산관리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나아가 고령 농가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요 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폐업 예정 및 폐축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휴 축사 자원을 축사 승계·매매·임대 모델을 통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규모 확장을 원하는 기존 농가에 연결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폐축사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과 환원 방안을 제안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성 향상, 최적의 사양관리, 악취 및 방역 문제 해결의 핵심인 스마트축산 기술의 보급을 가속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과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끄는 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신규 인력 확충 방안을 도출한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축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년 세대가 축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금융,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축산업의 다층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 법·제도 분석, 정량·정성적 실태조사, 그리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결합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병행하는 복합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첫째, 문헌 및 법률 분석을 통해 축사 관련 핵심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승계 관련 정책(영농상속공제), 폐축사 관련 정책(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검토하였으며, 미국, EU, 일본의 신규 진입 촉진 및 승계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축산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501개 축산농가(한우 251,

젖소·돼지·육계·산란계·오리 각 50)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가 현황, 경영 애로, 인력구조, 고령화와 후계 승계 계획 및 장애요인, ICT 스마트축산 도입 현황과 장벽 등이다. 셋째, 진입 예정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 인력 공급원인 한국농수산대학 축산 관련 학과 재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축산업 인식, 진입 의향, 핵심 장애요인, 정책 수요(금융, 시설 지원) 등이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 방법론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FAHMS)의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 농가 수 증감이 아닌, 폐업(이양, 판매) 농장과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농장번호를 식별하였다. 나아가, 농장번호 이력과 GIS 좌표를 교차 분석하여, 신규 농장이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판별하였다. 이를 통해 폐업 축사의 실제 재활용률(축사로 활용)과 방치율(축사로 미활용)을 축종별로 정량화하였다.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축산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타 농업 분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축산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4.1%로, 2010년 29.6% 대비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전체 농가 평균(2.8%)보다 빨랐다. 세대 단절도 이미 현실화되어, 기존 농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69.7%는 후계자가 없었으며, 이 중 67.9%는 후계자 발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 부재의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65.9%)이었으며, 후계자가 있음에도 승계가 어려운 이유 1순위는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63.8%)으로 나타나, 진입과 승계 모두에서 이중의 장벽이 작용하고 있었다. 고령 농가의 은퇴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도 확인되었다. 은퇴 후 제3자 매각(52.5%)을 가장 많이 희망했으나, 실제 주된 은퇴 소득원은 개인연금 및 저축(62.7%)이었고, 농장 매각·임

대 수입은 13.6%에 불과해 축사 자산이 은퇴 자금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자산 유동화 실패를 의미했다.

○ 이러한 인력 이탈은 시설의 대규모 유휴 실태로 직결된다. FAHMS-GIS 데이터분석 결과, 폐업 농장 부지의 재활용 실태에서 대부분의 축종에서 90%에 가까운 자산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미활용)되는 현황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었다. 한우 농장은 4년간 총 21,151호가 폐업했으나, 이 중 단 9.2%만 축사로 활용되고, 90.8%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었다. 젖소 농장은 87.9%, 육계 농장은 90.7%, 산란계 농장은 83.2%가 미활용 상태였다. 반면, 돼지 농장은 폐업 1,233호 중 31.6%가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자산 가치가 아닌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허가권 가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자원 낭비는 신규 진입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다. 폐축사가 대규모로 방치되는 와중에, 신규 한우 농장 14,359호 중 86.4%는 기존 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에 축사를 신축하였으며, 젖소 역시 신규 농장의 80.1%가 신규 부지에 입지해 자본의 중복 투자와 자원 배분 실패를 의미했다.

○ 신규 진입의 장벽 또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전공 대학생 설문 결과, 축산업의 중요도(98.5% 긍정)는 높게 평가했으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77.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신규 진입의 핵심 장벽은 자본과 부지였다. 진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지목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 역시 금융 지원과 시설 확보 지원이었다. 특히, 진입 예정자의 75.0%가 신축 비용 부담으로 기존 축사·부지 활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FAHMS 데이터) 신규 한우 농가의 86.4%가 신규 부지에 신축하고 있어, 신규 진입자의 의 희망과 현실에는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편, 노동력 절감의 대안으로 부상한 ICT 스마트축산 보급 실태는 1세대 기술에 머무르고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설문 결과, 도입된 장비는 자동 급이/급수기(75.0%)와 CCTV(64.3%) 등 단순 원격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술에 편중되어 있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관리가 가능한 2세대 기술 도입은 15%에 불과했다. 농가들은 높은 초기 도입 비용(79.8%)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였다.

정책 제언

○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인력 단절, 자산 순환 실패, 기술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축사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이는 고령 농가의 자산 유동화(은퇴 지원)와 청년 농가의 진입 장벽(자산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 허브로서, 단절된 자원 선순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축사은행은 전국 축사 자원 DB 구축 및 표준 감정평가 모델 보급을 통한 정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개하며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성 있는 유휴 축사를 직접 매입·비축 후 ICT 스마트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자산 경량화 모델로 저리 임대·분양한다. 경제성이 없거나 민원 유발이 심한 폐축사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철거(환원)를 지원하고 부지 재활용을 유도한다.

○ 기술 부문에서는 1세대에 머무는 스마트축산 보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 하드웨어 보급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운영 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현장 지도를 겸비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축종별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AI 분석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인력 부문에서는 자본과 입지 장벽 해결이 시급하다. 축사은행의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 경량화 진입 모델을 주력으로 지원하고, 진입 실패 시 자산을 축사은행에 매각 후 재임대하여 재기 기회를 주는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비현실적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와 격리된 원격지에 축산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스마트축산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즉시 입주를 지원하는 공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Securing the Growth Base of Livestock Industry in Response to Workforce Shifts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area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workforce structure. First, it presents efficient utilization plans for livestock facilities slated for closure and those already abandoned. It specifies models for ‘succession, sale, and lease’ to connect idle facility resources, resulting from aging farmers and a lack of successors, to new entrant young farmers or existing farmers seeking expansion. Furthermore, for long-term abandoned facilities, it proposes utilization plans and reversion plans to create a virtuous cycle for these resources. Second, it examines strategies to expand the adoption of smart livestock farming using ICT. It analyzes policy support measures and tasks to accelerate the dissemination of smart livestock technologies—which are key to improving productivity, optimizing animal management, and solving odor and biosecurity issues—and to increase their on-site application. Through this, it seeks strategies for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Third, it derives measures for securing new farmers.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problems of aging and labor shortag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tock labor force, it comprehensively reviews improvement plans to support the stable entry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into the livestock industry.

Research Method

○ This study adopted a mixed-methods research design combining literature reviews,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eld surveys, and spatial database analysis using GIS to analyze the multi-faceted issues of the livestock industry.

○ First, through literature and legal analysis, it reviewed key regulations related to livestock facilities, succession-related policies, and abandoned facility policies. It also analyzed cases of new entrant promotion and succession support in the US, EU, and Japan.

○ Second, a survey of existing livestock farms was conducted, targeting 501 farms nationwide (251 Hanwoo, 50 dairy, 50 pig, 50 broiler, 50 layer, 50 duck). The main survey contents included farm status, management difficulties, labor structure, aging and succession plans/obstacles, and the status and barriers of ICT smart farming adoption.

○ Third, a survey of prospective entrant farmers was conducted, targeting 66 students in livestock-related departm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 future source of manpower. The main survey contents included perceptions of the livestock industry, intention to enter, key barriers, and policy demands.

○ Fourth, as a key methodology, a spati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livestock farm database from the FAHMS. Instead of simple changes in the number of farms, it identified farm identification numbers of ‘closed (transferred, sold) farms’ and ‘new (succeeded, purchased) farms’. Furthermore, by cross-analyzing farm number history and GIS coordinates, it determined whether new farms were located on ‘existing livestock facility sites’ or ‘new livestock facility sites’. This quantified the actual recycling rate (‘utilized as barns’) and neglect rate (‘not utilized as barns’) of closed facilities by livestock type.

Main Findings

○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aging rate of livestock farms outpaced that of other agricultural sectors. As of 2023, the aging rate (65+) of livestock farms was 54.1%, which increased by an average of 4.8% annually from 29.6% in 2010, faster than the total farm average (2.8%). The generational gap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the survey of existing farms revealed that 69.7% of respondents had no successor, and 67.9% of those had no plans to find one. The biggest reason for the lack of successors was ‘poor working conditions’ (65.9%), while the top reason for difficulty in succession even with a successor was the ‘tax burden related to gifts and inheritance’ (63.8%), indicating dual barriers in both entry and succession. A gap between aging farmers’ retirement plans and reality was also confirmed. While ‘sale to a third party’ (52.5%) was the most desired plan post-retirement, the main source of retirement income was ‘personal pensions and savings’

(62.7%), with ‘income from farm sale or lease’ accounting for only 13.6%. This signifies a failure in asset liquidation, where farm assets fail to function as a means to secure retirement funds.

○ This labor exodus directly leads to the large-scale idling of facilities. The FAHMS-GIS data analysis quantitatively proved that in the recycling status of closed farm sites, nearly 90% of assets for most livestock types were not recycled and remained abandoned (not utilized). Over 4 years, a total of 21,151 Hanwoo farms closed, but only 9.2% were re-utilized as barns, while 90.8% remained abandoned. For dairy farms, 87.9% were unutilized, 90.7% for broiler farms, and 83.2% for layer farms. In contrast, pig farms had a relatively higher recycling rate, with 31.6% of the 1,233 closed farms being utilized. This was presumed to be due not to asset value, but to the ‘permit value’, as new permits are virtually impossible to obtain. This waste of resources led to inefficiencies in new entries. While abandoned barns were left neglected, 86.4% of 14,359 new Hanwoo farms built new facilities on ‘new sites’ rather than existing ones, and 80.1% of new dairy farms also located on new sites. This signifies duplicate capital investment and a failure in resource allocation.

○ Barriers to new entry were also found to be entrenched. The survey of livestock-majoring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ey rated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98.5% positive) highly, but 77.3% responded negatively regarding ‘economic stability’. ‘High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difficulty securing barns and land' were overwhelmingly cited as the biggest obstacles to entry. The most needed policies were also 'financial support' and 'facility acquisition support'. Notably, 75.0% of prospective entrants hoped to 'utilize existing barns/land' due to the burden of new construction costs, but in the actual market (FAHMS data), 86.4% of new Hanwoo farms were building on 'new sites', confirming a gap between the hopes of new entrants and reality.

○ Meanwhile, the adoption status of ICT smart livestock farming, emerging as an alternative for labor saving, was found to be stalled at '1st generation' technology, failing to maximize efficiency. Adoption was concentrated on simple remote monitoring and automation technologies like 'automatic feeders/waterers' (75.0%) and 'CCTV' (64.3%). The adoption of '2nd generation' (data-based) technology was only 15%. Farmers perceived 'high initial adoption costs' (79.8%) as the biggest obstacle.

Policy Suggestions

○ To 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findings, workforce disconnection, asset circulation failure, technology stagnation,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Livestock Housing Bank' is proposed. This can serve as an integrated hub to simultaneously solve the

problems of asset liquidation for aging farmers (retirement support) and entry barriers for young farmers (asset acquisition), becoming key infrastructure for a virtuous cycle of disconnected resources. The Bank would perform functions as an information platform by building a nationwide livestock facility database and disseminating a ‘standard appraisal model’; it would mediate between sellers and buyers and provide legal/tax consulting. Furthermore, it would directly purchase/stockpile viable idle facilities, remodel them into ICT smart barns, and lease or sell them to young farmers at low interest under an ‘asset-light’ model. It would also support the demolition (reversion) of non-viable or environmentally problematic fac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ural Spatial Rearrangement Project’.

○ In the technology sector, to overcome the stagnation at 1st generation smart farming, the policy focus must shift from simple hardware dissemination to support for data utilization consulting and operation services. This requires activating a ‘Smart Agriculture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data standardization by livestock type and a big data platform to foster an ecosystem for private-sector AI analysis services.

○ In the personnel sector, solving capital and location barriers is urgent. The asset-light entry model via the ‘Livestock Housing Bank’ lease program should be primarily supported, and a finan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offering a chance to recover from failure (e.g.,

sale-and-lease-back to the Bank). Also, unrealistic requirements for the agricultural inheritance deduction must be relaxed. Finally, a spatial solution must be sought by designating ‘livestock zones’ in remote areas isolated from residential areas and preemptively developing smart livestock complexes with pre-approved permits to support the immediate entry of young farmers.

Researchers: SONG Woojin, LEE Yonggeon, KIM Kyoungjin
Research period: 2025. 1. - 2025. 10.
E-mail address: gnos@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 9

제2장 축산업의 인력구조 변화 및 정책 현황 ····· 13

1. 축산업 구조변화 및 인력 현황 ····· 15
2. 축산농가 고령화 및 고용 현황 ····· 22
3. 축사 관련 규제·정책 현황 및 법률 검토 ····· 28
4. 스마트축산 현황 ····· 47

제3장 축산농가 및 신규 진입 농가 설문조사 ····· 55

1. 축산농가 설문조사 ····· 57
2. 축산업 신규 진입자 설문조사 ····· 88

제4장 축사시설 이용 현황 ····· 101

1. 자료 및 분석 방법 ····· 103
2. 신규/폐업 농가 실태분석 ····· 107
3. 신규/폐업 농가 다발 시·군 특성 분석 ····· 140

제5장 축산업 성장기반 유지 방안 ····· 147

1. 축사 승계/매매/임대 및 폐축사 활용/환원 ····· 149
2. ICT 스마트축산 보급 촉진 방안 ····· 156
3.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15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3

부록

1. 축산업 종사자 경영 및 인력 관련 실태조사표 ····· 169
2. 축산업 신규 진입 및 예정자 설문조사 ····· 178
3. 지역별 축산농가 사육/운영 및 신규/폐업 현황 ····· 185
4. 연도별·축종별 사육 기반 분석 결과 ····· 199

참고문헌 ····· 203

표 차례

제2장

〈표 2-1〉 축산업 생산액 변화 ····· 16
〈표 2-2〉 농림어업 부가가치액 변화 ····· 16
〈표 2-3〉 영농형태별 농가 경영주 연령 ····· 23
〈표 2-4〉 영농형태별 고령화율 변화 ····· 23
〈표 2-5〉 축산농가 농장주 성별 및 연령 ····· 24
〈표 2-6〉 영농형태별 경영주 농업 경력 ····· 25
〈표 2-7〉 축산농가 사육 경력 ····· 25
〈표 2-8〉 축산농가 경영 및 농장 소유 형태 ····· 26
〈표 2-9〉 영농형태별 고용 현황 ····· 26
〈표 2-10〉 축산농가 고용 현황 ····· 27
〈표 2-11〉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 29
〈표 2-1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육 제한 거리 ····· 30
〈표 2-13〉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24년 8월 기준) ····· 30
〈표 2-14〉 주민 동의서 요구 조례 시군 현황 ····· 31
〈표 2-15〉 2019~2023년 영농상속공제 현황 ····· 33
〈표 2-16〉 괴산군 신풍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 36
〈표 2-17〉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39
〈표 2-18〉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 ····· 47
〈표 2-19〉 축종별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 ····· 47
〈표 2-20〉 스마트축산 도입 효과 ····· 49
〈표 2-21〉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연도별 예산 ····· 52
〈표 2-22〉 축종별·세대별 스마트축산 기술 보급률 ····· 54

제3장

〈표 3-1〉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개요 ····· 58
〈표 3-2〉 축종별 설문조사 대상 ····· 58

〈표 3-3〉 주요 축종별 농장주 연령 ····· 59
〈표 3-4〉 주요 축종별 축산업 종사 기간 ····· 59
〈표 3-5〉 축종별 농가 평균 사육 마릿수 ····· 60
〈표 3-6〉 주요 축종별 경영 애로사항 ····· 60
〈표 3-7〉 주요 축종별 민원 제기 경험 여부 및 평균 건수 ····· 61
〈표 3-8〉 주요 축종별 민원 제기 원인 ····· 62
〈표 3-9〉 가족 노동력 구성 ····· 62
〈표 3-10〉 내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 63
〈표 3-11〉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 64
〈표 3-12〉 돼지, 산란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 64
〈표 3-13〉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정도 ····· 65
〈표 3-14〉 축종별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정도 ····· 66
〈표 3-15〉 내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 66
〈표 3-16〉 돼지·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내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 67
〈표 3-17〉 외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 68
〈표 3-18〉 돼지·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 69
〈표 3-19〉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 영향 ····· 70
〈표 3-20〉 농장 경영 후계자 보유 여부 ····· 71
〈표 3-21〉 축종·규모별 농장 경영 후계자 보유 여부 ····· 72
〈표 3-22〉 후계자와 경영주와의 관계 ····· 73
〈표 3-23〉 후계자의 현재 농장 업무 참여 수준 ····· 74
〈표 3-24〉 후계자의 관련 교육 이수 수준 ····· 75
〈표 3-25〉 후계자에게 농장 승계를 하기 어려운 이유 ····· 76
〈표 3-26〉 후계자가 없는 이유 ····· 77
〈표 3-27〉 은퇴 후 운영 중인 농장 처리 계획 ····· 78
〈표 3-28〉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은퇴 후 운영 중인 농장 처리 계획 ····· 79
〈표 3-29〉 은퇴 후 주 소득원 ····· 80
〈표 3-30〉 현재 도입한 스마트축산(ICT) 기술·장비 ····· 81

〈표 3-31〉 스마트축산(ICT) 기술·장비 도입 계획 ····· 82
〈표 3-32〉 스마트축산 기술·장비 추가 도입 시 장애물 ····· 83
〈표 3-33〉 향후 5년간 농장 운영 규모 계획 ····· 84
〈표 3-34〉 농장 운영 대폭 축소 및 폐업 이유 ····· 84
〈표 3-35〉 정부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85
〈표 3-36〉 정부 지원 정책 이용 여부 ····· 85
〈표 3-37〉 어려움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부 정책 ····· 86
〈표 3-38〉 축산지구의 필요성 ····· 87
〈표 3-39〉 청년농 진입 의향 및 인식조사 개요 ····· 88
〈표 3-40〉 설문조사 대상 개요 ····· 89
〈표 3-41〉 가족 중 농업 종사 여부 ····· 89
〈표 3-42〉 가족 중 축종별 종사 비율 ····· 90
〈표 3-43〉 가족 중 품종별 종사 비율 ····· 90
〈표 3-44〉 축산업의 중요도 ····· 90
〈표 3-45〉 향후 국내 축산업 전망 ····· 91
〈표 3-46〉 국내 축산업 이미지 ····· 91
〈표 3-47〉 축산업에 대한 의견 ····· 92
〈표 3-48〉 향후 축산업 분야 진출 의향 ····· 93
〈표 3-49〉 향후 축산업 분야 진출 시 관심 축종 ····· 93
〈표 3-50〉 축산업 진입 시 축사부지 계획 ····· 94
〈표 3-51〉 축산업 진입 시 축사부지확보 방식 ····· 95
〈표 3-52〉 ICT 스마트축산 인지도 ····· 95
〈표 3-53〉 희망 축종별 ICT 스마트축산 도입 의향 ····· 96
〈표 3-54〉 축산업 승계 및 창업의 의향이 없는 사유 ····· 97
〈표 3-55〉 축산업 기반 축종별 축산업 신규 진입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5점 척도) · 97
〈표 3-56〉 축산업 기반 축종별 축산업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중요도 인식 · 98

제4장

〈표 4-1〉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수집자료 현황 ····· 105
〈표 4-2〉 축산농장의 운영 상태 구분 방법 ····· 107
〈표 4-3〉 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현황 ····· 109
〈표 4-4〉 연도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 109
〈표 4-5〉 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 110
〈표 4-6〉 연도별 신규/폐업 돼지 농장 현황 ····· 110
〈표 4-7〉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돼지 농장 현황 ····· 111
〈표 4-8〉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 112
〈표 4-9〉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현황 ····· 116
〈표 4-10〉 연도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 117
〈표 4-11〉 2025년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 117
〈표 4-12〉 연도별 신규/폐업 한육우 농장 현황 ····· 118
〈표 4-13〉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한우농장 현황 ····· 119
〈표 4-14〉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 119
〈표 4-15〉 연도별 젖소 농장 휴업 현황 ····· 122
〈표 4-16〉 젖소 농장 운영 현황과 사육규모(최대 사육규모) ····· 122
〈표 4-17〉 연도별 신규/폐업 젖소 농장 현황 ····· 123
〈표 4-18〉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젖소 농장 현황 ····· 124
〈표 4-19〉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 124
〈표 4-20〉 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현황 ····· 127
〈표 4-21〉 연도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 128
〈표 4-22〉 25년 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 128
〈표 4-23〉 연도별 신규/폐업 육용계 농장 현황 ····· 129
〈표 4-24〉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육용계 농장 현황 ····· 130
〈표 4-25〉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 130
〈표 4-26〉 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현황 ····· 133
〈표 4-27〉 연도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 133

〈표 4-28〉 25년 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 133
〈표 4-29〉 연도별 신규/폐업 산란계 농장 현황 ····· 134
〈표 4-30〉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산란계 농장 현황 ····· 135
〈표 4-31〉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 135
〈표 4-32〉 축종별·연도별 농장 수 ····· 137
〈표 4-33〉 축종별 폐업 축사 활용률 ····· 138
〈표 4-34〉 축종별 폐업축사 발생 추정량 ····· 138
〈표 4-35〉 21/25년 축종별 폐업/신규 축사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 139
〈표 4-36〉 연도별 축종별 사육기반(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감률 ····· 139
〈표 4-37〉 21/25년 돼지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 141
〈표 4-38〉 21/25년 한육우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 142
〈표 4-39〉 21/25년 젖소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 143
〈표 4-40〉 21/25년 육용계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 144
〈표 4-41〉 21/25년 산란계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 145

제5장

〈표 5-1〉 축사 이전 방식별 비교 분석 ····· 151
〈표 5-2〉 축사은행의 주요 기능 설계 ····· 154

부록

〈부표 3-1〉 지역별·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현황 ····· 185
〈부표 3-2〉 연도별·지역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 186
〈부표 3-3〉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돼지 농장 현황 ····· 186
〈부표 3-4〉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 187
〈부표 3-5〉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현황 ····· 188
〈부표 3-6〉 연도별·지역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 189
〈부표 3-7〉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한육우 농장 현황 ····· 189

〈부표 3-8〉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 190
〈부표 3-9〉 연도별·지역별 젖소 농장 휴업 현황 ····· 191
〈부표 3-10〉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젖소 농장 현황 ····· 191
〈부표 3-11〉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 192
〈부표 3-12〉 지역별·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현황 ····· 193
〈부표 3-13〉 연도별·지역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 194
〈부표 3-14〉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육용계 농장 현황 ····· 194
〈부표 3-15〉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 195
〈부표 3-16〉 지역별·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현황 ····· 196
〈부표 3-17〉 연도별·지역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 197
〈부표 3-18〉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산란계 농장 현황 ····· 197
〈부표 3-19〉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 198
〈부표 4-1〉 축종별·연도별 폐업 축사 활용률 및 폐업 축사 발생 현황 ····· 199
〈부표 4-2〉 축종별·연도별 폐업/신규 축사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 200
〈부표 4-3〉 축종별·연도별 사육기반(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 201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축산업의 성장기반의 3요소 ····· 10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 12

제2장

〈그림 2-1〉 한육우 사육 동향 ····· 17
〈그림 2-2〉 한육우 사육 구조변화 ····· 18
〈그림 2-3〉 젖소 사육 동향 ····· 18
〈그림 2-4〉 젖소 사육 구조변화 ····· 19
〈그림 2-5〉 돼지 사육 동향 ····· 20
〈그림 2-6〉 돼지 사육 구조변화 ····· 20
〈그림 2-7〉 닭 사육 동향 ····· 21
〈그림 2-8〉 닭 사육 구조변화 ····· 22
〈그림 2-9〉 물환경보전법 시행 추진 절차 ····· 32
〈그림 2-10〉 나주시 총량관리단위유역도 예시 ····· 32
〈그림 2-11〉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 35
〈그림 2-12〉 괴산군 신풍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 37
〈그림 2-13〉 합천군 웅기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 37

제4장

〈그림 4-1〉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체계도 ····· 104
〈그림 4-2〉 돼지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 108
〈그림 4-3〉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 113
〈그림 4-4〉 익산시 돼지 농장 폐업 다발 지역 ····· 113
〈그림 4-5〉 김제시 돼지 농장 폐업 다발 지역 ····· 114
〈그림 4-6〉 한육우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 115
〈그림 4-7〉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 120

〈그림 4-8〉 젖소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 121
〈그림 4-9〉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 125
〈그림 4-10〉 육용계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 126
〈그림 4-11〉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 131
〈그림 4-12〉 산란계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 132
〈그림 4-13〉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 136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농촌 지역, 특히 축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 경영주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6%에서 2023년 54.1%로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동력 감소를 넘어 질적 저하를 유발하며,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 방역, 환경 관리와 직결되는 신기술 적용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후계 인력의 부재는 미래 축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후계농을 찾지 못한 고령 농가는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재투자를 꺼리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 약화와 폐업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축산농가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등 악화된 경영 여건으로 인한 폐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농가 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최근 5년(2019~2024년)간 주요 축종별 농가 수는 모두 감소했으며(한육우 11.7%, 양돈 8.8%, 젖소 12.3%, 닭 5.9%), 이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폐축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된 폐축사는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 및 악취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되며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기존 농가는 고령화로 폐업하는 반면, 사육 기반이 없는 신규 인력, 특히 청년 농업인은 현행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쪽에서는 자원이 버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원이 필요함에도 공급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고령 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유휴 축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과 시설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관리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며, 악취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축사 문제,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설, 기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서 제기된 인력구조 변화 등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폐업 예정 축사 및 폐축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휴 축사 자원을 '축사 승계·매매·임대' 모델을 통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규모 확장을 원하는 기존 농가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폐축사에 대해서는 입지 및 시설 상태를 고려하여 축산 생산에 재활용하는 '활용' 방안과 타 용도로 전환하는 '환원' 방안을 제안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확산으로 축산업의 기술 수준 증대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성 향상, 최적의 사양관리, 악취 및 방역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인 스마트축산 기술의 보급을 가속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과제를 분석하여 축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축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규 인력 확충 방안을 도출한다.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 세대가 축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금융,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축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크게 노동, 시설, 기술,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책임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1.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 관련 연구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엄진영 외(2017)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같은 기존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진단하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엄진영 외(2020)는 현행 제도가 농업 현장의 탄력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비공식적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세분화와 통합적인 고용인력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 농업인력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상진 외(2020)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역할 확대 방안을 연구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원활하지 않은 경영 승계 문제이다. 최현호 외(2017)는 축산농가의 영농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41.2%에 불과했으며, 특히 한우(36.6%)가 양돈(47.2%)이나 젖소(45.4%)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사육 규모가 클수록 후계자 확보 비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며,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수 외(2019)는 기존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 간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했으며, 이상호 외(2020)는 성공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정착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김남훈·황의식(2024)은 영농상속공제 세제 지원을 가업승계 수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 강화 및 경영이양직불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영농승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2. 축사 등 시설 관련 연구

정부는 2009년부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김미복 외

(2015)는 사업의 심층 평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융자 집행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농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병준 외(2016a)는 경영주 연령이 낮고 후계자가 있으며 사육 규모가 클수록 사업 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분석하고, 고령농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계농 매칭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송우진 외(2022)는 건축비용 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 조정을, 이용건 외(2022)는 전국 축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의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 강화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신규 축사 건축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허덕 외(2015)는 젊은 인력의 축산업 유입을 위한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은행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구체화한 문한필 외(2023)의 연구는 한우 축사를 중심으로 축사은행제도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 연구는 각종 규제와 정보 부족이 신규 인력 진입의 장애요인임을 지적하며, 기존 농가와 청년창업농 모두 제도 도입에 80% 이상 공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과거 농협 중심의 시범사업이 농지 소유 제한이라는 법적 제약으로 실패했음을 분석하고, 현재 농지은행을 운영 중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장 현실적인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3. 스마트축산 및 ICT 등 기술 관련 연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양관리 중심의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권기덕(2020)은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 단계를 1세대(편의성 증진), 2세대(생체정보 활용), 3세대(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로 구분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재 외(2021)는 축산 빅데이터와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문제를 다루었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2023)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과 함께 높은 도입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의 과제를 지적했다. 해외 연구에서도 Tedeschi et al.(2021)은 센서 기술을 통한 자원 관리 최적화와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가축전염병, 환경, 윤리 문제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연구의 초점이 지능정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김세한 외(2019)는 연구 패러다임이 생산성 중심에서 먹거리 안전, 질병 예방, 환경오염 최소화, 동물복지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대헌·김락우(2021)는 양돈 분야에서 영상 인식 기반의 개체 분석 기술 동향을 분석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2022)는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 역학조사 방법론을 제시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Simitzis et al.(2021)은 정밀축산 시스템이 동물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찰했다.

2.4. 축산 정책 평가 및 성장 발전방안 연구

축산 부문 정책 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례 보고서를 비롯해 개별 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우병준 외(2016b)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미래의 축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위생·안전성, 친환경, 농가경영 안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중요도를 분석했다. 김현중 외(2018)는 가축분뇨 처리 사업을 평가하며 자원화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민국 외(2011)가 축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의 초기 개념을 정립한 이후, 우병준 외(2019)는 공장식 축산의 확대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박성진·김현중(2020)은 소비자와 축산농가 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격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축산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2.5. 본 연구의 차별성

지금까지 축산업 인력구조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했으며, 질적 성장 관련 연구는 주로 외부효과나 시설, 일부 정책수단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촉발한 인력과 축사의 세대교체, ICT 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업의 성장기반 유지 방안을 도출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가 축산업의 개별 투입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반면, 본 연구는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 노동(인력), 시설,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령화, 폐축사, 기술보급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축산업의 성장기반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자원인 노동(인력), 시설,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 부문 신규 인력 확충 방안, 축사의 승계·임대 및 폐축사 활용 방안, ICT 기술 보급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첫째, 노동 부문에서는 축산업 노동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 고령화 진행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축산노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한다. 또한 고령농가의 향후 경영 계획을 조사하며, 신규 진입 축산농가의 현황과 신규 진입의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축산농가 조사를 통해 축산노동 현황, 폐업, 후계자 여부 등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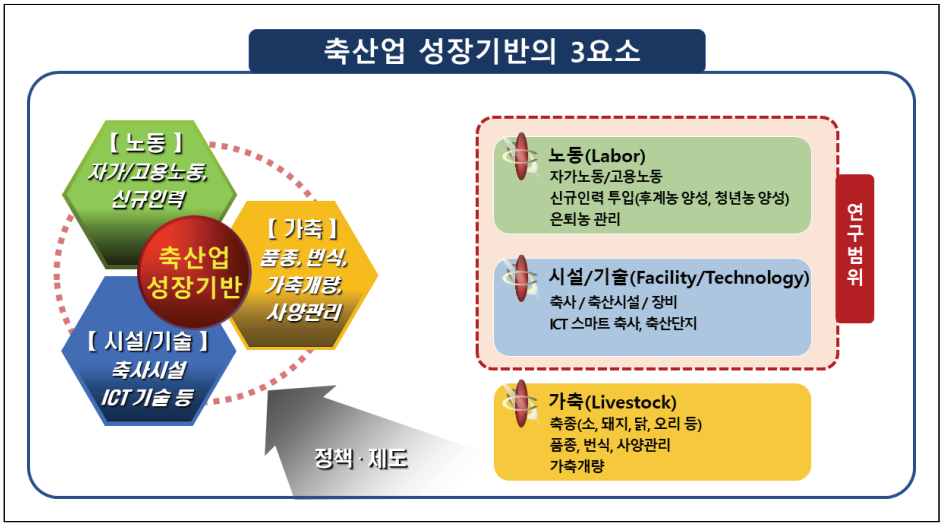
둘째, 시설 부문에서는 축산시설 이용 현황과 폐업 및 폐축사 실태를 다룬다. 축사 이용 현황 및 축산농가의 폐업 실태를 파악하고,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축사 관

련 법률을 검토한다. 축사 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며, 축사 승계, 매매, 임대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축산농가 폐업 현황 및 폐축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업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기술 부문에서는 ICT 스마트 축사의 이용 실태와 과제를 연구한다. 스마트 축사의 개요 및 도입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한다. 스마트 축사 도입농장의 성과를 분석하며, 도입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조사한다.

넷째, 축산업의 성장기반 유지 방안을 모색한다. 축사의 효율적 활용에 미치는 요인과 효과를 분석하며, 이는 스마트축산 도입 효과 및 폐축사·폐업 예정 축사 활용의 효과를 포함한다. '축사 승계/임대' 및 '폐축사 활용/환원'의 기본구상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ICT 스마트 축사 도입 활성화 및 성과 창출 방안 그리고 축산업 신규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1〉 축산업의 성장기반의 3요소



자료: 저자 작성.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축산업이 직면한 인력, 시설, 기술의 다층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문헌 및 법·제도 분석, 정량·정성적 실태조사(설문조사), 공간 데이터베이스 분석, 외국 사례조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등을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노동(인력), 시설,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기반 유지 방안을 도출하려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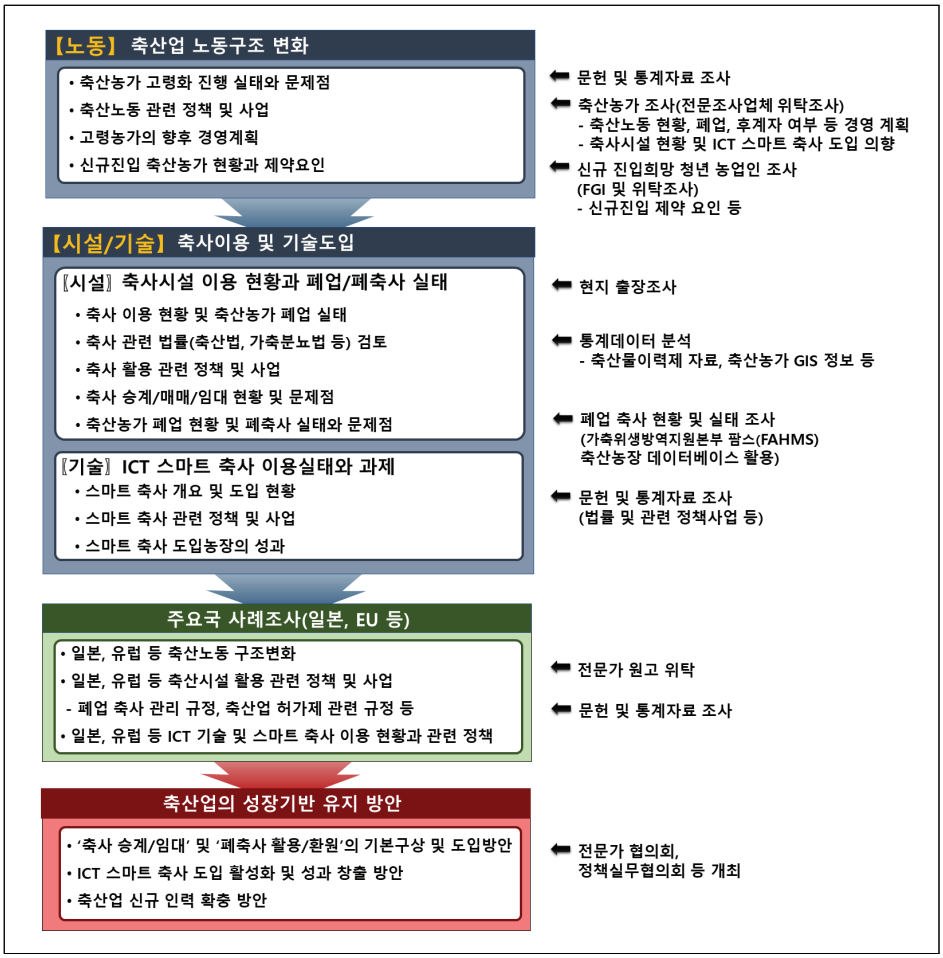
먼저, 국내외 문헌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해 축사 관련 핵심 규제와 승계 관련 정책, 폐축사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EU, 일본의 신규 진입 촉진 및 승계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급과 수요 측면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이원화하여 실시하였다. 기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현황, 인력구조, 고령화와 후계 승계 계획 및 장애요인, ICT 스마트축산 도입 현황과 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 인력 공급원인 한국농수산대학 축산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축산업 인식, 진입 의향, 핵심 장애요인, 금융 및 시설 지원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핵심 방법론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FAHMS)의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 농가 수 증감이 아닌, 폐업 농장과 신규 농장의 농장번호를 식별하고, 이 농장번호 이력과 GIS 좌표를 교차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규 농장이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혹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판별하여, 폐업 축사의 실제 재활용률과 방치율을 축종별로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축사 승계/임대 및 폐축사 활용/환원의 구상, ICT 스마트축사 도입 활성화 방안, 축산업 신규 인력 확충 방안 등 노동, 시설, 기술 부문을 아우르는 축산업의 성장기반 유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축산업의 인력구조 변화 및 정책 현황

제2장

축산업의 인력구조 변화 및 정책 현황

1. 축산업 구조변화 및 인력 현황

1.1. 축산업 주요 현황

FTA 체결 등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음에도,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2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3년에는 24조 2,190억 원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 25.3%에서 2023년 40.9%로 크게 확대되어 축산업은 재배업에 버금가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표 2-1〉 축산업 생산액 변화

단위: 10억 원, %

연도	농업	미곡	축산업						
			한육우	돼지	우유	닭	계란	기타	합계
2000년 (비중, %)	31,968 (100.0)	10,05 (32.9)	1,879 (5.9)	2,372 (7.4)	1,352 (4.2)	821 (2.6)	651 (2.0)	1,008 (3.2)	8,082 (25.3)
2010년	45,724	6,787	4,863	5,323	1,693	2,146	1,341	2,105	17,471
2020년	50,173	8,449	5,992	7,178	2,196	2,027	1,634	1,321	20,347
2021년	59,204	9,526	7,237	8,479	2,161	2,274	2,470	1,959	24,580
2022년	580,72	7,875	6,334	9,650	2,139	2,581	2,594	2,093	25,391
2023년 (비중, %)	59,269 (100.0)	8,057 (13.6)	4699 (7.9)	9113 (15.4)	2345 (4.0)	2713 (4.6)	2741 (4.6)	2,608 (4.4)	24,219 (40.9)
연평균 증감률 ('00-'23)(%)	2.7	-1.1	4.1	6.0	2.4	5.3	6.4	4.2	4.9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제별 통계-농림-농림업생산지수.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료비 등 중간재비의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부가가치액은 2021년 7조 6,481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3년 축산업 부가가치액은 4조 2,301억 원으로, 최대치였던 2021년 대비 44.7%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율(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액) 역시 2010년 25.4%에서 2023년 17.5%로 7.9%p 하락하였다.

〈표 2-2〉 농림어업 부가가치액 변화

단위: 10억 원(2020년 명목가격 기준)

연도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2010년 (비중, %)	28,202.0 (100.0)	18,129.2 (64.3)	4,431.3 (15.7)	2,355.3 (8.4)	3,286.3 (11.7)
2020년	32,481.6	20,774.3	5,845.2	2,379.0	3,483.2
2021년	36,998.4	23,892.9	7,648.1	2,196.4	3,261.0
2022년	33,656.4	22,330.3	6,222.5	2,232.5	2,871.1
2023년(p) (비중, %)	34,325.0 (100.0)	24,837.7 (72.4)	4,230.1 (12.3)	2,119.3 (6.2)	3,138.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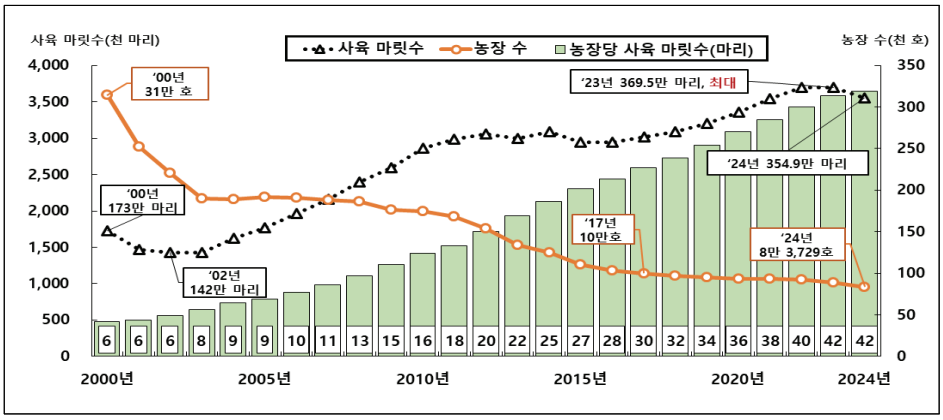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1.2. 축종별 사육 동향

한육우 사육 마릿수(분기별 평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역대 최대인 369만 5천 마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소고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사육 의향이 낮아지면서, 2024년에는 약 354만 9천 마리(한우 약 341만 4천 마리, 육우 약 13만 5천 마리)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사육 농장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약 31만 4천 호에 달했던 사육 농장 수는 2024년 약 8만 4천 호로 급감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로도 5.7%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2000년 5.5마리에서 2024년 42.4마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소규모 농장의 폐업과 함께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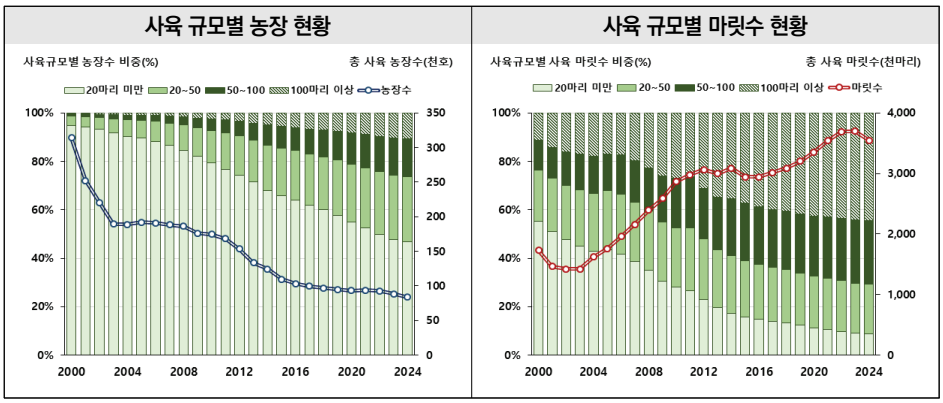
〈그림 2-1〉 한육우 사육 동향



주: 2014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육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화 추세가 뚜렷하다. 2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 농장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하였으나,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 수는 연평균 16.1% 증가하였다. 전체 사육 마릿수에서 50마리 이상 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24년 70.3%까지 확대되어, 전업농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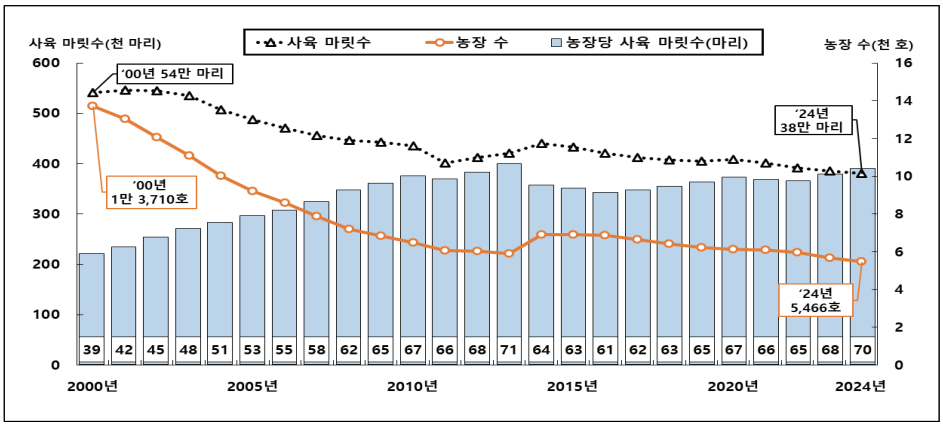
〈그림 2-2〉 한육우 사육 구조변화



주: 2014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젖소 사육 마릿수는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0년 5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38만 마리까지 줄었다. 사육 농장 수 역시 2000년 1만 3,710호에서 2024년 5,466호로 크게 감소하였다. 타 축종이 사육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되는 가운데 사육농가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젖소는 사육규모와 사육농가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쿼터제 시행 이후 원유 생산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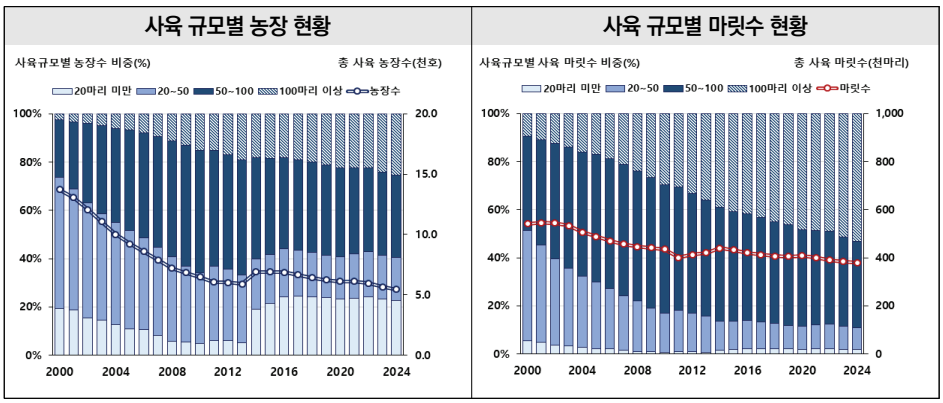
〈그림 2-3〉 젖소 사육 동향



주: 2014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젖소 사육 마릿수와 농장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2000년 39마리에서 2024년 70마리로 증가하며 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사육 구조 측면에서도 5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농장 비중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다. 반면,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의 수와 이들이 차지하는 사육 마릿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2-4〉 젖소 사육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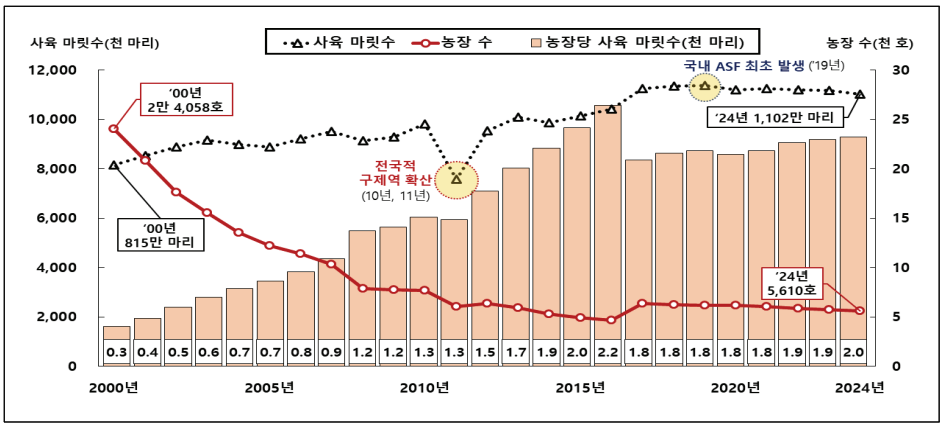


주: 2017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00년 815만 마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102만 마리를 기록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2019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등 질병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육 규모는 확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육 농장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 2만 4,058호였던 농장 수는 2024년 5,610호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농장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00년 약 300마리 수준에서 2024년 약 2천 마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여, 타 축종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규모화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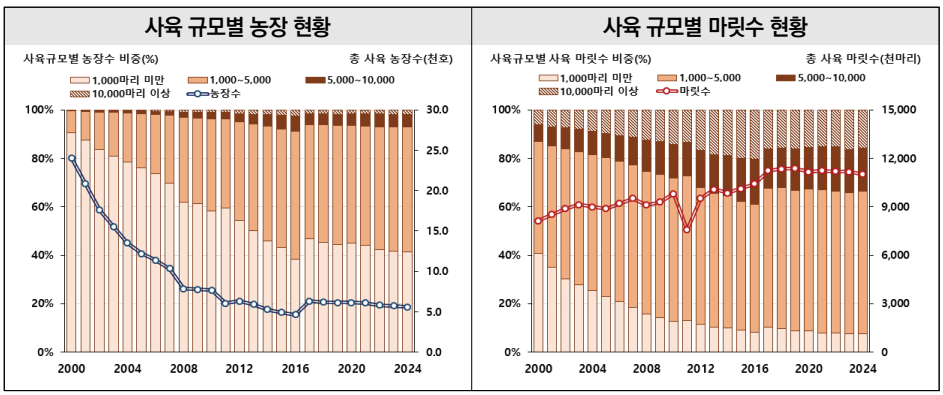
〈그림 2-5〉 돼지 사육 동향



주: 2017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육 구조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1천 마리 미만 농장의 수와 사육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장 수 기준으로 2000년에는 1천 마리 미만 농장이 약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재는 5천 마리 이상 및 1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농장이 전체 사육 마릿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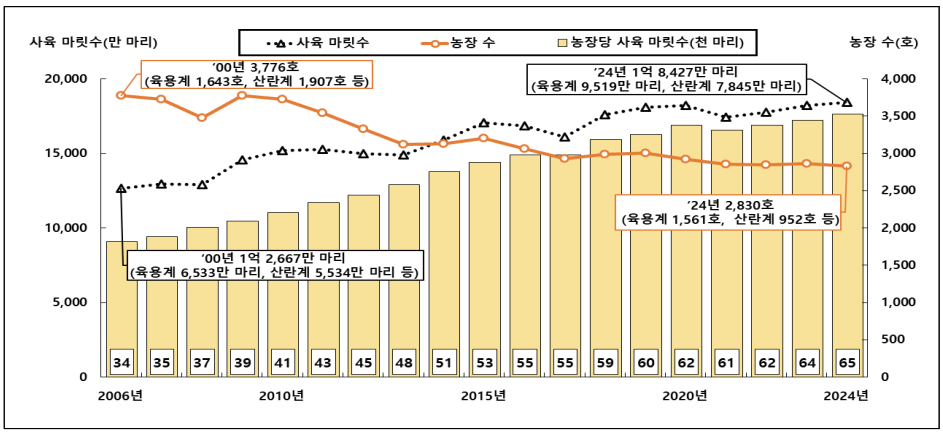
〈그림 2-6〉 돼지 사육 구조변화



주: 2017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닭 사육 마릿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1억 2,667만 마리(육용계 6,533만 마리, 산란계 5,534만 마리 등)에서 2024년에는 1억 8,427만 마리(육용계 9,519만 마리, 산란계 7,845만 마리 등)를 기록하였다. 사육 농장 수는 2000년 3,776호에서 2024년 2,830호(육용계 1,561호, 산란계 952호 등)로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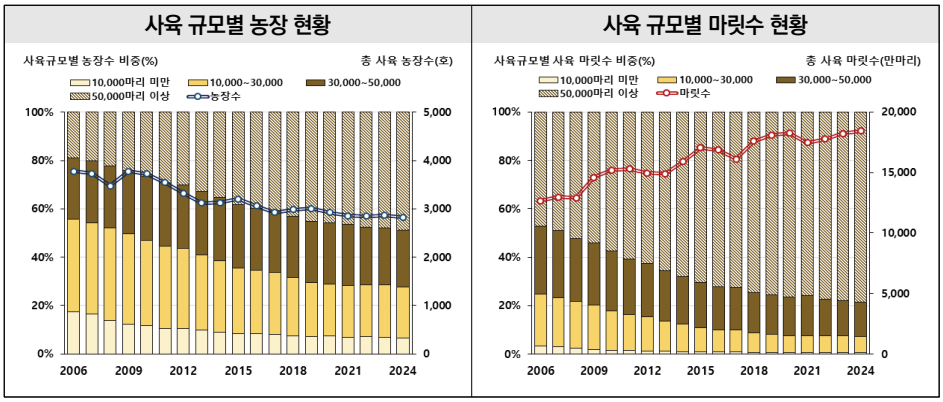
〈그림 2-7〉 닭 사육 동향



주: 닭 사육 농가는 육용계, 산란계, 종계 등 다수의 품종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농장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06년 기준 3만 4천 마리에서 2024년 6만 5천 마리까지 약 두 배가량 증가하며 규모화가 진전되었다. 사육 구조를 보면, 3만 마리 미만 농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5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이 전체 사육 마릿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산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림 2-8〉 닭 사육 구조변화



주: 2017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3.), 가축동향조사(각 분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축산농가 고령화 및 고용 현황

2.1. 농가 경영주 연령 및 고령화율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농가 경영주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66.4%에 달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70세 이상 경영주가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비교할 때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54.1%로, 논벼(71.1%), 채소(65.7%) 등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축산업이 다른 작목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와 자본 투자를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3〉 영농형태별 농가 경영주 연령

단위: %

구분		전체	논벼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30대 이하	0.1	0.0	0.1	0.1	0.1	0.2	0.1
	30~39세	0.5	0.3	0.6	0.5	0.5	1.4	0.3
	40~49세	3.3	2.8	2.8	3.4	3.8	6.0	3.3
	50~59세	14.2	12.5	14.4	13.6	16.8	19.0	14.8
	60~69세	34.2	30.0	35.2	36.1	38.4	44.1	34.1
	70세 이상	47.8	54.3	47.0	46.2	40.4	29.1	47.4
고령화율(65세 이상)		66.4	71.1	65.7	65.7	61.1	54.1	65.0

주: 기타는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5.), 농림어업조사.

현재 고령화율이 낮다는 표면적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화의 속도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연평균 4.8% 증가하여, 전체 농가 평균(2.8%)은 물론 모든 타 작목의 고령화 속도를 압도했다. 이는 현재의 상대적 젊음이 수년 내에 사라지고, 머지않아 타 분야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이다.

〈표 2-4〉 영농형태별 고령화율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전체	46.4	53.5	56.0	59.9	63.2	66.4	2.8
논벼	52.1	59.4	62.3	65.6	68.2	71.1	2.4
식량작물	50.0	54.5	55.5	60.3	61.7	65.7	2.1
채소	43.8	52.6	54.3	59.5	62.7	65.7	3.2
과수	40.7	47.7	49.7	53.1	57.6	61.1	3.2
축산	29.6	30.8	40.2	45.8	51.6	54.1	4.8
기타	37.8	47.1	51.0	56.2	60.8	65.0	4.3

주: 기타는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축산환경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축산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65.9%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의 평균 연령이 62.7세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비중이 크고 기계화가 용이한 젖소 농가가 59.7세로 가장 낮았다. 이는 축종별 노동 강도, 초기 투자 비용, 수익 구조의 차이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5〉 축산농가 농장주 성별 및 연령

단위: %, 세

구분		사례수	성별		연령					
			남자	여자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전체		(103,917)	88.1	11.9	3.8	9.0	21.3	65.9	100.0	62.3
축종	한·육우	(85,829)	88.2	11.8	3.5	8.5	20.8	67.2	100.0	62.7
	젖소	(5,663)	88.9	11.1	5.5	13.0	21.0	60.5	100.0	59.7
	돼지	(5,733)	89.0	11.0	5.8	11.4	26.1	56.6	100.0	60.2
	닭	(5,752)	86.0	14.0	4.8	9.9	22.9	62.4	100.0	61.6
	오리	(940)	86.9	13.1	5.4	8.3	28.0	58.3	100.0	61.1

자료: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축산업의 2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장기 경력자 비율은 77.6%로 논벼의 80.2% 다음으로 높아, 축산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자본을 요구하는 분야임을 시사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타 작목에 비해 전업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전체 농가 중 전업농 비율이 56.4%인데 반해, 축산농가는 67.4%가 전업농으로 월등히 높다.

〈표 2-6〉 영농형태별 경영주 농업 경력

단위: %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전체	3.1	8.7	10.3	6.0	71.9	100.0
논벼	2.8	6.1	7.0	3.9	80.2	100.0
식량작물	3.4	12.3	12.3	6.5	65.4	100.0
채소	3.1	10.8	11.5	6.3	68.3	100.0
과수	3.8	9.9	11.5	7.2	67.7	100.0
축산	2.1	5.7	7.9	6.7	77.6	100.0
기타	3.6	9.8	13.4	8.2	64.9	100.0

주: 기타는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5.), 농림어업조사.

축산농가의 평균 사육 경력은 24.5년이며,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가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축종별로는 젖소 농가의 평균 사육 경력이 26.7년으로 가장 길었고, 오리 농가가 15.6년으로 가장 짧았다.

〈표 2-7〉 축산농가 사육 경력

단위: %, 연

구분		사례수	사육 경력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합계	평균 경력
전체		(103,917)	5.6	7.4	23.5	24.1	39.5	100.0	24.5
축종	한·육우	(85,829)	5.8	6.9	23.7	23.6	40.0	100.0	24.7
	젖소	(5,663)	2.7	6.3	15.5	22.9	52.6	100.0	26.7
	돼지	(5,733)	4.5	8.8	20.0	28.4	38.1	100.0	23.9
	닭	(5,752)	6.4	14.3	25.8	26.9	26.6	100.0	20.2
	오리	(940)	5.5	9.4	51.5	26.4	7.1	100.0	15.6

자료: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건축물(97.5%)과 토지(97.2%)를 직접 소유하는 자가 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닭(19.7%)과 오리(33.5%) 농가에서는 위탁 경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계열화 사업의 영향력이 큰 가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

〈표 2-8〉 축산농가 경영 및 농장 소유 형태

단위: %, 연

구분		사례수	경영형태			소유형태						합계
						건축물			토지			
			자가	위탁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전체		(103,917)	97.3	2.6	0.1	97.5	1.9	0.6	97.2	2.1	0.7	100.0
축종	한·육우	(85,829)	99.1	0.8	0.1	98.6	1.0	0.5	98.3	1.1	0.6	100.0
	젖소	(5,663)	99.5	0.5	-	99.0	0.8	0.2	98.5	1.1	0.4	100.0
	돼지	(5,733)	89.7	10.1	0.2	94.4	4.8	0.8	94.5	4.7	0.8	100.0
	닭	(5,752)	80.1	19.7	0.3	91.0	8.0	1.0	90.0	8.8	1.3	100.0
	오리	(940)	66.5	33.5	-	97.1	1.5	1.4	94.9	3.0	2.1	100.0

자료: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2.2. 고용 현황

축산업의 노동 특성은 고용 구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축산농가의 28.0%가 고용인을 두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고용하는 비율이 7.9%로 타 작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가축 사육이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다.

〈표 2-9〉 영농형태별 고용 현황

단위: %

구분	고용이 없는 농가	고용이 있는 농가					합계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전체	68.8	31.2	24.5	4.8	0.9	1.1	100.0
논벼	69.5	30.5	27.7	2.4	0.3	0.1	100.0
식량작물	76.4	23.6	18.7	4.4	0.3	0.3	100.0
채소	69.0	31.0	20.7	6.2	2.2	2.1	100.0
과수	55.8	44.2	33.6	9.7	0.8	0.2	100.0
축산	72.0	28.0	15.2	4.0	1.1	7.9	100.0
기타	79.7	20.3	14.1	3.6	1.1	1.6	100.0

주: 기타는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검색일: 2025. 2. 5.), 농림어업조사.

2022년 기준 축산농가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16만 4,187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11.4%(1만 8,791명)를 차지했으며, 고용 형태별로는 상시근로자가 88.2%에 달했다. 이는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하며, 관련 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축종별로는 돼지 농가의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육우 농가는 가장 낮아 축종별 규모화 및 기계화 수준에 따라 고용 의존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0〉 축산농가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상시근로자			기간근로자			전체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전체		(103,917)	128,902	15,983	144,885	16,494	2,808	19,302	145,396	18,791	164,187
축종	한·육우	(85,829)	105,999	5,175	111,174	5,482	1,575	7,057	111,481	6,750	118,231
	젖소	(5,663)	6,672	1,212	7,884	10,038	310	10,348	16,710	1,522	18,232
	돼지	(5,733)	7,716	6,532	14,248	547	590	1,137	8,263	7,122	15,385
	닭	(5,752)	7,481	2,850	10,331	402	318	720	7,883	3,168	11,051
	오리	(940)	1,034	214	1,248	25	15	40	1,059	229	1,288

자료: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3. 축사 관련 규제·정책 현황 및 법률 검토

3.1. 폐업 축사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농가 고령화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축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은 폐업 축사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우선, 축산업 농가는「축산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을 지속하면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폐업으로 인해 축사가 위치한 농지를 본래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역시「농지법」에 따라 처분 의무 대상이 된다. 단, 이는 축사부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해당한다.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에 축사 건축이 허용되었다.

한편,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난, 사료 가격 상승과 같은 경영 악화, 인근 지역 거주자의 민원 등의 원인으로 인해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폐업이 증가하고, 폐축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치된 폐축사는 농촌 경관을 해치고 잠재적인 환경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초기 건축 비용과 복잡한 행정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신축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폐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과 복잡한 법적 문제로 실제 거래나 임대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축사은행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은퇴 농가 등으로부터 유휴 축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농협 주도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농협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농지법」의 한계에 부딪혔다. 현재는 농지와 축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문한필 외, 2023). 다만,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구체적인 사업모델 설계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3.2. 가축사육제한 구역

축사 신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표 2-11>과 같이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축사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표 2-11〉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가축사육 제한구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1.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 필요지역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지역(「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설정 필요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자료: 정민국 외(2021).

사육제한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권고안, 정부합동 권고안, 지자체 조례가 있지만, 권고안과 조례의 차이가 있고, 사육제한이 가장 엄격한 지자체 조례가 실질적인 사육제한의 기준이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점이고, 악취 민원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표 2-1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육 제한 거리

축종	환경부 권고안 (2011. 9.)	지자체 조례 현황 (괄호는 중간값, 2015. 3.)	정부 합동 권고안 (규모 고려, 2015. 3.)	
한육우	100m	60~500m (200m)	400두 미만	50m
			400두 이상	70m
젖소	250m	100~1,000m (250m)	400두 미만	75m
			400두 이상	110m
돼지	500m	50~2,000m (500m)	1,000두 미만	400m
			1,000~3,000두 미만	700m
			3,000두 이상	1,000m
닭·오리	500m	200~2,000m (500m)	2만 수 미만	250m
			2만~5만 수 미만	450m
			5만 수 이상	650m

주: 환경부 권고안의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최소단위는 5~10호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제한구역 내 예외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소·돼지는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임.

자료: 환경부(2015),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정민국 외(재인용)(2021),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아래 <표 2-13>은 2024년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로, 양돈농장의 평균 거리 제한은 1,451m에 달해 정부 권고안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전북은 평균 2,000m, 강원은 1,927m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

〈표 2-13〉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24년 8월 기준)

구분	민가수 기준 (호)	주거밀집 지역기준(m)	거리제한(m)				
			돼지	소	젖소	육계	산란계
경기	5.38	50	1,191	505	561	1,092	1,125
강원	6.15	66	1,927	165	475	1,377	1,455
충북	5.62	56	1,513	712	733	1,288	1,288
충남	5.18	91	1,631	768	815	1,631	1,631
전북	5.00	97	2,000	577	591	1,109	1,109
전남	5.38	164	1,786	373	457	1,079	1,078
경북	5.00	54	1,078	502	691	1,036	1,067
경남	5.25	70	977	262	353	863	863
제주			1,000	200	200	1,000	1,000
평균	5.38	82	1,451	466	571	1,152	1,170

자료: 대한한돈협회(2024),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더욱이 아래 <표 2-14>와 같이 강원과 전남 각 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에서는 거리 제한과 별도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조례까지 운영하고 있어 신규 축사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파편화와 강화 추세는 축산업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표 2-14〉 주민 동의서 요구 조례 시군 현황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수	1	3	0	1	1	3	1	0	0	10

자료: 대한한돈협회(2024),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3.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축산업은 가축분뇨 배출로 인해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축산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환경 규제 중 하나다. 이 제도는 특정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허용총량)을 정한 뒤,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수질오염 우려가 큰 수계의 유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오염부하량 할당 및 저감 계획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 시·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아래의 추진 절차 그림에서 보듯, 환경부, 환경청, 시·도, 시·군이 연계된 다층적 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 개발과 수질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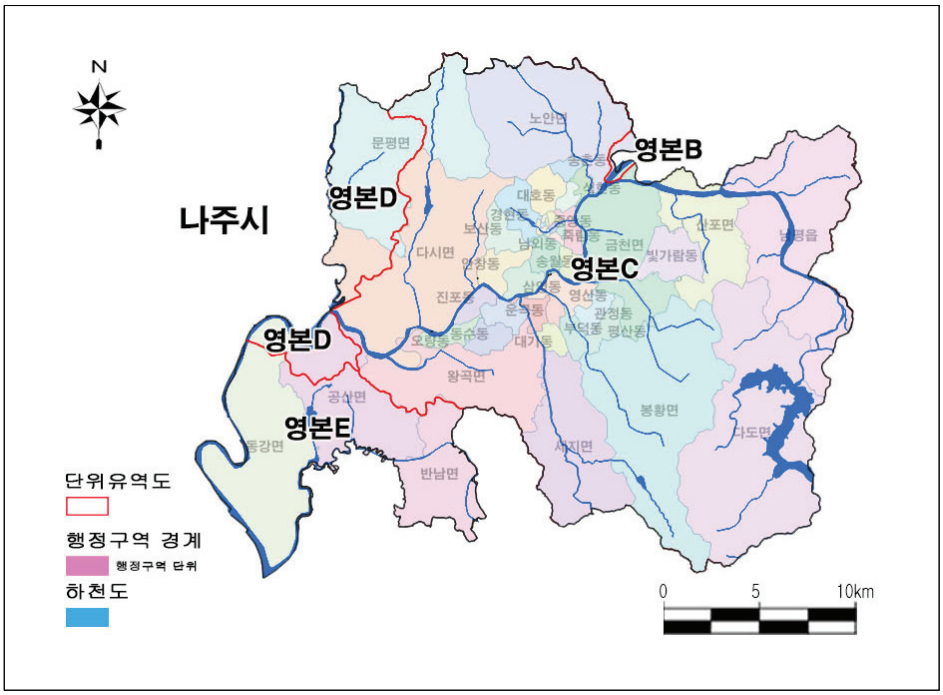
〈그림 2-9〉 물환경보전법 시행 추진 절차

목표수질 설정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시행계획 이행평가
장관·시도지사		장관		(수립) 시·도지사 (승인) 장관		(수립) 시장·군수 (승인) 도지사·환경청		(수립) 시장·군수 (검토평가) 환경청

자료: 환경부(검색일: 2025. 4. 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일반 현황.

아래의 <그림 2-10> 나주시 총량관리단위유역도 예시와 같은 지도는 수립된 계획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정 유역을 단위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2-10〉 나주시 총량관리단위유역도 예시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

3.4. 축산 승계 관련 정책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농지, 축사 등 영농 관련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다. 1979년 1,200만 원 한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농업 규모 확대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꾸준히 한도가 상향되어, 2023년에는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래 <표 2-15>와 같이 2023년 영농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691건, 공제금액은 4,017억 원에 달해 제도의 활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5〉 2019~2023년 영농상속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영농상속			
	과세		과세미달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9년	186	98,057	101	61,277
2020년	233	106,832	163	84,683
2021년	305	164,286	178	118,544
2022년	334	186,041	167	91,685
2023년	451	250,706	240	150,997

자료: 국세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2024년 국세통계연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 역시 18세 이상으로서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제 대상 재산에는 농지, 초지, 산림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와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승계에는 숨겨진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바로 무허가 축사 문제다. 현행 「축산법」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의 승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축사가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상태라면, 아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합법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영농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덜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업권 자체를 승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는 가치를 상실한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5.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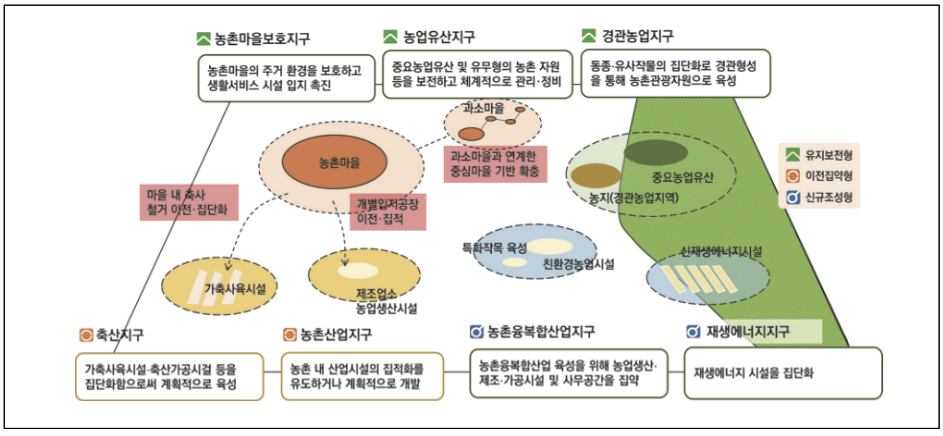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촌은 저출생·고령화, 대도시의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위기로 인해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빈집, 노후 주택, 기초적인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농촌에서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다지역 거주 확산 등으로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농촌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농촌 관련 계획들은 공간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단위의 장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농촌의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 개념은 농촌의 재구조화와 재생이다. 농촌의 재구조화는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함께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이용 및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 공간의 재생은 일자리, 경제 기반 창출, 주거·정주 환경 정비,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농촌공간계획은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농촌의 공간 구조와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전략 계획이자 하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본방침, 시·군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단위의 5년 단위 계획인 시행계획으로 구분된다.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특화지구는 시행계획과 주민의 제안을 통해 지정되며 성격에 따라 유지보전형, 이전집약형, 신규조성형 등으로 분류된다. 유지보전형은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서비스 시설 입지를 촉진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중요 농업유산 등을 보전·정비하는 농업유산지구, 유사 작물 집단화로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농업지구 등으로 나뉜다. 이전집약형에는 가축 사육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육성하는 축산지구와 농촌 내 산업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농촌산업지구 등이 있다. 신규조성형에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및 사무 공간을 집약하는 농촌융합복합산업지구와 재생 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한 재생에너지지구 등이 있다.

〈그림 2-11〉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 연구; 성주인 외(재인용)(2024),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방안 연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촌 정비 사업으로,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이전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촌 재생을 목적으로 하며,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철거한 공간은 지역 주민 대상 생활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며, 마을 안길·하천 복원, 담장·주택 정비, 마을 숲·완충 녹지 조성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9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누계 기준으로 2021년 4개소에서 2024년 92개소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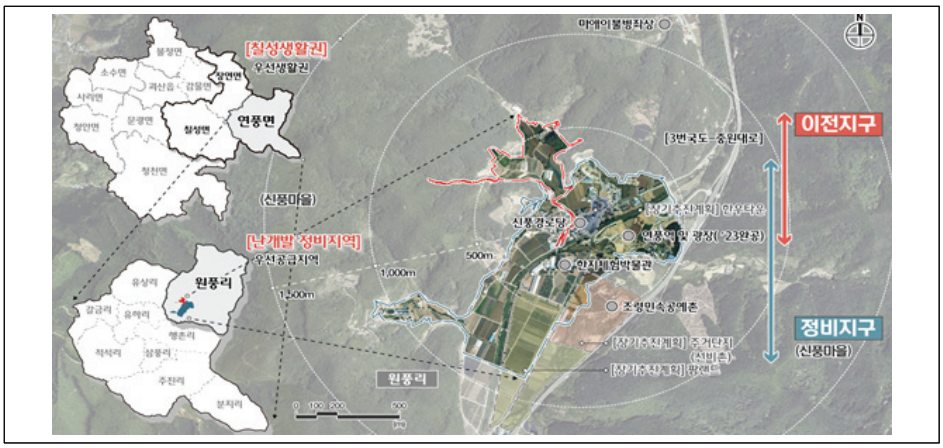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로 괴산군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동안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정비지구에 54억 원을 투입하여 축사 19개소(철거 11, 이전 8)와 장기 방치 건물 3개소를 정비하고, 이전지구에 47억 원(자부담 45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 시설(8개소)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 등을 하며, 재생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마을 공원, 마을 숲 등을 조성한다.

〈표 2-16〉 괴산군 신풍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구분	정비지구	이전지구	재생사업
사업비	54억 원	47억 원(자부담 45억 원) * 부지매입 15, 시설건축 등 30	39억 원
세부 내용	축사 19개소(철거 11, 이전 8), 장기방치건물 3개소	축산시설(8개소) 부지 * 매입 및 기반 조성 * 도로, 주차장 등 공용부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마을숲, 진입도로, 마을안길·담장정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7. 22.),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그림 2-12〉 괴산군 신풍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7. 22.),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또 다른 사례인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126억 4,400만 원 규모(정비사업 92억 8,200만 원, 재생사업 21억 6,600만 원)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사 4개소, 폐축사 7개소, 폐창고 2개소 등 총 13개소를 정비 및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민 운동 시설, 마을 숲, 공동 나눔 텃밭,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림 2-13〉 합천군 웅기지구 농촌정비사업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2. 4.), “농촌마을 12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

축산업 측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보면, 이 법은 이전집약형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의 집단화와 이전을 통한 공간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축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축산 시설의 이전은 방역 체계, 악취 및 환경 민원, 사료 및 물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축산업이 대규모 자본 투자를 수반하므로 개별 농가의 이전에 대한 보상 체계, 세제 지원 등과 더불어 장기적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폐축사는 철거 후 해당 공간을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폐축사의 철거는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와의 협의 절차, 보상 기준, 활용 계획 수립 등 농가 참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부족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철거 이후 부지 소유권 유지 여부, 지자체의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등 법적·제도적 해석 및 명확한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자발적 정비 유인을 위한 세제 감면, 이전 비용 보조 등 인센티브 정책이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연계가 부족하므로, 농가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하여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3.6. 축산업 인력 유입 촉진 정책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단계에서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지나 고가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전업적 영농 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표 2-17〉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 차	지원 2년 차	지원 3년 차
독립경영 1년 차	110만 원 (12개월)	100만 원 (12개월)	90만 원 (12개월)
독립경영 2년 차	100만 원 (12개월)	90만 원 (12개월)	-
독립경영 3년 차	90만 원 (12개월)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음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장년층으로, 영농 활동 경력이 10년 이하이거나 영농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며,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세대 당 최대 5억 원의 창업 자금을 연 1.5%의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초기 자본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되었다. 융자금은 농지 및 시설의 구입·임차,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농신보 우대보증,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연계 지원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영농 초기의 극심한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외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은 청년농의 생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2024년 11월, 2025년 2월 두 차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외근로 제한을 삭제하고 영농활동 증명 방식으로 유연화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경우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에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융자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영농 경험

과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융자금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청년 농업인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위험이 있다.

3.7. 외국의 청년농 진입 촉진 정책

3.7.1. 미국

미국은 신규 축산 농가를 포함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포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농무부 산하 농업서비스국(FSA)이 있으며, FSA는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대출과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대출 프로그램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운영자금 대출'은 가축, 사료, 장비 구매와 같은 즉각적인 운영비는 물론 농가 가족의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장 소유 자금 대출은 농장이나 목장의 구매 및 확장, 축사 등 신규 건물 건설, 토양 및 수자원 보존과 같이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자본 투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신규 진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제도가 발달해 있다. 마이크로론은 소규모 농장이나 비전통적 농장, 초보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액 자금을 지원하며, 실제 집행액의 70%가 초보 농업인에게 지원될 만큼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또한 FSA는 초보 농축산업자 대출을 위해 전체 대출 자금의 일부를 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이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전용 자원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다. 만약 농업인이 상업 대출 기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FSA가 보증하는 보증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위험을 낮춰 자격 미달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도 신용을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직접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출 외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프로그램도 농가 지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초보 농축산업자 개발 프로그램(BFRDP)은 신규 농업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이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며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대학, NGO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규 농업인 육성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도모한다.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VAPG)은 농산물을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이를 가공(예: 치즈 제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농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 잠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간 영역에서는 펀드-어-파머 보조금(FACT)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축산 관행을 지원하기도 한다.

농지 확보는 신규 진입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므로, 토지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TIP)은 기존에 보존 프로그램(CRP)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만료될 때, 해당 토지 소유주가 이를 초보 농업인, 퇴역 군인 농업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토지 유동성을 촉진한다. 또한 계약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초보 농업인 등이 농장 구매 시 필요한 계약금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며, FSA가 압류 등으로 직접 소유하게 된 농경지 매물이 나올 경우 초보 농업인에게 감정가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위험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축 총이익 보험(LGM) 및 가축 위험 보호 보험(LRP)은 시장 가격 변동이나 이익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연방 작물 보험 상품이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료 작물이나 방목지의 경우,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NAP)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나 재고 손실 발생 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가축, 꿀벌 및 양식 어류 긴급 지원(ELAP)은 사료나 물 부족, 가축 질병 등 LRP나 NAP로 보장되지 않는 특수한 악천후나 기타 조건으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며, 가축 손실 보상 프로그램(LIP)은 악천후나 연방 정부가 재도입한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정상 폐사율을 초과하는 가축 폐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한다. 가뭄이나 화재로 인한 방목 손실은 가축 사료 재해 프로그램(LFP)이, 재해 복구 자금은 긴급 대출이 담당한다.

3.7.2. EU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이라는 거대한 정책 틀 안에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교체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한다. 특히 2023~2027년 기간의 CAP는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고 농촌 지역의 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대 37만 7천 명에서 38만 명에 이르는 청년 농업인의 신규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의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각 회원국은 EU 차원의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최대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연령 제한, 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농장 경영주로서의 지위, 그리고 적절한 교육 이수나 기술 보유 여부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모든 회원국은 이렇게 정의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별 직접 지불 예산의 최소 3%를 배정해야만 한다.

청년 농업인 지원은 크게 두 개의 축을 통해 제공된다. 제1축은 직접 지불금 형태의 소득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보충 소득 지원(CISYF)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본 소득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이 농장을 처음 설립할 때 강화된 소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적격 헥타르 당 연간 지불금 또는 연간 일시불 형태로 최대 5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2축은 유럽 농업 농촌 개발 기금(EAFRD)을 활용한 농촌 개발 중재다. 제2축 지원은 제1축의 직접 지불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촌 사업체에 즉각적인 창업 자금을 제공하는 정착 지원금(보조금)이 포함되며, 청년 농업인이 축사 건설, 농장 현대화, 장비 구매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일반 농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투자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사업 계획 개발이나 혁신적 관행 도입을 돕는 자문 서비스 및 교육, 원활한 농장 승계와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협력 계획 등도 제2축 기금으로 운영된다.

초기 자본 조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럽 투자 은행(EIB) 그룹 또한 EAFRD와 긴밀히 협력한다. EIB는 10억 유로 규모의 전용 대출 시설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EAFRD의 창업 보조금 등은 이러한 EIB의 금융 상품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율 보조 또는 기술 지원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EU의 공동 정책 틀은 각 회원국의 실정에 맞춘 국가별 CAP 전략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 프랑스는 제1축의 보충 소득 지원(ACJA)으로 연간 약 4,469유로를 5년간 지원하고, 제2축의 정착 지원금(DJA)을 지역별로 관리한다. 독일은 최대 120헥타르까지 헥타르당 약 134유로의 소득 지원을 5년간 제공하며, 고산 목초지 방목에 대한 프리미엄 등 연계 지원을 병행한다.

아일랜드는 TAMS III 계획 하의 청년 농업인 자본 투자 계획(YFCIS)을 통해, 축사, 슬러리 저장 시설, 가축 처리 장비, 목초지 관리 기계 등 적격 투자 항목에 대해 최대 9만 유로 한도 내에서 60%의 높은 보조율을 적용한다. 스페인은 기본 소득 지원금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청년 여성 농업인에게는 15%를 추가로 지원하고, 정착 지원(primera instalación) 및 투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자당 최대 8만 유로를 지원하되, 기후, 자연, 수질 등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5개년 사업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다. 폴란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20만 즈워티(PLN)의 일시불 보조금을 70%와 30%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이 자금은 건축, 토지, 동물, 기계 구매 등 창업에 필요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3.7.3. 일본

일본의 축산업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육용우, 양돈, 낙농, 양계 등 거의 모든 축종에서 경영체 수가 2010년 대비 40% 안팎으로 급감하며 전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영체

당 사육 두수는 크게 늘어나(특히 양계 90.2%, 양돈 72.5% 증가), 산업 전반의 규모화와 집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판매 금액 기준으로도 이러한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나는데, 낙농의 경우 연 매출 5억 엔 이상의 대규모 경영체는 159.1% 나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소규모 경영체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일본 축산업이 소수의 대규모 농가와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 양분되고 중간 규모 농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신규 취농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진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49세 이하의 예비 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자금을 교부한다. 취농준비자금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연수생에게 최장 2년간 월 12만 5천 엔(연 15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등이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간 1,20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전년도 세대 소득이 원칙적으로 600만 엔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수 단계를 거쳐 실제 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경영개시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독립·자영 취농을 하는 49세 이하의 신규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동일하게 월 12만 5천 엔(연 150만 엔)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 자금은 경영 개시 5년 후까지 농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중간관리기구로부터 농지를 차입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갖춰야 한다. 경영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기존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처를 하고 신규 진입자와 동등한 경영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점을 시정촌장(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 정착 이후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발전지원사업을 통해 기계·시설 도입을 지원한다. 이는 49세 이하의 인정 신규 취농자가 초기 투자를 할 때, 도도부현이 지원하는 금액의 2배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매칭)하는 방식이다. 국비 보조 상한액은 500만 엔(단, 경영개시자금 교부 대상자는 250만 엔)이며, 지원 조건으로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부모 농

장의 취농을 포함하여 원활한 경영 승계를 돕는 세대교부원활화 유형과 신규 취농자의 초기 투자를 돕는 초기투자촉진 유형으로 나뉜다.

독립·자영 취농뿐만 아니라 농업 법인 등에 취업하는 고용 취농을 통한 인력 유입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취농자금은 49세 이하의 취농 희망자를 새롭게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농업법인 등에 최장 4년간 연 최대 60만 엔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규 고용 취농자는 과거 농업 취업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직원을 타 업종 법인이나 선진 농업법인에 파견하여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하는 연수를 지원하거나(월 최대 10만 엔), 새로운 법인 설립(독립)을 전제로 인력을 고용하여 연수하는 경우(연 최대 120만 엔)도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체제강화사업을 통해 농업법인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작업 공정을 검토하는 등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대처를 지원하고(최대 2천만 엔), 농번기가 다른 타산지 및 타 산업 간 노동력 연계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도 지원한다.

일본 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한 전문 정책자금 융자도 신규 진입자에게 중요한 자금원이다. 청년 등 취농 자금은 신규 취농자가 가축 구입비나 육성비가 필요할 때, 최대 3,700만 엔까지 17년 상환(거치기간 5년) 조건으로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경영체 육성 강화자금은 인정 신규 취농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 구입 같은 긍정적 투자 외에도 기존 부채를 정리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건 정비나 상환 원활화 자금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개인 1억 5천만 엔, 법인 5억 엔까지 한도가 높으며 2.0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된다. 낙농 경영지원종합대책은 중소 낙농장의 생산 기반(연결 우사 개량 등), 사육환경 개선(더위 대책, 백신 지원), 그리고 낙농 도우미(헬퍼)의 인재 확보 및 이용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양돈 경영안정 대책은 우량 순수 종돈 도입(1두당 10만~40만 엔)이나 고품질 정액 구입(1본당 1만 엔)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축사 등 경영 자산의 승계 및 이양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경영계승 발전 지원 사업은 선대 사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이양받은 후계자가 경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이행할 경우, 관련 경비의 절반(최대 100만 엔)을 지원한다. 신규 취농자

확보 긴급 원활화 대책의 세대교대 원활화 유형은 경영 승계 시 농업용 기계·시설의 수선·이설·철거 비용이나 법인화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 대책은 농업대학이나 농업고등학교가 스마트농업 교육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기농업 전공을 신설하고 유기 JAS 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등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환경 정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정비 등 특별대책사업(축산클러스터 사업)은 지역별로 수립된 축산클러스터 계획에 따라 수익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 정비나 기계 도입을 지원하는 대규모 구조 개선 사업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 취농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업에는 중심 경영체의 시설 정비, 기계 도입, 고령의 번식용 암소를 증체나 육질이 우수한 젊은 번식용 암소로 교체하는 사업, 그리고 축산 경영의 생력화를 위한 ICT 관련 기계 도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스마트축산 현황

4.1. 스마트축산 도입 현황

스마트축산 보급 현황을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스마트팜은 5,444건이 보급되어 있으며, 이 중 축산 분야가 2,973농가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여 시설원예(39.7%, 2,163농가)나 노지작물(5.6%, 308농가)보다 도입 농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축산 분야의 기술 수용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표 2-18〉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

단위: 농가(%)

구분	시설원예	축산	노지작물		합계
			과수	채소	
보급 농가수	2,163	2,973	127	181	5,444
(%)	(39.7)	(54.6)	(2.3)	(3.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2023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축종별로 보급 현황을 세분화하면, 한우 농가가 1,738농가로 전체 축산 스마트농가 중 5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낙농이 565농가(19.0%), 양돈이 479농가(16.1%) 순으로 나타났다. 육계는 101농가(3.4%), 산란계는 81농가(2.7%)였으며, 기타는 9농가(0.3%)이다.

〈표 2-19〉 축종별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

단위: 농가(%)

품종	양돈	낙농	한우	육계	산란계	기타	전체
보급농가	479	565	1,738	101	81	9	2,973
(%)	(16.1)	(19.0)	(58.5)	(3.4)	(2.7)	(0.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2023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축종별 스마트축산 장비 보급률을 분석한 결과, 급이 시스템과 CCTV의 보급률이 다른 기계장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환경관리 관련 장비는 돼지, 육계, 산란계 사육농장의 형태인 폐쇄형 축사가 한우, 젖소 등 개방형 축사에 비해 보급률이 높았으며, 낙농 및 산란계 농가는 우유와 계란 생산을 위한 시스템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스마트축산은 현재 우리 축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화 및 원격 제어 기술을 통해 농업인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스마트축산은 축산업 인구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초기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부족, 생산비 상승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 대응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실증 연구를 통해 드러난 생산성 향상 수치들은 스마트축산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방어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축산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축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축산업을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래 <표 2-20>에 스마트축산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돈농장은 모돈 연간 이유두수를 향상시켜 30% 이상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낙농과 한우농장은 착유량을 증산하고, 등급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표 2-20〉 스마트축산 도입 효과

구분	축종	핵심 성과 지표	성과 데이터
로즈팜	양돈	PSY(모돈당 연간 이유두수) 생산비 절감(사료비)	29.0두(전국 평균 21.2두 대비 36.8% ↑) 마리당 6,600원 절감 (18.9% ↓)
초계양돈	양돈	PSY(모돈당 연간 이유두수)	28.0두(전국 상위 30% 평균 상회)
서부목장	낙농	1두당 일평균 착유량 노동력 절감	39kg(전국 평균 24.6kg 대비 58.5% ↑) 연간 3,000시간 절감
명월농장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83%(도입 전 45% 대비 38%p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3. 13.),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스마트축산 기술은 도입 목적과 기술 수준에 따라 발전 단계를 구분한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정교화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자율적으로 통합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데이터의 활용 정도가 곧 기술의 세대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인 셈이다.

1세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농장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축사 내외부에 설치된 CCTV와 온·습도 등 환경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환풍기나 사료급이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준이다. 데이터는 주로 현황 파악과 단순 제어에 사용되며, 보고 제어하는 단계에 머무른다. 현재 국내 스마트축산 보급 농가의 대다수가 이 1세대 수준에 해당한다.

2세대는 편의성을 넘어 생산성 향상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 가축의 목이나 귀, 위 속에 부착된 생체 센서를 통해 활동량, 반추 시간, 체온 등 개체별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정, 질병 징후 등을 조기에 감지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체별 맞춤형 정밀 사양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하는 단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로봇 착유기나 자동 사료급이기 등이 이 세대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3세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융합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지향한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최적의 사육 환경과 사양관리 모델을

도출하고, 농장주의 판단을 넘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로봇이 이를 실행한다. 이는 스마트축산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이다. 현재 국내 기술 연구는 2.5세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로봇 착유기, 인공지능형 사양관리 시스템 등이 개발·보급되며 3세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4.2.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은 2024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를 이루었다. 이 법은 ICT, 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실태조사, 기술개발과 보급, R&D 연계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조된다.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계획(2021),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2021),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2)과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2024) 등이 수립되어, 청년창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축사 및 노지 농업 확대, AI 기반 작물 관리, 수출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등 다층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직 농장, 데이터 기반 솔루션, 민간 거버넌스 강화 등 산업·기술·제도 전반에서 스마트농업을 농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축산 장비/기자재 보급뿐 아니라 스마트축산 육성지구 조성도 규정하고 있다. 육성지구는 가축사육업과 관련 산업을 집적시켜 스마트축산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4.3. 스마트축산 관련 예산 및 사업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 구분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2020년 3,006억 원에서 2024년 2,306억 원으로 연평균 6.4%씩 감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보급 및 확산 분야가 동기간 1,436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9.7% 감소하였고, 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1,185억 원에서 1,052억 원으로 2.9% 감소, 연구개발 예산은 385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3% 감소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중심 예산으로 2020년 438억 원에서 2024년 389억 원으로 연평균 2.7%씩 감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168억 원),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7억 9,380만 원), 노지 디지털 농업 기술 고도화(7억 4,750만 원) 등이 있다.

스마트농업 정책운영 구조는 기존 스마트농업정책과에서 전반을 담당하던 체계에서 경종과 축산이 분리되어, 스마트축산 분야는 축산정책과로 이관되었다. 축산정책과는 스마트축산 농가 보급,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집적지구(육성지구, 거점 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담당하며, 스마트농업의 공통 분야와 인프라 관련 업무는 스마트농업정책과에 잔류하였다. 대표적인 스마트축산 관련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스마트축산 전문교육 위탁기관 지원,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마트축산 수출 지원, 스마트축산 집적 단지 조성 등이 있다.

스마트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스마트축산 장비 및 시설, 운영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지원 장비 및 솔루션은 가축 건강·생체정보 관리 및 개량을 위한 개체관리 장비(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식별 장치, 가축 생체정보 수집 장치 등), 축사 내외부 환경 정보 수집 및 CCTV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환경관리 장비(온도, 습도, 정전, 화재, 풍향, 풍속 정보 수집 장치 등), 사양관리 장비(사료빈 관리기, 출하돈 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 급수기), 악취·방역 장비(악취 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그리고 축산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을

위한 스마트 장비 연계 운영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인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표 2-21>에 표시하였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0년 960억 원에서 2025년 448억 2,1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고는 360억 원에서 168억 800만 원으로, 융자는 600억 원에서 280억 1,300만 원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표 2-21〉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69,000	56,952	44,821
국 고	36,000	25,200	29,400	25,875	21,357	16,808
융 자	60,000	42,000	49,000	43,125	35,595	28,013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24),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시행지침.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는 AI 기술 및 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및 알고리즘 발굴을 통해 축산업 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상용화 기술사례와 알고리즘 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대회의 주제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이며,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이 현장 문제의 예시로 제시된다. 2025년에 개최된 제3회 대회에서는 AI 카메라와 열화상 센서를 활용하여 송아지 폐사율을 30% 감소시킨 한우 분야의 솔루션이 상용화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축산 전문교육 위탁기관 지원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며, 축산 분야는 연암대학교가, 시설원예는 순천대학교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스마트축산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축산 관련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 운영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며, 2023년부터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축산 데이터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축산 수출 지원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국내 업체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수출 지원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스마트축산 수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제안, 유망 수출기업 발굴, 국가별 수출 정보 제공,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 실증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4.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정부는 2014년부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축산 보급을 지원해 왔다. 이들 사업은 주로 보조금(국고 30%)과 융자(50%)를 통해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업 평가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업이 부처별, 목적별로 분절되어 통합 솔루션이 아닌 개별 장비 단위 지원이 많고, 설치 이후 활용도나 성과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고가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 지원이 하드웨어 구매 비용에 집중되면서 농가와 공급업체 모두 초기 설치에만 관심을 갖는 유인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세대 스마트축산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교육 등 장기적 운영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보조금 제도가 의도와 달리 1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 무게중심을 장비 설치 지원에서 성과 창출 지원으로, 데이터 기반 운영 서비스와 컨설팅 지원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예산 또한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2〉 축종별·세대별 스마트축산 기술 보급률

축종	총 보급률 (%)	1세대 보급률 (%)	2세대 보급률 (%)	주요 1세대 기술	주요 2세대 기술
양돈	41.5	35.3	6.2	자동 급이/급수기, 환경제어	AI 기반 개체관리, 데이터 분석 설루션
낙농	47.5	40.4	7.1	자동 착유기, 발정 탐지기	로봇 착유, 생체 데이터 분석
양계	34.0	28.9	5.1	자동 집란기, 환경제어	AI 기반 질병 예찰, 사양관리 최적화
한우/육우	22.9	19.5	3.4	CCTV 모니터링, 자동 급수기	생체 센서, 번식 관리 솔루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3. 13.),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장

축산농가 및 신규 진입 농가 설문조사

제3장

축산농가 및 신규 진입 농가 설문조사

1. 축산농가 설문조사

1.1.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국내 축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인식, 경영 및 인력구조, 후계승계 계획, 스마트축산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농업관측센터 표본 중 전국 501개 축산농가로부터 응답을 수집했다. 설문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① 농가 일반 현황, ② 경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 경험, ③ 인력 구성 및 수급, ④ 고령화와 후계 승계, ⑤ 스마트축산 도입 및 계획, ⑥ 정책 지원 인식 및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표 3-1〉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농업관측센터 축산농가 표본 501개 농가
조사 기간	2025. 9. 12 ~2025. 10. 2.(약 3주)
조사 내용	• 농가 현황: 성별, 연령, 종사 기간, 사육 축종·규모, 경영 형태, 매출, 인증 여부 • 경영 애로: 생산비 상승, 가격 불안정, 인력난, 규제, 민원 경험 • 인력구조: 가족·내국인·외국인 인력 현황, 수급 경로, 부족 영향 • 고령화·승계: 은퇴 계획, 후계자 유무·특성, 승계 애로, 부재 사유 • 스마트축산: ICT 도입 현황·계획, 도입 장애, 향후 운영 계획 • 정책 수요: 정책 인지도·이용 경험, 필요 정책, 축사은행·축산지구 필요성, 저탄소 인증 의향 및 지원 요구

자료: 저자 작성.

축종별 표본수는 한육우 251개 농가,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농가는 각각 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응답수는 501개 농가였다. 한우의 응답수 비중이 50.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축종은 각각 10.0%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3-2〉 축종별 설문조사 대상

단위: 농가(%)

구분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계
응답수	251	50	50	50	50	50	501
(%)	50.1	10.0	10.0	10.0	10.0	10.0	100.0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평균 연령은 63.4세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한우 사육 농가의 평균 연령(66.2세)이 가장 높았으며, 젖소 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 주요 축종별 농장주 연령

단위: %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세)
전체	(501)	0.6	4.2	11.6	10.8	34.1	38.7	63.4
한우	(251)	0.4	2.4	9.6	6.8	33.5	47.4	66.2
젖소	(50)	0.0	8.0	20.0	16.0	38.0	18.0	57.5
돼지	(50)	2.0	8.0	12.0	20.0	42.0	16.0	59.0
육계	(50)	0.0	8.0	8.0	10.0	36.0	38.0	63.0
산란계	(50)	0.0	6.0	20.0	12.0	24.0	38.0	60.2
오리	(50)	2.0	0.0	8.0	16.0	34.0	40.0	63.0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평균 종사 기간은 29.4년으로, 30년 이상 종사한 농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한우 농가는 평균 종사 기간이 32.5년으로 가장 길었고, 오리 농가는 21.3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표 3-4〉 주요 축종별 축산업 종사 기간

단위: %

구분	사례수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 (연)
전체	(501)	7.8	15.4	15.8	25.9	25.9	9.2	29.44
한우	(251)	7.2	8.8	13.5	25.1	30.7	14.7	32.53
젖소	(50)	10.0	20.0	12.0	30.0	24.0	4.0	26.92
돼지	(50)	4.0	16.0	14.0	38.0	24.0	4.0	29.42
육계	(50)	12.0	24.0	12.0	26.0	26.0	0.0	25.36
산란계	(50)	8.0	22.0	12.0	24.0	26.0	8.0	28.70
오리	(50)	8.0	28.0	40.0	16.0	6.0	2.0	21.32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1.2. 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평균 사육 규모는 축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육우는 평균 121두, 젖소는 125두 수준이었으며, 돼지는 5,640두, 육계는 8만 6,290수, 산란계는 12만 7,930수, 오리는 2만 6,740수로 나타났다. 농장 형태별로 보면 한육우, 돼지, 산란계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축종별 농가 평균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사례수		(251)	(50)	(50)	(50)	(50)	(50)
평균 사육마릿수		121.0	124.9	5,640.0	86,290.0	127,930.0	26,74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275.0	-	19,216.7	-	756,666.7	20,000.0
	개인/가족농	119.7	124.9	3,788.6	86,290.0	87,797.9	26,877.6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절반 가까이(48.7%)가 사료·유류비 등 생산비 급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농가에서 생산비 부담(79.7%)이 높게 나타났으며, 젖소와 돼지·산란계 농가는 환경 규제(각각 44.0%, 38.0%, 32.0%)를, 육계·오리 농가는 가축 질병 및 방역 규제(30.0% 내외)를 상대적으로 큰 애로로 꼽았다.

〈표 3-6〉 주요 축종별 경영 애로사항

단위: 농가(%)

구분	사례수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사례수	(501)	(251)	(50)	(50)	(50)	(50)	(50)
사료, 유류비 등 생산비 급등	48.7	79.7	30.0	12.0	24.0	12.0	10.0
환경 규제 강화 (부숙도 등)	16.6	3.2	44.0	38.0	14.0	32.0	22.0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규제	12.4	4.8	2.0	16.0	30.0	22.0	30.0
불안정한 축산물 가격 및 낮은 수익성	8.2	8.0	8.0	2.0	14.0	16.0	2.0
축사 신축/증축 및 시설 현대화의 어려움	4.8	1.2	0.0	0.0	6.0	6.0	30.0
기타	9.4	3.2	16.0	32.0	12.0	12.0	6.0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01명 중 20.4%가 민원 제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16.7건으로 나타났다. 사육 규모별(1~4분위)로 보면, 1분위(대규모)에서 평균 민원 건수가 가장 낮았고, 3~4분위(중소규모)로 갈수록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규모 농장은 시설·환경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반면, 중소규모 농장은 주거지 인접·분뇨 처리 한계 등으로 민원 노출이 높기 때문으로 보였다.

〈표 3-7〉 주요 축종별 민원 제기 경험 여부 및 평균 건수

단위: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평균(건)	규모별			
					1분위(건)	2분위(건)	3분위(건)	4분위(건)
전체	(501)	20.4	79.6	16.7	10.6	15.1	29.3	15.7
한우	(251)	8.0	92.0	3.7	5.1	4.0	1.0	1.2
젖소	(50)	38.0	62.0	11.8	7.5	10.0	7.6	18.9
돼지	(50)	74.0	26.0	20.3	6.5	14.4	33.7	27.0
육계	(50)	12.0	88.0	9.2	10.0	5.0	0.0	10.0
산란계	(50)	30.0	70.0	31.9	50.7	30.0	45.0	4.0
오리	(50)	10.0	90.0	23.2	5.0	1.0	52.5	5.0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축산 악취 문제'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3.9%), 소음 문제(2.9%), 축사·시설 관련 문제(1.0%)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3-8〉 주요 축종별 민원 제기 원인

단위: %

구분	사례수	축산 악취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소음 문제	축사 및 축산 시설 관련 문제 (무허가 축사 등)	기타
전체	(501)	94.1	3.9	2.9	1.0	5.9
한우	(251)	80.0	5.0	10.0	5.0	5.0
젖소	(50)	94.7	5.3	0.0	0.0	21.1
돼지	(50)	97.3	2.7	2.7	0.0	0.0
육계	(50)	100.0	0.0	0.0	0.0	0.0
산란계	(50)	100.0	0.0	0.0	0.0	6.7
오리	(50)	100.0	20.0	0.0	0.0	0.0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농가의 가족노동력은 본인·배우자·자녀 등 평균 1.94명이었으며, 이 중 상시근로자 평균 1.27명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가에서 가족노동력이 평균 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젖소 농가는 상시근로자 비중(1.60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가족노동력 규모가 평균 5.17명으로 개인·가족농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3-9〉 가족 노동력 구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본인/배우자/자녀/기타가족	본인/배우자/자녀/기타가족 중 상시근로
전체		(501)	1.94	1.27
축종별	한우	(251)	1.72	1.24
	젖소	(50)	2.30	1.60
	돼지	(50)	1.42	1.10
	육계	(50)	1.90	1.26
	산란계	(50)	3.44	1.20
	오리	(50)	1.78	1.34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5.17	0.75
	개인/가족농	(489)	1.86	1.28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농가에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는 평균 0.47명, 임시·일용직은 평균 0.0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돼지 농가(상시근로자 2.76명, 임시·일용직 0.24명)와 산란계 농가(상시근로자 1.68명, 임시·일용직 0.28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규모가 컸으며, 이를 제외한 타 축종은 고용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규모가 평균 12.75명으로 개인·가족농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3-10〉 내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월평균)
전체		(501)	0.47	0.07
축종별	한우	(251)	0.04	0.03
	젖소	(50)	0.04	0.02
	돼지	(50)	2.76	0.24
	육계	(50)	0.00	0.00
	산란계	(50)	1.68	0.28
	오리	(50)	0.00	0.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12.75	1.00
	개인/가족농	(489)	0.17	0.04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농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인력은 평균 0.78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숙련기능인력(E-7-4)이나 계절근로자 활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축종별로는 돼지 농가(3.50명)와 산란계 농가(3.32명)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젖소 농가도 평균 0.54명 수준이었다. 농업회사법인은 평균 6.67명의 E-9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개인·가족농(0.64명)보다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3-11〉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고용 허가제(E-9)	숙련기능인력 (E-7-4)	방문 취업(H-2)	계절 근로자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전체		(501)	0.78	0.00	0.01	0.00	0.05
축종별	한우	(251)	0.08	0.00	0.00	0.00	0.00
	젖소	(50)	0.54	0.00	0.00	0.00	0.06
	돼지	(50)	3.50	0.00	0.06	0.00	0.00
	육계	(50)	0.06	0.00	0.00	0.00	0.00
	산란계	(50)	3.32	0.00	0.00	0.00	0.42
	오리	(50)	0.02	0.00	0.00	0.00	0.02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6.67	0.00	0.00	0.00	0.75
	개인/가족농	(489)	0.64	0.00	0.01	0.00	0.03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타 축종에 비해 외국인 고용이 많은 돼지와 산란계 농가를 살펴보면, 사육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고용이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대부분 E-9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12〉 돼지, 산란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구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고용허가제 (E-9)	숙련기능인력 (E-7-4)	방문 취업(H-2)	계절 근로자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돼지	전체	(50)	3.50	0.00	0.06	0.00	0.00
	1분위	(16)	7.44	0.00	0.00	0.00	0.00
	2분위	(10)	2.90	0.00	0.20	0.00	0.00
	3분위	(11)	1.64	0.00	0.00	0.00	0.00
	4분위	(13)	0.69	0.00	0.08	0.00	0.00
산란계	전체	(50)	3.32	0.00	0.00	0.00	0.42
	1분위	(15)	6.60	0.00	0.00	0.00	0.87
	2분위	(11)	3.00	0.00	0.00	0.00	0.36
	3분위	(11)	1.55	0.00	0.00	0.00	0.36
	4분위	(13)	1.31	0.00	0.00	0.00	0.00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농가의 58.1%는 인력 구인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31.9%, '어렵다 이상'은 8.2%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돼지(26.0% 보통, 26.0% 이상 어렵다)와 산란계 농가(20.0% 어렵다)에서 상대적으로 구인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한우와 육계 농가는 인력 확보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회사법인은 33.3%가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해 개인·가족농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어렵다	매우 어렵다	5점 평균 (점)
전체		(501)	1.8	58.1	31.9	8.0	0.2	2.47
축종별	한우	(251)	1.2	62.5	33.5	2.8	0.0	2.38
	젖소	(50)	6.0	54.0	32.0	8.0	0.0	2.42
	돼지	(50)	4.0	44.0	26.0	24.0	2.0	2.76
	육계	(50)	0.0	70.0	26.0	4.0	0.0	2.34
	산란계	(50)	0.0	22.0	58.0	20.0	0.0	2.98
	오리	(50)	2.0	78.0	10.0	10.0	0.0	2.28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0.0	25.0	41.7	33.3	0.0	3.08
	개인/가족농	(489)	1.8	58.9	31.7	7.4	0.2	2.45
사육 규모	1분위	(138)	0.7	56.5	33.3	9.4	0.0	2.51
	2분위	(122)	0.8	62.3	30.3	5.7	0.8	2.43
	3분위	(123)	0.8	64.2	24.4	10.6	0.0	2.45
	4분위	(118)	5.1	49.2	39.8	5.9	0.0	2.47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돼지·산란계 농가는 규모가 클수록 인력 구인의 어려움이 심했지만, 이 외의 축종은 소규모 농가에서 인력 구인의 어려움이 심하거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타 축종에 비해 돼지와 산란계 농가에서 근로자 구인이 많으며, 대규모 농가일수록 필요 근로자가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3-14〉 축종별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정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축종별	한우	(251)	2.38	2.42	2.34	2.34	2.41
	젖소	(50)	2.42	2.44	2.55	2.31	2.40
	돼지	(50)	2.76	3.06	2.70	2.73	2.46
	육계	(50)	2.34	2.23	2.08	2.53	2.50
	산란계	(50)	2.98	3.00	3.18	2.82	2.92
	오리	(50)	2.28	2.15	2.29	2.42	2.27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 근로자는 주로 가족·친척·지인 소개(50.0%)와 구인 웹사이트(39.6%)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농가의 경우 가족·지인 소개(53.1%)와 구인 웹사이트(37.5%) 활용 비중이 높았으며, 산란계 농가는 구인 웹사이트 활용(50.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농업회사법인은 구인 웹사이트(66.7%)와 공공기관(11.1%)을 활용하는 비중이 개인·가족농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 내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중개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전체		(48)	50.0	39.6	8.3	2.1
축종별	한우	(3)	33.3	33.3	33.3	0.0
	젖소	(3)	66.7	33.3	0.0	0.0
	돼지	(32)	53.1	37.5	6.3	3.1
	산란계	(10)	40.0	50.0	10.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9)	22.2	66.7	0.0	11.1
	개인/가족농	(39)	56.4	33.3	10.3	0.0
사육 규모	1분위	(24)	41.7	45.8	8.3	4.2
	2분위	(6)	50.0	50.0	0.0	0.0
	3분위	(8)	62.5	37.5	0.0	0.0
	4분위	(10)	60.0	20.0	20.0	0.0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돼지와 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돼지 농장은 규모가 클수록 구인 플랫폼을 통한 공식 채용을 활용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가족·지인 중심의 비공식 채용에 의존했다.

〈표 3-16〉 돼지·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내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중개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돼지	전체	(32)	53.1	37.5	6.3	3.1
	1분위	(14)	35.7	50.0	7.1	7.1
	2분위	(4)	50.0	50.0	0.0	0.0
	3분위	(5)	80.0	20.0	0.0	0.0
	4분위	(9)	66.7	22.2	11.1	0.0
산란계	전체	(10)	40.0	50.0	10.0	0.0
	1분위	(7)	42.9	57.1	0.0	0.0
	2분위	(1)	100.0	0.0	0.0	0.0
	3분위	(1)	0.0	100.0	0.0	0.0
	4분위	(1)	0.0	0.0	100.0	0.0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74.3%로 나타났으며, 구인 웹사이트(9.2%)와 민간 인력중개업소(7.3%) 활용 비중도 일부 확인되었다. 축종별로는 젖소 농가(89.5%)와 한우 농가(80.0%)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조달 비중이 높았고, 돼지 농가는 고용허가제(65.7%) 외에도 구인 웹사이트(17.1%)와 공공기관(11.4%)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농업회사법인은 고용허가제(85.7%)와 민간 인력중개업소(14.3%)를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17〉 외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고용허가제(E-9 비자) 활용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중개 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농업기술 센터 등 지자체 공공 기관 활용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지역 방송, 현수막, 전단지, 마을 방송 등
전체		(109)	74.3	9.2	7.3	4.6	3.7	0.9
축종별	한우	(15)	80.0	0.0	6.7	6.7	0.0	6.7
	젖소	(19)	89.5	0.0	10.5	0.0	0.0	0.0
	돼지	(35)	65.7	17.1	5.7	11.4	0.0	0.0
	육계	(2)	50.0	0.0	0.0	0.0	50.0	0.0
	산란계	(36)	75.0	11.1	8.3	0.0	5.6	0.0
	오리	(2)	50.0	0.0	0.0	0.0	50.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7)	85.7	0.0	14.3	0.0	0.0	0.0
	개인/가족농	(102)	73.5	9.8	6.9	4.9	3.9	1.0
사육 규모	1분위	(55)	78.2	5.5	3.6	5.5	0.0	5.5
	2분위	(24)	66.7	0.0	12.5	16.7	0.0	4.2
	3분위	(18)	77.8	0.0	11.1	11.1	0.0	0.0
	4분위	(12)	66.7	8.3	8.3	8.3	0.0	8.3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돼지와 산란계 농가를 살펴보면, 돼지 농가의 경우 1분위는 고용허가제(E-9비자) 활용과 공공기관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2분위는 다양한 공식 채용 경로를 활용하고 있었고, 3분위는 고용허가제(E-9비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산란계의 경우, 모든 규모에서 고용허가제(E-9비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표 3-18〉 돼지·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조달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고용허가제(E-9 비자) 활용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중개 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농업기술 센터 등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지역 방송, 현수막, 전단지, 마을 방송 등
돼지	전체	(35)	65.7	17.1	5.7	11.4	0.0	0.0
	1분위	(13)	69.2	7.7	0.0	23.1	0.0	0.0
	2분위	(9)	44.4	33.3	11.1	11.1	0.0	0.0
	3분위	(8)	87.5	12.5	0.0	0.0	0.0	0.0
	4분위	(5)	60.0	20.0	20.0	0.0	0.0	0.0
산란계	전체	(36)	75.0	11.1	8.3	0.0	5.6	0.0
	1분위	(13)	69.2	15.4	7.7	0.0	7.7	0.0
	2분위	(10)	80.0	10.0	10.0	0.0	0.0	0.0
	3분위	(7)	71.4	14.3	14.3	0.0	0.0	0.0
	4분위	(6)	83.3	0.0	0.0	0.0	16.7	0.0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 차질 질문에 응답 농가의 60.7%가 시설 보수 등 필수 작업 지연을 경험했으며, 39.3%는 경영주와 가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29.5%는 가축 관리 소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또는 동물복지 수준 하락을 지적했다. 축종별로는 젖소·돼지 농가에서 노동 강도 심화 비중이 높았고, 산란계 농가는 생산성 저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장 확장 포기(33.3%)와 인건비 부담(16.7%)이 개인·가족농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3-19〉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시설 보수 등 필수 작업의 지연	경영주 본인 및 가족의 노동 강도 심화	생산성 저하 또는 동물복지 수준 하락	계획했던 농장 확장 계획 포기	높은 인건비 지불로 인한 생산비 증가	사육 규모 축소 또는 폐업 고려	기타
전체		(501)	60.7	39.3	29.5	5.2	4.4	3.8	0.6
축종별	한우	(251)	64.1	29.9	36.3	4.8	4.4	4.8	0.0
	젖소	(50)	62.0	62.0	12.0	0.0	8.0	6.0	0.0
	돼지	(50)	28.0	64.0	12.0	14.0	0.0	0.0	4.0
	육계	(50)	72.0	36.0	26.0	2.0	0.0	2.0	0.0
	산란계	(50)	66.0	58.0	38.0	10.0	8.0	0.0	0.0
	오리	(50)	58.0	24.0	26.0	2.0	6.0	6.0	2.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50.0	16.7	16.7	33.3	16.7	0.0	0.0
	개인/가족농	(489)	60.9	39.9	29.9	4.5	4.1	3.9	0.6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농가 중 30.3%가 확정된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69.7%는 후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중 1.8%는 후계자 발굴·육성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67.9%는 후계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산란계(38.0%)와 돼지(36.0%) 농가의 후계자 보유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한우 농가는 72.1%가 후계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농가의 71.7%는 후계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농업회사법인은 확정된 후계자 비중은 낮으나(8.3%), 후계자 발굴·육성 계획 비율(25.0%)이 개인·가족농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3-20〉 농장 경영 후계자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체		(501)	30.3	69.7	1.8	67.9
축종별	한우	(251)	27.9	72.1	0.4	71.7
	젖소	(50)	30.0	70.0	4.0	66.0
	돼지	(50)	36.0	64.0	4.0	60.0
	육계	(50)	32.0	68.0	0.0	68.0
	산란계	(50)	38.0	62.0	6.0	56.0
	오리	(50)	28.0	72.0	2.0	7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8.3	91.7	25.0	66.7
	개인/가족농	(489)	30.9	69.1	1.2	67.9
사육 규모	1분위	(138)	39.9	60.1	2.2	58.0
	2분위	(122)	40.2	59.8	2.5	57.4
	3분위	(123)	30.1	69.9	1.6	68.3
	4분위	(118)	9.3	90.7	0.8	89.8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모든 축종에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후계자가 높았으며, 특히 한우와 돼지 농가의 경우 대규모 농가에서 후계가 있는 경우가 타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1〉 축종·규모별 농장 경영 후계자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체		(501)	30.3	69.7	1.8	67.9
한우	전체	(251)	27.9	72.1	0.4	71.7
	1분위	(65)	43.1	56.9	0.0	56.9
	2분위	(64)	39.1	60.9	1.6	59.4
	3분위	(61)	24.6	75.4	0.0	75.4
	4분위	(61)	3.3	96.7	0.0	96.7
젖소	전체	(50)	30.0	70.0	4.0	66.0
	1분위	(16)	37.5	62.5	0.0	62.5
	2분위	(11)	45.5	54.5	0.0	54.5
	3분위	(13)	30.8	69.2	7.7	61.5
	4분위	(10)	0.0	100.0	10.0	90.0
돼지	전체	(50)	36.0	64.0	4.0	60.0
	1분위	(16)	43.8	56.3	0.0	56.3
	2분위	(10)	50.0	50.0	10.0	40.0
	3분위	(11)	27.3	72.7	9.1	63.6
	4분위	(13)	23.1	76.9	0.0	76.9
육계	전체	(50)	32.0	68.0	0.0	68.0
	1분위	(13)	23.1	76.9	0.0	76.9
	2분위	(12)	41.7	58.3	0.0	58.3
	3분위	(15)	46.7	53.3	0.0	53.3
	4분위	(10)	10.0	90.0	0.0	90.0
산란계	전체	(50)	38.0	62.0	6.0	56.0
	1분위	(15)	40.0	60.0	20.0	40.0
	2분위	(11)	45.5	54.5	0.0	54.5
	3분위	(11)	45.5	54.5	0.0	54.5
	4분위	(13)	23.1	76.9	0.0	76.9
오리	전체	(50)	28.0	72.0	2.0	70.0
	1분위	(13)	38.5	61.5	0.0	61.5
	2분위	(14)	28.6	71.4	7.1	64.3
	3분위	(12)	25.0	75.0	0.0	75.0
	4분위	(11)	18.2	81.8	0.0	81.8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자가 있는 농가(152호) 중 99.3%는 아들·딸 등 직계 자녀가 후계자로 나타났으며, 기타 친인척은 0.7%에 불과했다. 축종별로는 대부분 직계 자녀가 후계자로 확인되었고, 한우 농가에서만 1.4%가 기타 친인척을 후계자로 응답했다.

〈표 3-22〉 후계자와 경영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사례수	아들/딸	기타 친인척
전체		(152)	99.3	0.7
축종별	한우	(70)	98.6	1.4
	젖소	(15)	100.0	0.0
	돼지	(18)	100.0	0.0
	육계	(16)	100.0	0.0
	산란계	(19)	100.0	0.0
	오리	(14)	100.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	100.0	0.0
	개인/가족농	(151)	99.3	0.7

주: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1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자가 있는 농가 중 68.4%는 후계자가 전업으로 농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18.4%는 일부 시간만 참여, 13.2%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오리 농가에서 전업 참여율이 92.9%로 가장 높았고, 돼지 농가는 전업 참여(55.6%)와 비참여(22.2%)가 함께 나타났다. 산란계 농가는 일부 시간만 참여하는 비율이 26.3%로 다른 축종에 비해 높았다.

〈표 3-23〉 후계자의 현재 농장 업무 참여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전업으로 참여	일부 시간만 참여	전혀 참여하지 않음
전체		(152)	68.4	18.4	13.2
축종별	한우	(70)	67.1	18.6	14.3
	젖소	(15)	66.7	20.0	13.3
	돼지	(18)	55.6	22.2	22.2
	육계	(16)	68.8	18.8	12.5
	산란계	(19)	68.4	26.3	5.3
	오리	(14)	92.9	0.0	7.1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	0.0	100.0	0.0
	개인/가족농	(151)	68.9	17.9	13.2
사육 규모	1분위	(55)	76.4	14.5	9.1
	2분위	(49)	67.3	20.4	12.2
	3분위	(37)	56.8	18.9	24.3
	4분위	(11)	72.7	27.3	0.0

주 1)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1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자가 있는 농가 중 33.6%는 축산·농업 관련 학과를 전공했으며, 5.3%는 마이스터대학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다. 반면 61.2%는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가 후계자의 관련 학과 전공 비율이 47.4%로 가장 높고, 돼지 농가는 관련 교육 경험 없음의 응답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4〉 후계자의 관련 교육 이수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축산/농업 관련 학과 전공	마이스터대학 등 전문 교육 이수	관련 교육 경험 없음
전체		(152)	33.6	5.3	61.2
축종별	한우	(70)	35.7	4.3	60.0
	젖소	(15)	26.7	6.7	66.7
	돼지	(18)	27.8	0.0	72.2
	육계	(16)	25.0	6.3	68.8
	산란계	(19)	47.4	10.5	42.1
	오리	(14)	28.6	7.1	64.3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	0.0	0.0	100.0
	개인/가족농	(151)	33.8	5.3	60.9

주: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1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자에게 농장 승계를 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63.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후계자를 위한 자금·시설 확보의 어려움(20.4%)이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젖소·돼지·육계 농가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산란계 농가는 방역·환경 규제에 대한 응답이 다른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리 농가는 투자 자금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규모(2~3분위)의 농가는 상속·증여세 중심의 재정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규모(1분위) 농가는 규제 대응 부담에 대한 응답이 다른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4분위)의 경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후계자에게 농장 승계를 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	후계자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투자 자금 확보	환경·방역·사육제한 등 각종 규제	후계자의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교육	기타
전체		(152)	63.8	20.4	9.2	5.3	1.3
축종별	한우	(70)	65.7	20.0	5.7	5.7	2.9
	젖소	(15)	80.0	13.3	0.0	6.7	0.0
	돼지	(18)	77.8	11.1	5.6	5.6	0.0
	육계	(16)	75.0	18.8	0.0	6.3	0.0
	산란계	(19)	42.1	26.3	31.6	0.0	0.0
	오리	(14)	35.7	35.7	21.4	7.1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	100.0	0.0	0.0	0.0	0.0
	개인/가족농	(151)	63.6	20.5	9.3	5.3	1.3
사육 규모	1분위	(55)	60.0	25.5	7.3	7.3	0.0
	2분위	(49)	67.3	16.3	4.1	8.2	4.1
	3분위	(37)	70.3	13.5	5.4	10.8	0.0
	4분위	(11)	45.5	36.4	0.0	18.2	0.0

주 1)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1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65.9%)으로, 악취·장시간 노동·고강도 업무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축종별로는 한우(79.0%)·오리(75.0%)에서 노동환경 기피가 가장 높았고, 젖소는 환경 규제(37.1%) 비중이 다른 축종에 비해 높았으며, 돼지는 낮은 소득(15.6%)이 타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육계(20.6%)·산란계(19.4%)는 부채 및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3-26〉 후계자가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열악한 노동 환경(악취, 노동 강도 등)	복잡한 환경 규제 및 방역 의무	큰 부채 규모 및 초기 투자 비용	낮은 소득	불안정한 기대 수입	기타
전체		(349)	65.9	10.0	8.0	5.7	5.4	4.9
축종별	한우	(181)	79.0	3.3	6.1	5.0	3.9	2.8
	젖소	(35)	42.9	37.1	2.9	0.0	8.6	8.6
	돼지	(32)	40.6	25.0	3.1	15.6	3.1	12.5
	육계	(34)	50.0	5.9	20.6	5.9	11.8	5.9
	산란계	(31)	48.4	16.1	19.4	6.5	6.5	3.2
	오리	(36)	75.0	2.8	5.6	5.6	5.6	5.6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1)	63.6	9.1	9.1	0.0	0.0	18.2
	개인/가족농	(338)	66.0	10.1	8.0	5.9	5.6	4.4
사육 규모	1분위	(83)	63.9	4.8	10.8	13.3	3.6	3.6
	2분위	(73)	54.8	2.7	8.2	12.3	13.7	8.2
	3분위	(86)	62.8	9.3	7.0	11.6	3.5	5.8
	4분위	(107)	77.6	5.6	6.5	4.7	2.8	2.8

주 1)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349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농장 처리 방식은 제3자 매각(52.5%)이 가장 많았고, 후계자 승계(32.3%)가 뒤를 이었다. 폐업 시 시설 철거(10.0%)를 선택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표 3-27〉 은퇴 후 운영 중인 농장 처리 계획

단위: %

구분		사례수	제3자 매각	후계자 승계	폐업 후 철거	폐업 후 방치	제3자 임대
전체		(501)	52.5	32.3	10.0	2.8	2.4
축종별	한우	(251)	50.2	28.7	13.9	4.4	2.8
	젖소	(50)	62.0	34.0	4.0	0.0	0.0
	돼지	(50)	54.0	38.0	2.0	0.0	6.0
	육계	(50)	60.0	32.0	4.0	0.0	4.0
	산란계	(50)	54.0	46.0	0.0	0.0	0.0
	오리	(50)	44.0	30.0	20.0	6.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58.3	33.3	8.3	0.0	0.0
	개인/가족농	(489)	52.4	32.3	10.0	2.9	2.5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후계가 있는 농가의 은퇴 후 농장 처리 계획은 152개 농장 중 151개 농가에서 후계자에게 물려준다고 응답했으며, 한우 농가 1개 농가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후계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경우, 대부분 축종에서 제3자 매각을 통해 농장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한우의 경우 철거의 비율이 타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돼지·육계 농가에서는 제3자에게 임대하겠다는 비율이 타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 농가일수록 후계자 승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규모 농가일수록 폐업 후 철거, 폐업 후 방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은퇴 후 운영 중인 농장 처리 계획

단위: %

구분		사례수	제3자 매각	후계자 승계	폐업 후 철거	폐업 후 방치	제3자 임대
전체		(349)	75.1	3.2	14.3	4.0	3.4
축종별	한우	(181)	69.1	1.7	19.3	6.1	3.9
	젖소	(35)	88.6	5.7	5.7	0.0	0.0
	돼지	(32)	84.4	3.1	3.1	0.0	9.4
	육계	(34)	88.2	0.0	5.9	0.0	5.9
	산란계	(31)	87.1	12.9	0.0	0.0	0.0
	오리	(36)	61.1	2.8	27.8	8.3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1)	63.6	27.3	9.1	0.0	0.0
	개인/가족농	(338)	75.4	2.4	14.5	4.1	3.6
사육 규모	1분위	(83)	86.7	4.8	3.6	0.0	4.8
	2분위	(73)	82.2	4.1	8.2	4.1	1.4
	3분위	(86)	75.6	2.3	12.8	4.7	4.7
	4분위	(107)	60.7	1.9	28.0	6.5	2.8

주 1)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 1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주된 소득원은 개인연금 및 저축(62.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농장 매각·임대 수입(13.6%), 타 농업(쌀 등) 소득(10.0%)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우에서 타 농업 소득(19.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오리는 가족 부양(16.0%) 의존도가 두드러졌다. 돼지는 농장 매각·임대 수입(28.0%)이 다른 축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9〉 은퇴 후 주 소득원

단위: %

구분		사례수	개인연금 및 저축	농장 매각/임대 수입	쌀 등 타농업으로부터의 소득	용돈 등 가족으로부터의 부양	국민연금	직불금 등 정부 지원
전체		(501)	62.7	13.6	10.0	7.8	5.6	0.4
축종별	한우	(251)	50.2	12.7	19.5	9.2	7.6	0.8
	젖소	(50)	82.0	14.0	0.0	4.0	0.0	0.0
	돼지	(50)	60.0	28.0	0.0	4.0	8.0	0.0
	육계	(50)	80.0	16.0	0.0	0.0	4.0	0.0
	산란계	(50)	76.0	10.0	0.0	8.0	6.0	0.0
	오리	(50)	78.0	4.0	2.0	16.0	0.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75.0	25.0	0.0	0.0	0.0	0.0
	개인/가족농	(489)	62.4	13.3	10.2	8.0	5.7	0.4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축산 장비 중 가장 많이 도입된 것은 자동 급이·급수기(75.0%)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CCTV 등 64.3%)이었다.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8.6% 존재했다. 축종별로 젖소에서 발정·질병 감지 센서(42.0%)가 타 축종에 비해 도입률이 높았으며, 돼지는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54.0%), 육계는 환경 제어 시스템(62.0%)의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0〉 현재 도입한 스마트축산(ICT) 기술·장비

단위: %

구분		사례수	자동 급이/급수기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축사 환경(온/습도, 환기 등) 자동 제어 시스템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기타	도입 장비 없음
전체		(501)	75.0	64.3	34.3	17.8	16.4	2.0	18.6
축종별	한우	(251)	78.9	60.2	22.3	14.3	6.4	0.4	14.3
	젖소	(50)	48.0	52.0	32.0	42.0	26.0	6.0	34.0
	돼지	(50)	88.0	78.0	54.0	16.0	54.0	2.0	6.0
	육계	(50)	90.0	82.0	62.0	14.0	22.0	2.0	10.0
	산란계	(50)	72.0	74.0	58.0	24.0	30.0	0.0	26.0
	오리	(50)	58.0	56.0	26.0	10.0	0.0	8.0	38.0
후계의 유무	후계 있음	(152)	81.6	19.7	41.4	23.0	71.7	1.3	15.1
	후계 없음/계획 있음	(9)	77.8	44.4	66.7	11.1	66.7	0.0	11.1
	후계 없음/계획 없음	(340)	72.1	14.1	30.3	15.6	60.9	2.4	20.3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농가(88.8%)는 '추가 장비 도입 계획 없음'으로 응답했다. 축종별로 젖소 농가에서 도입 계획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도입 없음 68.0%), 특히 환경 제어(6.0%), 자동 급이/급수기(4.0%), 센서(4.0%)에 관심이 있었다. 돼지는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도입 의향이 8.0%로 높았고, 오리는 환경 제어 시스템(12.0%) 응답이 두드러졌다.

〈표 3-31〉 스마트축산(ICT) 기술·장비 도입 계획

단위: %

구분		사례수	도입 의사 없음	축사 환경(온/습도, 환기 등) 자동 제어 시스템	자동 급이/급수기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전체		(501)	88.8	3.6	2.4	2.4	2.0	1.4	3.6
축종별	한우	(251)	92.0	1.6	1.6	2.4	2.0	1.2	2.4
	젖소	(50)	68.0	6.0	4.0	4.0	2.0	2.0	18.0
	돼지	(50)	84.0	2.0	2.0	4.0	8.0	2.0	4.0
	육계	(50)	96.0	2.0	2.0	0.0	0.0	0.0	0.0
	산란계	(50)	92.0	6.0	4.0	0.0	0.0	4.0	2.0
	오리	(50)	88.0	12.0	4.0	4.0	0.0	0.0	0.0
후계의 유무	후계 있음	(152)	80.3	7.2	4.6	3.3	4.6	2.0	5.9
	후계 없음/계획 있음	(9)	77.8	11.1	0.0	11.1	0.0	0.0	0.0
	후계 없음/계획 없음	(340)	92.9	1.8	1.5	1.8	0.9	1.2	2.6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축산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높은 초기 도입 비용(79.8%)이었다. 축종별로 보면 산란계에서 비용 부담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92.0%), 실제 효과에 대한 불확신 비율은 돼지가 16.0%로 타 축종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3-32〉 스마트축산 기술·장비 추가 도입 시 장애물

단위: %

구분		사례수	높은 초기 도입 비용	실제 효과(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불확신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어떤 장비가 좋은지 신뢰할 만한 정보 부족	해당 농장의 설치 불가능(노후화, 건폐율 부족 등)
전체		(501)	79.8	8.4	4.2	3.8	3.8
축종별	한우	(251)	77.7	6.4	5.6	6.0	4.4
	젖소	(50)	86.0	10.0	2.0	0.0	2.0
	돼지	(50)	74.0	16.0	4.0	4.0	2.0
	육계	(50)	84.0	10.0	2.0	4.0	0.0
	산란계	(50)	92.0	4.0	0.0	0.0	4.0
	오리	(50)	74.0	12.0	6.0	0.0	8.0
사육 규모	1분위	(138)	74.6	15.9	1.4	4.3	3.6
	2분위	(122)	82.8	5.7	4.9	4.9	1.6
	3분위	(123)	89.4	3.3	3.3	2.4	1.6
	4분위	(118)	72.9	7.6	7.6	3.4	8.5

주: 각 축종의 규모(1~4분위)는 표본의 사육 규모를 상위 25%, 25~50%, 50~75%, 75~100%로 구간 설정하여 적용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농가 대부분은 현 규모 유지(86.4%)한다는 계획이다. 축소·대폭 축소(8.0%), 폐업(2.6%) 의향도 일정 부분 존재했다. 축종별로 보면 한우는 현 규모 유지 응답이 82.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축소(6.8%)·폐업 (4.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계가 있는 경우 7.2%가 규모를 확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후계가 없으며, 계획이 없는 경우 10.8%가 축소·대폭 축소한다고 응답하였고, 폐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8%로 집계되었다. 대폭 축소 및 폐업 이유로는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54.2%)가 가장 높았다.

〈표 3-33〉 향후 5년간 농장 운영 규모 계획

단위: %

구분		사례수	대폭 확대	확대	현 규모 유지	축소	대폭 축소	폐업
전체		(501)	0.2	2.8	86.4	5.8	2.2	2.6
축종별	한우	(251)	0.4	2.8	82.9	6.8	3.2	4.0
	젖소	(50)	0.0	2.0	94.0	0.0	2.0	2.0
	돼지	(50)	0.0	2.0	90.0	2.0	2.0	4.0
	육계	(50)	0.0	0.0	90.0	10.0	0.0	0.0
	산란계	(50)	0.0	8.0	88.0	2.0	2.0	0.0
	오리	(50)	0.0	2.0	88.0	10.0	0.0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0.0	0.0	100.0	0.0	0.0	0.0
	개인/가족농	(489)	0.2	2.9	86.1	5.9	2.2	2.7
후계의 유무	후계 있음	(152)	0.0	7.2	91.4	0.7	0.7	0.0
	후계 없음/ 계획 있음	(9)	0.0	0.0	88.9	0.0	11.1	0.0
	후계 없음/ 계획 없음	(340)	0.3	0.9	84.1	8.2	2.6	3.8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표 3-34〉 농장 운영 대폭 축소 및 폐업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	경영 악화	후계자 문제	고용 노동문제	축사의 노후화	방역 문제	정부 정책 변화
전체		(24)	54.2	12.5	8.3	8.3	8.3	4.2	4.2
축종별	한우	(18)	55.6	16.7	0.0	11.1	11.1	0.0	5.6
	젖소	(2)	100.0	0.0	0.0	0.0	0.0	0.0	0.0
	돼지	(3)	33.3	0.0	33.3	0.0	0.0	33.3	0.0
	산란계	(1)	0.0	0.0	100.0	0.0	0.0	0.0	0.0
농장 형태	개인/ 가족농	(24)	54.2	12.5	8.3	8.3	8.3	4.2	4.2

주: 대폭 축소 및 폐업 계획인 24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92.8%)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후계농 육성 및 영농승계 지원(45.5%)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회사법인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표 3-35〉 정부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농촌인력 중개센터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저금리 융자 지원	공익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직불금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가축분뇨 처리 및 친환경 시설 지원	후계농 육성 및 영농 승계 지원
전체		(501)	64.7	49.9	84.0	61.3	92.8	54.9	45.5
축종별	한우	(251)	52.2	39.8	80.9	58.2	91.2	44.6	37.8
	젖소	(50)	90.0	76.0	84.0	64.0	94.0	84.0	68.0
	돼지	(50)	96.0	80.0	74.0	60.0	88.0	78.0	60.0
	육계	(50)	60.0	46.0	92.0	62.0	100.0	58.0	54.0
	산란계	(50)	90.0	66.0	94.0	76.0	98.0	68.0	60.0
	오리	(50)	50.0	32.0	92.0	60.0	92.0	38.0	24.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100.0	91.7	75.0	75.0	100.0	83.3	66.7
	개인/가족농	(489)	63.8	48.9	84.3	60.9	92.6	54.2	45.0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정책은 공익직불제·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직불금(57.3%)과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55.5%)이었다. 반면,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 시설 지원(22.9%)과 후계농 육성·영농 승계 지원(1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업회사법인은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표 3-36〉 정부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농촌인력 중개센터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저금리 융자 지원	공익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직불금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가축분뇨 처리 및 친환경 시설 지원	후계농 육성 및 영농 승계 지원
전체		(501)	37.0	33.6	26.4	57.3	55.5	22.9	16.2
축종별	한우	(251)	18.3	14.0	19.7	56.8	37.1	14.3	18.9
	젖소	(50)	44.4	60.5	38.1	59.4	53.2	38.1	23.5
	돼지	(50)	68.8	47.5	40.5	50.0	63.6	35.9	26.7
	육계	(50)	13.3	13.0	21.7	61.3	90.0	3.4	3.7
	산란계	(50)	77.8	51.5	48.9	68.4	85.7	32.4	6.7
	오리	(50)	16.0	50.0	15.2	46.7	71.7	26.3	0.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75.0	54.5	66.7	55.6	91.7	50.0	0.0
	개인/가족농	(489)	35.6	32.6	25.5	57.4	54.5	21.9	16.8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정책은 사료·에너지 가격 안정 등 생산비 지원 확대(45.1%)로 나타났다. 그 뒤로 환경·방역 관련 규제 완화(23.8%),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 저금리 융자 확대(14.0%) 순이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68.5%)와 육계(40.0%)는 생산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젖소(38.0%), 돼지(46.0%), 산란계(48.0%)는 환경 및 방역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오리의 경우 저금리 융자 확대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7〉 어려움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

구분		사례수	(생산비) 사료, 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규제) 환경, 방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자금)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저금리 융자 확대	(가격) 축산물 수급 조절 및 수입 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	(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승계) 영농 승계 시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 강화
전체		(501)	45.1	23.8	14.0	9.4	3.4	2.8	1.6
축종별	한우	(251)	68.5	12.7	7.6	7.6	1.6	1.6	0.4
	젖소	(50)	20.0	38.0	6.0	22.0	10.0	4.0	0.0
	돼지	(50)	20.0	46.0	8.0	4.0	10.0	10.0	2.0
	육계	(50)	40.0	14.0	20.0	18.0	6.0	0.0	2.0
	산란계	(50)	10.0	48.0	26.0	10.0	0.0	4.0	2.0
	오리	(50)	18.0	28.0	42.0	2.0	0.0	2.0	8.0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8.3	50.0	8.3	8.3	8.3	8.3	8.3
	개인/가족농	(489)	46.0	23.1	14.1	9.4	3.3	2.7	1.4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축산지구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필요하지 않음 68.5%, 보통 23.0%, 필요함 이상은 8.0%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 점수도 2.39점으로 낮았다.

〈표 3-38〉 축산지구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5점)
전체		(501)	0.6	68.5	23.0	7.4	0.6	2.39
축종별	한우	(251)	0.0	69.7	18.7	10.8	0.8	2.43
	젖소	(50)	0.0	72.0	28.0	0.0	0.0	2.28
	돼지	(50)	4.0	60.0	24.0	10.0	2.0	2.46
	육계	(50)	2.0	76.0	14.0	8.0	0.0	2.28
	산란계	(50)	0.0	70.0	30.0	0.0	0.0	2.30
	오리	(50)	0.0	58.0	40.0	2.0	0.0	2.44
농장 형태	농업회사법인	(12)	0.0	58.3	33.3	8.3	0.0	2.50
	개인/가족농	(489)	0.6	68.7	22.7	7.4	0.6	2.39
후계의 유무	후계있음	(152)	1.3	64.5	26.3	6.6	1.3	2.42
	후계없음/계획있음	(9)	0.0	77.8	22.2	0.0	0.0	2.22
	후계없음/계획없음	(340)	0.3	70.0	21.5	7.9	0.3	2.38

자료: 축산업 종사자 대상 경영 및 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 시사점

사료비 등 생산비 급등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 환경 규제(젖소 44%, 돼지 38%), 가축 질병 및 방역 규제(가금류 30% 내외) 등이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악취 문제는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94.1%)으로,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낸다.

가족 노동력(평균 1.94명)과 함께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돼지·산란계 농가에서는 인력 구인난(각각 26%, 20%가 '어렵다 이상'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력 확보가 경영의 주요 변수임을 보여준다.

확정된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30.3%에 불과하며, 67.9%는 후계 계획 자체가 없다.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노동 환경(65.9%)이며, 후계자가 있더라도 증여·상속세 부담(63.8%)과 자금 확보 어려움(20.4%)이 승계의 큰 장애물이다. 이는 축산업의 세대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은퇴 후 농장 처리 계획으로 제3자 매각(52.5%)이 가장 많았고, 주된 소득원은 개인 연금 및 저축(62.7%)으로 나타나,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와 자산의 원활한 회수가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축산업 신규 진입자 설문조사

2.1. 조사 개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농업 및 축산업의 신규 진입 농가에 대한 의향과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이 생각하는 농업 및 축산업의 진입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축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농수산대학의 관련 학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표 3-39〉 청년농 진입 의향 및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5. 9. 15.~2025. 9. 26.(약 2주)
조사 대상	농수산대학 축산관련 학과 재학생 66명
조사 내용	•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가족의 농업 농사 여부 • 축산업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평가 • 축산업 진입 의향 및 관심 축종 • 진입 시 고려 요인 및 장애요인 • 현행 교육과정의 만족도 및 교육 수요 • 정보 습득 경로 및 신뢰도 • 정부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 축산업의 미래 전망 평가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 대상자 중 한우(43.9%)와 가금(33.3%) 전공 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의 비중이 4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0〉 설문조사 대상 개요

단위: 명(%)

전공	응답수(%)	학년	응답수(%)
한우	29	1학년	13
	(43.9)		(19.7)
낙농	3	2학년	10
	(4.5)		(15.2)
양돈	7	3학년	27
	(10.6)		(40.9)
가금	22	전공심화	8
	(33.3)		(12.1)
말산업 반려동물 전공	5	졸업자	8
	(7.6)		(12.1)
합계	66	합계	66
	(100.0)		(100.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 조사 결과

응답자의 가족 중 71.2%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축산 이외에도 농업 종사자는 13.6%로 나타났다.

〈표 3-41〉 가족 중 농업 종사 여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축산	축산 이외의 농업	해당없음
응답수	66	47	9	10
(%)	(100.0)	(71.2)	(13.6)	(15.2)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가족 중 종사하는 축종은 한우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가금(28.6%), 양돈(7.9%), 낙농(6.3%)이 이었다.

〈표 3-42〉 가족 중 축종별 종사 비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한우	낙농	양돈	가금	흑염소
응답수	47	24	3	4	15	1
(%)	(100.0)	(55.6)	(6.3)	(7.9)	(28.6)	(1.6)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축산업 이외의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에서 경작 중인 농가는 쌀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밭작물과 과수가 각각 22.2%로 나타났다.

〈표 3-43〉 가족 중 품종별 종사 비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쌀	밭작물	과수	채소	기타
응답수	9	3	2	2	1	1
(%)	(100.0)	(33.3)	(22.2)	(22.2)	(11.1)	(11.1)

주 : 기타는 '왕겨' 등을 포함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98.5%로 나타났다.

〈표 3-44〉 축산업의 중요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수	66	49	16	0	1	0
(%)	(100.0)	(74.2)	(24.2)	(0.0)	(1.5)	(0.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전망을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다수는 국내 축산업에 대해 긍정적(47.0%)으로 전망했으며, 평균점수는 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평균 3.3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산업 내 종사자의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축산업 이외 농업 종사자는 평균 2.9점으로 낮았으며, 부정적 응답(33.3%)이 긍정보다 많아 비

(非)축산 분야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표 3-45〉 향후 국내 축산업 전망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보통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5점 평균 (점)
전체		66	6	25	21	12	2	3.3
		(100.0)	(9.1)	(37.9)	(31.8)	(18.2)	(3.0)	
농업 기반	축산업 종사	47	6	19	13	7	2	3.4
		(100.0)	(12.8)	(40.4)	(27.7)	(14.9)	(4.3)	
	축산업 이외 농업 종사	9	0	2	4	3	0	2.9
		(100.0)	(0.0)	(22.2)	(44.4)	(33.3)	(0.0)	
	해당 없음	10	0	4	4	2	0	3.2
		(100.0)	(0.0)	(40.0)	(40.0)	(20.0)	(0.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인식이 77.3%로 나타났다.

〈표 3-46〉 국내 축산업 이미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보통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응답수	66	24	27	11	3	1
(%)	(100.0)	(36.4)	(40.9)	(16.7)	(4.5)	(1.5)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축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과 삶의 균형 측면과 친환경적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안정적이다 77.3% 부정적), 근무 환경과 삶의 균형(60.6% 동의 이상), 환경친화적 운영(40.9% 동의 이상), 미래 전망 밝음(33.3% 동의 이상) 항목은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7〉 축산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66	24	27	11	3	1
	(100.0)	(36.4)	(40.9)	(16.7)	(4.5)	(1.5)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66	4	20	31	11	0
	(100.0)	(6.1)	(30.3)	(47.0)	(16.7)	(0.0)
근무 환경이 좋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쉽다	66	2	4	20	33	7
	(100.0)	(3.0)	(6.1)	(30.3)	(50.0)	(10.6)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	66	17	22	19	6	2
	(100.0)	(25.8)	(33.3)	(28.8)	(9.1)	(3.0)
기술 발전과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6	8	15	24	14	5
	(100.0)	(12.1)	(22.7)	(36.4)	(21.2)	(7.6)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6	3	14	22	24	3
	(100.0)	(4.5)	(21.2)	(33.3)	(36.4)	(4.5)
동물복지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66	5	15	30	15	1
	(100.0)	(7.6)	(22.7)	(45.5)	(22.7)	(1.5)
미래 전망이 밝다	66	4	17	23	18	4
	(100.0)	(6.1)	(25.8)	(34.8)	(27.3)	(6.1)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30.3%가 '졸업 후 바로 승계'를 희망했으며, '경험·노하우 습득 후 승계'(24.2%)와 '경험·노하우 습득 후 창업'(21.2%)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축산업 종사자 자녀의 경우 '졸업 후 바로 승계'(40.4%)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승계를 통한 진출 의향이 전체의 약 3/4(74.4%)에 달했다. 이는 가업 승계를 통한 축산업 진입이 여전히 주된 경로임을 보여주었다.

〈표 3-48〉 향후 축산업 분야 진출 의향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졸업 후 바로 승계	졸업 후 바로 창업	경험·노하우 습득 후 승계	경험·노하우 습득 후 창업	계획 없음
전체		66	20	6	16	14	10
		(100.0)	(30.3)	(9.1)	(24.2)	(21.2)	(15.2)
농업 기반	축산업 종사	47	19	3	16	5	4
		(100.0)	(40.4)	(6.4)	(34.0)	(10.6)	(8.5)
	축산업 이외 농업 종사	9	1	2	0	3	3
		(100.0)	(11.1)	(22.2)	(0.0)	(33.3)	(33.3)
	해당 없음	10	0	1	0	6	3
		(100.0)	(0.0)	(10.0)	(0.0)	(60.0)	(30.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향후 축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한우/육우'(48.2%)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육계'(23.2%), '양돈'(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향후 축산업 분야 진출 시 관심 축종

단위: 명(%)

구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기타
전체		27	2	7	13	4	5
		(48.2)	(3.6)	(12.5)	(23.2)	(7.1)	(8.9)
기반 축종	한우	22	0	0	0	0	0
		(81.5)	(0.0)	(0.0)	0.0	(0.0)	(0.0)
	낙농	1	2	0	0	0	0
		(3.7)	(100.0)	(0.0)	(0.0)	(0.0)	(0.0)
	양돈	0	0	4	0	0	0
		(0.0)	(0.0)	(57.1)	(0.0)	(0.0)	(0.0)
	가금	0	0	0	9	1	3
		(0.0)	(0.0)	(0.0)	(69.2)	(25.0)	(60.0)
	기타	0	0	0	0	1	0
		(0.0)	(0.0)	(0.0)	(0.0)	(25.0)	(0.0)
	해당없음	4	0	3	4	2	2
		(14.8)	(0.0)	(42.9)	(30.8)	(50.0)	(40.0)

주: 향후 축산업 진출 의향이 있는 56명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으며,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향후 축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75.0%가 '기존 축사·부지 활용'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신규 축사·부지 이용(신규허가)'은 8.9%에 그쳤다. 즉, 대부분이 가족 또는 기존 기반을 활용한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고,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자원 승계를 통한 진출 경향이 뚜렷했다.

〈표 3-50〉 축산업 진입 시 축사부지 계획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기존 축사/부지 활용	신규 축사부지 이용(신규허가)	현재 미정
전체		56	42	5	9
		(100.0)	(75.0)	(8.9)	(16.1)
기반 축종	한우	22	17	4	1
		(100.0)	(77.3)	(18.2)	(4.5)
	낙농	3	3	0	0
		(100.0)	(100.0)	0.0	0.0
	양돈	4	4	0	0
		(100.0)	(100.0)	0.0	0.0
	가금	13	11	0	2
		(100.0)	(84.6)	0.0	(15.4)
	기타	1	1	0	0
		(100.0)	(100.0)	0.0	0.0
	해당없음	13	6	1	6
		(100.0)	(46.2)	(7.7)	(46.2)

주: 향후 축산업 진출 의향이 있는 56명을 대상으로 질의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존 축사·부지를 활용하려는 응답자(36명) 중 72.2%가 '승계' 방식을 계획하고 있어, 가족 또는 기존 기반을 활용한 세대 승계형 진입이 주된 형태로 나타났다. 양돈 기반 응답자는 전원이 승계(100%)로 응답하여, 시설 투자 부담이 크고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 구조를 반영했다. 낙농 기반 응답자는 임대(66.7%) 비중이 높아, 시설 소유보다는 운영 중심의 접근이 특징적이었다.

〈표 3-51〉 축산업 진입 시 축사부지확보 방식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승계	매매	임대	신축
전체		36	26	5	3	2
		(100.0)	(72.2)	(13.9)	(8.3)	(5.6)
기반 축종	한우	17	13	2	0	2
		(100.0)	(76.5)	(11.8)	(0.0)	(11.8)
	낙농	3	0	1	2	0
		(100.0)	(0.0)	(33.3)	(66.7)	0.0
	양돈	4	4	0	0	0
		(100.0)	(100.0)	(0.0)	(0.0)	(0.0)
	가금	11	8	2	1	0
		(100.0)	(72.7)	(18.2)	(9.1)	(0.0)
	기타	1	1	0	0	0
		(100.0)	(100.0)	(0.0)	(0.0)	(0.0)

주: 기존 축사 및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42명을 대상으로 질의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ICT 스마트축산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있음'(50.0%), '매우 높음'(25.0%)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CCTV 원격 모니터링(60.7%), 자동 급이·급수기(76.8%), 축사환경 자동 제어(73.2%) 등은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52〉 ICT 스마트축산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인지도				
		전혀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높음
ICT 스마트축산		0	1	13	28	14
		(0.0)	(1.8)	(23.2)	(50.0)	(25.0)
세부 ICT 기기별 도입 의향	ICT 자동 급이/급수기	1	2	10	21	22
		(1.8)	(3.6)	(17.9)	(37.5)	(39.3)
	ICT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2	4	18	16	16
		(3.6)	(7.1)	(32.1)	(28.6)	(28.6)
	축사환경(온/습도, 환기, 자동개폐기 등) 자동제어 시스템	1	2	12	18	23
		(1.8)	(3.6)	(21.4)	(32.1)	(41.1)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3	1	15	20	17
		(5.4)	(1.8)	(26.8)	(35.7)	(30.4)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0	2	7	13	34
		(0.0)	(3.6)	(12.5)	(23.2)	(60.7)
	로봇 착유기	20	12	9	7	8
		(35.7)	(21.4)	(16.1)	(12.5)	(14.3)

주: 향후 축산업 진출 의향이 있는 56명을 대상으로 질의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향후 축산업 진출 희망자 중 71.4%가 'ICT 스마트축산' 도입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사양관리와 노동 절감, 자동화 기반의 경영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83.9%), ICT 자동 급이·급수기(80.4%), 축사 환경 자동제어 시스템(78.6%)에 대한 선호가 높아, 관찰·급이·환경 관리 등 반복 노동을 줄이는 기술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돼지, 육계, 산란계의 ICT 도입 의향이 대부분 90~100%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한우(51.9%)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통적 사양 방식 및 개별 관리 중심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다.

〈표 3-53〉 희망 축종별 ICT 스마트축산 도입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축종						없음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기타	
ICT 스마트축산		40	14	2	7	11	4	4	16
		(71.4)	(51.9)	(100.0)	(100.0)	(84.6)	(100.0)	(80.0)	(28.6)
세부 ICT 기기별 도입 의향	ICT 자동 급이/급수기	45	18	2	7	12	4	4	11
		(80.4)	(66.7)	(100.0)	(100.0)	(92.3)	(100.0)	(80.0)	(19.6)
	ICT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32	11	1	7	10	3	2	24
		(57.1)	(40.7)	(50.0)	(100.0)	(76.9)	(75.0)	(40.0)	(42.9)
	축사환경(온/습도, 환기, 자동개폐기 등) 자동제어 시스템	44	17	2	7	12	4	4	12
		(78.6)	(63.0)	(100.0)	(100.0)	(92.3)	(100.0)	(80.0)	(21.4)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32	14	2	5	7	2	3	24
		(57.1)	(51.9)	(100.0)	(71.4)	(53.8)	(50.0)	(60.0)	(42.9)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47	22	2	6	11	3	4	9
		(83.9)	(81.5)	(100.0)	(85.7)	(84.6)	(75.0)	(80.0)	(16.1)
	로봇 착유기	17	6	2	3	3	1	2	39
		(30.4)	(22.2)	(100.0)	(42.9)	(23.1)	(25.0)	(40.0)	(69.6)

주: 향후 축산업 진출 의향이 있는 56명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으며, 〈표3-49〉의 진출 의향 축종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축산업에 진출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4〉 축산업 승계 및 창업의 의향이 없는 사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자본 부족)	6 (60.0)
과도한 노동 강도 및 긴 근무 시간	1 (10.0)
더 매력적이거나 안정적인 다른 산업 분야가 있어서	2 (20.0)
산업 관련 정보 및 경험 부족	1 (10.0)
합계	10 (100.0)

주: 향후 축산업 진출 의향이 없는 10명을 대상으로 질의함.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축산업 신규 진입 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4.6점)과 '축사·부지 등 확보의 어려움'(4.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확보와 입지 규제가 신규 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노동 강도 및 휴일 부족'(3.9점)과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3.9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환경보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55〉 축산업 기반 축종별 축산업 신규 진입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전체	축산업 기반				
		한우	낙농	양돈	가금	기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자본 부족)	4.6	4.4	5.0	4.5	4.9	3.0
축사부지 등 확보의 어려움	4.6	4.5	5.0	4.5	4.8	2.0
과도한 노동 강도 및 시간 부족 (휴일 부족 등)	3.9	4.0	4.7	4.0	3.8	3.0
축산물 시장 가격 변동성 및 소득 불안정	4.3	4.2	5.0	4.5	4.5	3.0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및 실질적인 지원 부족	4.4	4.1	5.0	4.8	4.7	3.0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냄새, 환경오염 등)	4.2	4.1	4.0	4.3	4.2	3.0
전문 지식 및 실용적인 기술 습득의 어려움	3.9	3.9	4.3	4.3	4.0	3.0
가축 질병 발생 위험 및 그에 따른 관리 부담	4.3	4.2	5.0	4.8	4.4	3.0
환경 규제 강화 및 관련 비용 증가 (분뇨 처리, 악취 저감 등)	4.4	4.3	5.0	4.8	4.4	4.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축산업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항목은 '청년 창업농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4.6점)와 '축사·부지 및 시설 확보 지원'(4.6점)으로, 자본 및 시설 인프라 지원이 신규 진입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혔다.

〈표 3-56〉 축산업 기반 축종별 축산업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중요도 인식

단위: 명(%)

구분	전체	축산업 기반				
		한우	낙농	양돈	가금	기타
청년 창업농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 (초기 자본 지원)	4.6	4.4	5.0	4.6	4.8	4.5
축사부지 및 시설 확보 지원 (장기 임대, 구매 알선, 임대료 지원 등)	4.6	4.5	5.0	4.7	4.8	4.3
선도 농가 또는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장기 현장 실습 지원	3.9	3.9	4.5	4.0	3.8	3.3
스마트축산 기술(ICT 장비,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교육 지원	4.3	4.2	5.0	4.0	4.5	4.3
축산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도 (품종, 사양, 질병, 경영)	4.4	4.1	5.0	4.4	4.7	3.8
신규 진입 초기(3~5년)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소득 보전 또는 장려금 지원	4.2	4.2	3.5	4.4	4.6	4.0
정부 주도의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합리적인 가격 지지 정책	3.9	3.9	4.0	4.1	4.1	3.8
지역 단위 공동 시설(분뇨처리, 사료제조 등) 및 고가 장비 공동 이용 지원	4.3	4.2	5.0	4.4	4.4	4.0
축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4.4	4.4	5.0	4.9	4.4	4.0

자료: 축산 진입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3. 시사점

응답자의 71.2%가 축산업 종사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가 여전히 축산업 인력 확보의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향후 진출 의향으로 '졸업 후 바로 승계'(30.3%) 또는 '경험 후 승계'(24.2%)가 '창업'(각각 9.1%, 2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축산 기반 학생의 74.4%가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진입 시에도 '기존 축사·부지 활용'(75.0%)을 계획하며, 그 방식은 '승계'(64.3%)가 압도적이다. 이는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한 승계형 진입이 주를 이룰 것임을 시사한다.

축산업의 중요도(98.5% 긍정)와 이미지(77.3% 긍정)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제적 안정성(77.3% 부정적) 및 수익성(36.4% 부정적, 47.0% 보통)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진출 희망 축종으로 한우/육우(48.2%)와 육계(23.2%)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 특정 축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양한 축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ICT 스마트축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있음' 이상 75.0%), 도입 의향도 71.4%로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CCTV(83.9%), 자동 급이/급수기(80.4%), 환경제어 시스템(78.6%) 등 노동력 절감 기술에 대한 선호가 높아, 미래 축산 인력은 기술 수용성이 높으며 이를 활용한 경영 효율화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축산업 진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60.0%)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장애요인 역시 '높은 초기 투자 비용'(4.6점/5점)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4.6점/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강도(3.9점)나 기술 습득(3.9점)보다 자본 및 제도적 문제가 청년층의 진입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은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4.6점/5점)와 '축사·부지 및 시설 확보 지원'(4.6점/5점)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축산업 진입에 있어 자금 조달과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최우선으로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축사시설 이용 현황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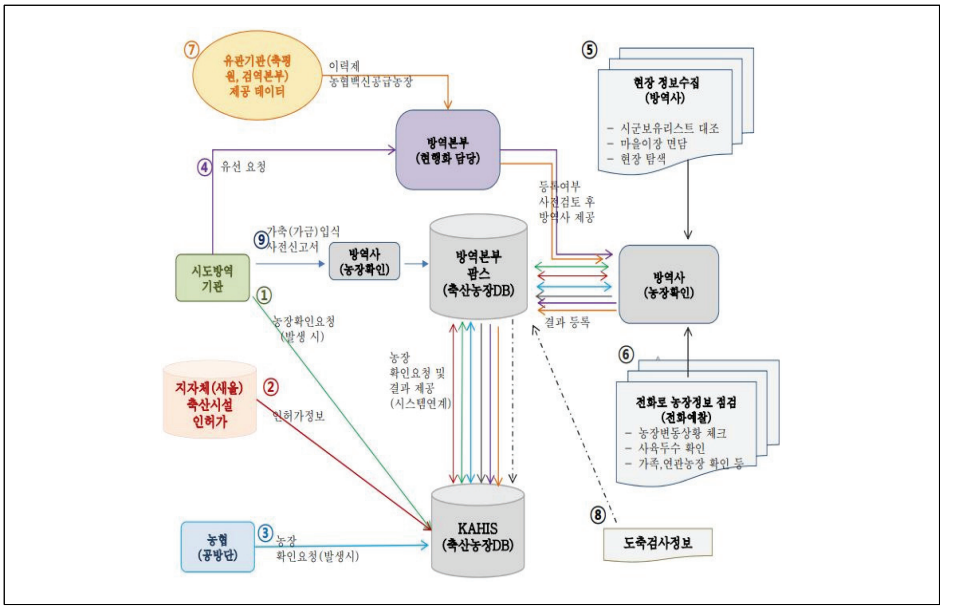
축사시설 이용 현황

1. 자료 및 분석 방법

분석 자료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이다. 자료 수집 근거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9조 6항(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이었다. 수집 대상 축종은「축산법」상 가축 중 소, 돼지, 염소, 사슴, 산양, 면양,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거위, 꿩, 칠면조, 타조, 기러기, 말, 꿀벌, 토끼 등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였다.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 이전에는 시료 채취 등 방역 사업 실적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1년 5월 재구축을 통해 축산농장 DB 및 방역본부 사업(방역, 위생, 검역) 실적 및 통계 분석을 위해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 2020년 7월에는 축산농장 DB 기능 강화 및 현행화 관리 체계가 개편되었다.

〈그림 4-1〉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체계도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25), 농장정보 현행화 매뉴얼.

연도별 동일 시점 데이터로 축산농장의 운영, 휴업, 폐업 등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운영은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휴업은 현재 사육하고 있지 않으면서 재입식 의사가 없거나 재입식 예정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폐업은 축사 멸실(파손) 등으로 사육이 불가능하거나 휴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사육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축종별 가축 사육에 있어서 계절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6월(2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육우의 경우 추석과 설 명절에 따른 사육/출하에 계절성이 있으나,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지므로 9월(3분기) 데이터 사용 시 추석 수요에 따른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금류(육계, 산란계, 오리 등)는 12월(4분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운영, 사육 휴지기제, HPAI 발생에 따라 3월(1분기)에도 입식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년 동안이며, 분석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육용계, 산란계이다. 주요 분석 항목은 연도별 운영 상태(운영/휴

업/폐업), 사육 마릿수(현재/평균/최대), 농장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농장 법정동 주소, 사육 목적,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다. 2025년 6월 기준 축종별 데이터 현황은 소(한우, 육우, 젖소, 교잡우) 10만 411호, 돼지(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멧돼지, 실험용, 미니피그) 5,360호, 닭(육계, 토종닭, 산란계, 백세미, 종계 등) 6만 9,658호, 오리(육용 오리, 산란 오리, 종 오리) 3,059호이다.

〈표 4-1〉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수집자료 현황

구 분		항목	비고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	기본 정보	농장번호	축산시설 인허가를 기본(소는 이력제) 단위로 번호 부여
		농장명	해당 농장의 농장이름
		운영 상태	운영, 휴업, 폐업 등
		주소	축사가 지번이 여러 개일 경우는 축사 중앙지점을 지번으로 등록
		GPS 좌표	축사 GPS 좌표의 위경도값
	사육 현황	축(품)종	18개 축종(품종 34개)
		사육 목적	일관, 비육전문, 착유 등
		조사 두수	사육 두수, 최대 사육 두수, 평균 사육 두수
		운영 상태	정상, 휴업, 폐업
		사육 방식	방목, 축사 내, 혼합
		계군	산란계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25), 농장정보 현행화 매뉴얼.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항목은 기본 정보로 농장번호, 농장명, 운영 상태, 주소가 있으며, 농장번호는 축산 시설 인허가를 기본 단위로 부여하고(소는 이력제), 운영 상태는 운영, 휴업, 폐업 등으로 구분된다. 주소는 축사가 여러 지번일 경우 축사 중앙을 지번으로 등록한다. 팜스 정보에는 GPS 좌표, 축(품)종, 사육 목적이 포함되며, 사육 현황으로는 조사 두수(사육 두수, 최대 사육 두수, 평균 사육 두수), 운영 상태(정상, 휴업, 폐업), 사육 방식(방목, 축사 내, 혼합), 계군(산란계) 등이 있다.

〈글상자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장번호 부여 원칙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장번호 부여 원칙

○ 축산시설 인허가를 기본(소는 이력제)단위로 하여 번호를 부여
- 단, 방역관리상 통합 혹은 분리하여 농장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는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결정
  · 인허가 정보가 없는 경우는 방역관리를 감안하여 농장번호를 부여
- 예1) 동일 인허가이지만, 1명의 축주가 차량으로 이동할 정도로 떨어진 곳의 다수 농장은 각각 등록
- 예2) 동일지역이고 인허가번호가 2개이지만, 시료채취 등 방역상 1개로 통합관리가 합리적일 경우는 1개로 등록

○ 양도양수처리: 양도양수 시 반드시 명의변경 사용(가축사육시설번호 신설)

○ 신규등재 근거: 농장번호를 신규 부여한 사유를 기재
- 현장검색, 자진신고, 유관기관 자료입수, 명의 변경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25), 농장정보 현행화 매뉴얼.

축산농장의 운영 상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운영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운영"으로 기재된 농장이다. 휴업은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휴업"으로 기재된 농장이다.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폐업"으로 기재된 농장 및 비교 연도에 농장번호가 있었으나 분석 연도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농장이다. 동일한 축산농장이나 GIS 좌표에 농장주 변경 등으로 농장번호가 삭제되는 경우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으로 간주하였다. 신규(승계, 구매 등) 농장은 비교 연도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분석 연도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농장이다.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은 2021년 이후 GIS 정보상 축사가 존재했던 지역에 새롭게 입지한 농장이며, 동일한 축산농장이나 GIS 좌표에 농장주 변경 등으로 농장번호가 신규로 발급되는 경우 신규(승계, 구매 등) 농장으로 간주하였다.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은 2021년 이후 GIS 정보상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새롭게 입지한 농장이며, 분석 기간 이전(2021년 6월 이전)에 축사가 영업 및 폐업한 장소였으나 해당 부지에 축사가 새롭게 입지하는 경우에도 신규 축사부지로 간주하였다.

〈표 4-2〉 축산농장의 운영 상태 구분 방법

운영 상태	구분 방법	식별 정보
운영 농장	-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운영"으로 기재된 농장	운영 현황으로 식별
휴업 농장	-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휴업"으로 기재된 농장	운영 현황으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세부 축종 운영 현황에 "폐업"으로 기재된 농장 - 비교 연도에 농장번호가 있었으나, 분석 연도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농장 ※ 동일한 GIS 정보에 농장주 변경 등으로 농장번호가 삭제되는 경우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으로 간주	운영 현황 및 농장번호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 폐업한 농장 부지에 신규 농장이 운영되는 부지의 농장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 폐업한 농장 부지에 농장 운영이 없으며, 폐업이 유지되는 농장	GIS 정보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등) 농장	- 비교 연도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분석 연도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농장(농장번호 신규 부여 농장)	농장번호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 입지 농장	- GIS 정보상 축사가 운영 및 폐업한 지역에 새롭게 입지한 농장	GIS 정보로 식별
신규 축사부지 입지 농장	- GIS 정보상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새롭게 입지한 농장 ※ 분석 기간 이전(2021년 6월 이전)에 축사가 영업 및 폐업한 장소이나, 해당 부지에 축사가 새롭게 입지하는 경우 신규 축사부지로 간주	GIS 정보로 식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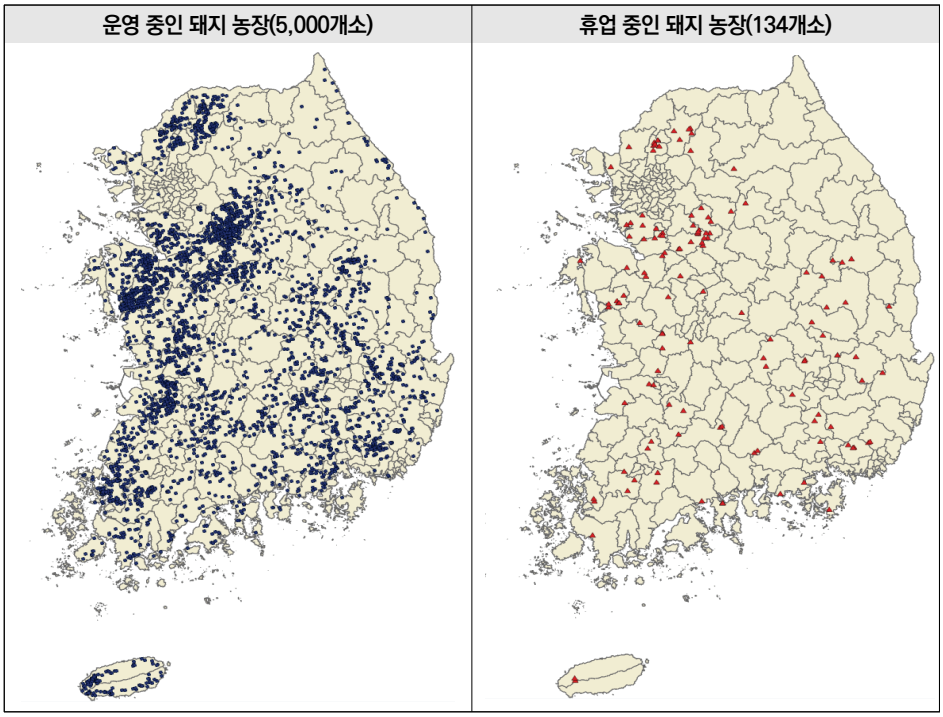
2. 신규/폐업 농가 실태분석

2.1. 돼지 농장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운영 및 휴업 중인 돼지 농장은 5,134호이며, 그중 운영 중인 돼지 농장은 5,000호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한 것이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은 제외하고 최대 사육 두수 기준 6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한 결과이다. 지역별 운영 중인 돼지 농장은 충남(세종, 대전)이 1,080호(21.4%)로 가

장 많았고, 경기(인천) 1,011호(20.6%), 경북(대구) 621호, 경남(부산, 울산) 559호, 전북 552호, 전남 464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홍성군 298호, 제주시 175호, 이천시 164호, 포천시 150호, 안성시 146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4-2〉 돼지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와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세부 축종별 돼지 농장(최대 사육 규모 60두 이상) 수는 일반 4,812호, 종돈 204호, 흑돼지 118호로 나타났다. 사육 목적별 돼지 농장 수 비중은 일관(혼합) 사육이 45.6%(2,343호)로 가장 높았으며, 비육 전문 39.3%, 모돈 사육 전문 10.0% 등의 순이었다.

〈표 4-3〉 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모돈 사육 전문	번식용	비육 전문	일관(혼합)사육	자돈 전문	합계
일반	506	0	1,999	2,247	60	4,812
	(99.0)	(0.0)	(99.2)	(95.9)	(100.0)	(93.7)
종돈	0	204	0	0	0	204
	(0.0)	(100.0)	(0.0)	(0.0)	(0.0)	(4.0)
흑돼지	5	0	17	96	0	118
	(1.0)	(0.0)	(0.8)	(4.1)	(0.0)	(2.3)
합계	**511**	**204**	**2,016**	**2,343**	**60**	**5,1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휴업 중인 돼지 농장은 134호로 전체 농장의 2.6%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6개소, 경북(대구) 21개소, 충남(대전, 세종) 19개소, 전남 17개소, 경남 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성시와 양주시가 각각 7개소로 많았다. 돼지 농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의 농장이 휴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 목적별 돼지 농장 휴업률은 비육 전문 농장이 70.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연도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140	165	154	134
운영	5,370	5,168	5,051	5,000
팜스(FAHMS) 돼지 농장 수	5,510	5,333	5,205	5,134
휴업비율	2.5%	3.1%	3.0%	2.6%

주 1)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5〉 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모돈사육전문	번식용	비육전문	일관(혼합)사육	자돈전문	총합계
운영	506	201	1922	2313	58	5,000
휴업	5	3	94	30	2	134
	(3.7)	(2.2)	(70.1)	(22.4)	(1.5)	(100.0)
합계	511	204	2,016	2,343	60	5,134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4년 6월에는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2025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신규(승계, 구매 등) 돼지 농장 수는 241호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6월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실적이 있었으나 2025년 6월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312호였다. 2024년/2025년 신규 농장보다 폐업 농장이 더 많아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돼지 농장 수는 1년 동안 71호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돼지 농장 수는 매년 100호 내외로 감소 추세였다.

〈표 4-6〉 연도별 신규/폐업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507	228	241	859
	그중 휴업 농장	19	12	10	29
기존 농장(경영 유지) (이전부터 농장번호 유지)		4,680	4,835	4,769	4,170
	그중 휴업 농장	146	142	124	105
폐업(이양, 판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장)		684	356	312	1,235
FAHMS 돼지 농장 수	비교 연도 총 농장수(B)	5,510	5,333	5,205	5,510
	당해 연도 총 농장수(A)	5,333	5,205	5,134	5,134
	A-B	-177	-128	-71	-376

주 1)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GIS 정보를 이용하여 폐업 농장 발생 부지에 신규 돼지 농장이 입지했는지, 폐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폐업(이양, 판매) 돼지 농장은 총 1,233호였으며, 그중 390호(31.6%)의 부지는 축사로 활용되었으나, 843호(68.4%)는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가** (운영 상태 폐업 또는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가)	684	356	312	1,235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198	103	127	390
		(29.0)	(28.9)	(40.7)	(31.6)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484	253	185	843
		(71.0)	(71.1)	(59.3)	(68.4)
	합계	682	356	312	1,233
		(100.0)	(100.0)	(100.0)	(100.0)

주: GIS 정보로 식별한 폐업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폐업(이양, 판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농장이 기존 축사가 있던 장소에 입지했는지, 신규 부지에 입지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 동안 신규 농장은 856호였으며, 그중 390호(54.4%)는 기존 축사가 있는 장소, 466호(45.6%)는 신규 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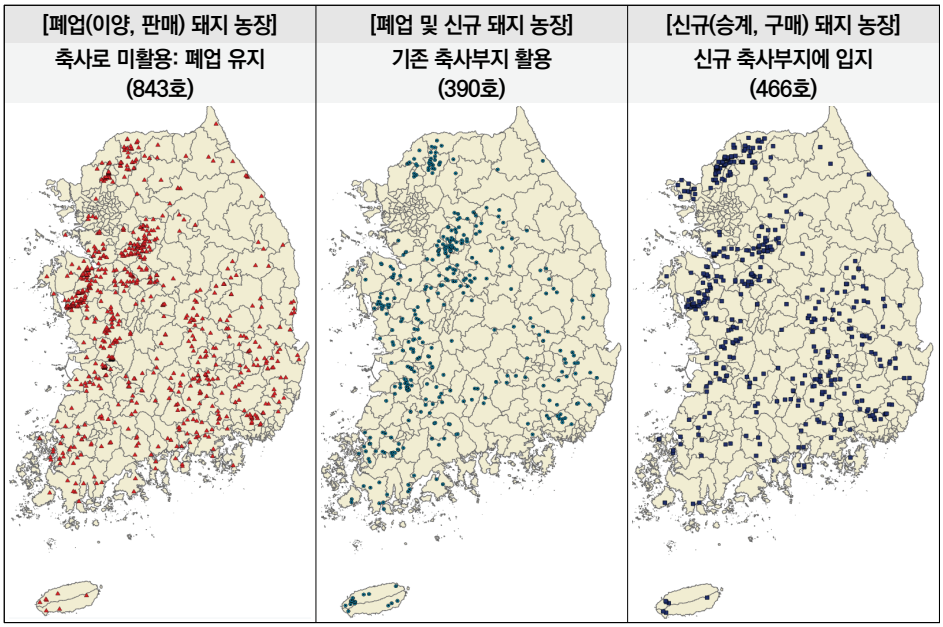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21/23	23/24	24/25	21/25
	(기간)	(2년)	(1년)	(1년)	(4년)
농장번호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507	228	241	859
GIS 정보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198	103	127	390
		(60.9)	(54.6)	(46.9)	(54.4)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309	124	112	466
		(39.1)	(45.4)	(53.1)	(45.6)
	합계	507	227	239	856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규농장이나 당해 연도에 입식하지 않은 휴업농장 포함임.
2) GIS 정보로 식별한 신규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신규(승계, 구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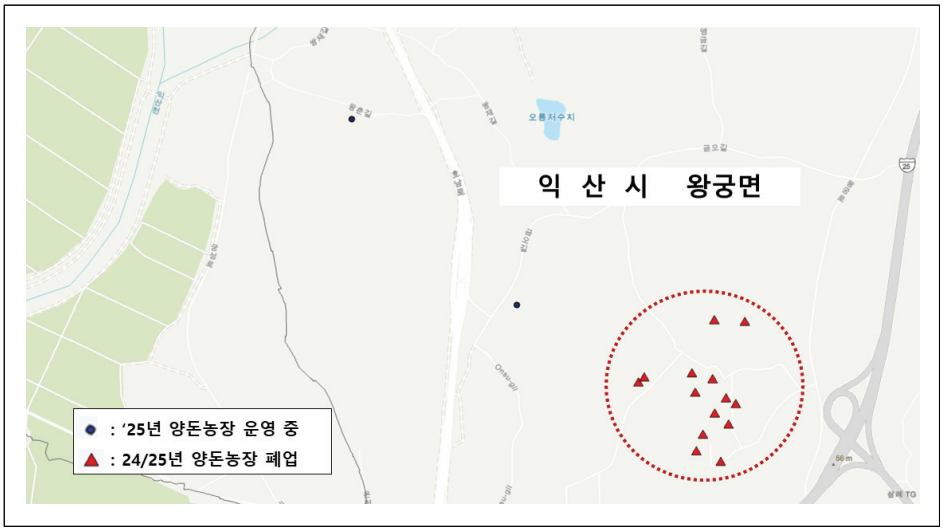
4년(21/25) 동안 폐업(이양, 판매)한 돼지 농장이 신규 축사로 활용된 축사는 총 390호였으며, 시군구별로는 안성시(23호), 포천시(19호), 정읍시(18호) 등의 순이었다.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는 총 843호였으며, 익산시(101호), 홍성군(35호), 김제시(30호), 당진시(26호), 이천시(24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규 부지에 입지한 돼지 농장은 총 466호로 파주시(32호), 연천군(25호), 합천군(17호), 포천시(15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익산시에 폐업 유지 추정 축사가 많은 이유는 왕궁면 축사밀집 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3〉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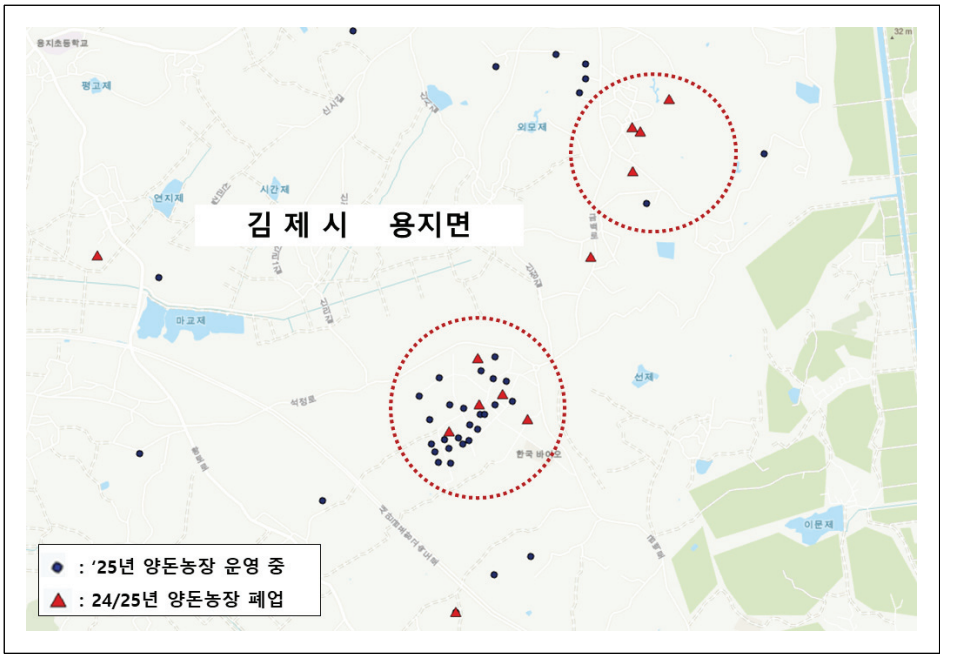
주: 시군구별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4〉 익산시 돼지 농장 폐업 다발 지역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5〉 김제시 돼지 농장 폐업 다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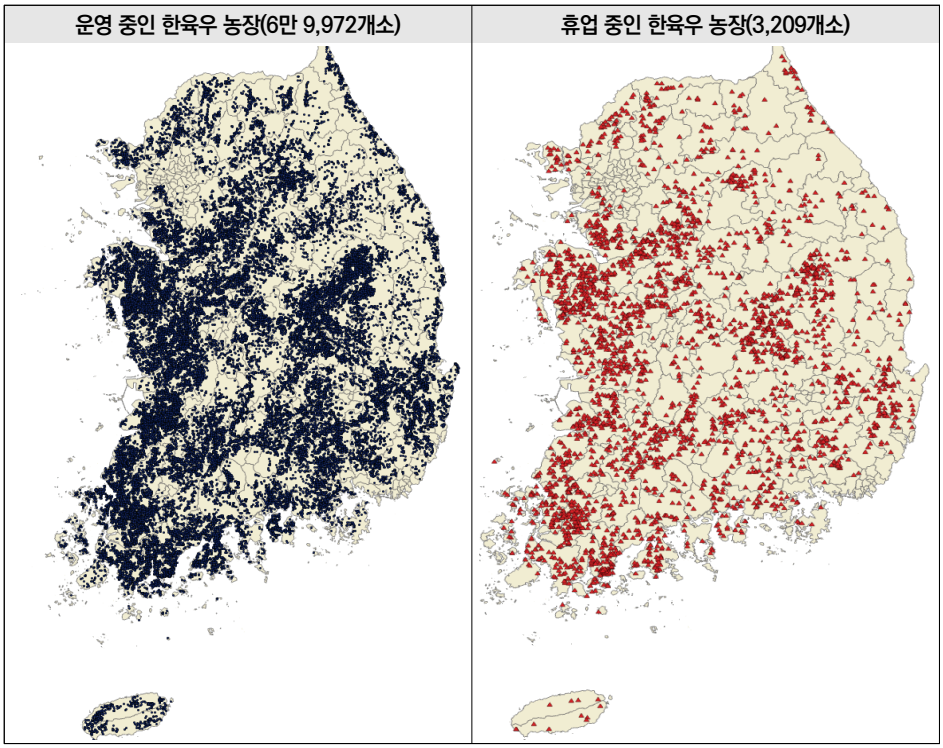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2. 한육우 농장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운영 및 휴업 중인 한육우 농장(최대 사육 규모 7마리 이상)은 7만 3,181호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한육우 농장은 6만 9,972개소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북(대구) 1만 5,392호(21.8%)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1만 3,293호, 충남(대전, 세종) 9,445호, 경남(부산, 울산) 8,300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 운영 중인 한육우 농장은 경주시 1,817호, 상주시 1,619호, 정읍시 1,457호, 장흥군 1,380호, 구미시 1,235호 등의 순이었다.

〈그림 4-6〉 한육우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한육우 농장(최대 사육 규모 7마리 이상) 수는 7만 3,181호였으며, 세부 축종별로는 한우 6만 8,111호, 육우 1,244호, 한육우 혼합 사육 농장 3,826호였다. 사육 목적별 비중은 일관(혼합) 사육 48.0%(3만 5,163호)가 가장 높았고, 번식용 38.1%, 비육용 8.6% 등의 순이었다.

〈표 4-9〉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번식용	비육용	일관(혼합)사육	한육우(혼합)사육	종축	합계
한우	27,906	5,072	335,130	-	3	68,111
	(100.0)	(80.9)	(953.1)		(37.5)	(93.1)
육우	6	1,200	33	-	5	1,244
	(0.0)	(19.1)	(0.1)		(62.5)	(1.7)
한육우	-	-	-	3,826	-	3,826
				(100.0)		(5.2)
합계	**27,912**	**6,272**	**35,163**	**3,826**	**8**	**73,1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휴업 중인 한육우 농장은 3,209호로 전체 농장의 4.4% 수준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 농장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매년 2~4%의 농장이 휴업하고 있었다. 휴업 중인 농장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 622호, 경북(대구) 558호, 충남(대전, 세종) 522개소, 전북 390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상주시 84호, 장흥군 72호, 영암군 68호, 홍성군 66호, 예산군 65호 등의 순이었다. 사육 목적별 휴업률은 번식 농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연도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2,060	3,177	3,315	3,209
운영	77,619	77,722	73,926	69.972
팜스(FAHMS) 한육우 농장 수	79,976	80,899	77,241	73,181
휴업비율	2.6%	3.9%	4.3%	4.4%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1〉 2025년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번식용	비육용	일관(혼합)사육	한육우(혼합)사육	종축	합계
운영	26,624	5,688	34,090	3,562	8	69,972
휴업	1,288	584	1,073	264	-	3,209
	(40.1)	(18.2)	(33.4)	(8.2)	(0.0)	(100.0)
합계	27,912	6,272	35,163	3,826	8	73,181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4년 6월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2025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신규(승계, 구매 등) 한육우 농장 수는 3,631호였다. 반면, 2024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실적이 있었으나 2025년 6월 운영 상태가 폐업 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7,691호로 나타났다. 2024년/2025년 신규 농장보다 폐업 농장이 더 많아 한육우 농장 수(7두 이상 규모)는 4,060호 감소하였다. 2021년/2023년 2년 동안은 한육우 농장 수가 923호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1년/2025년 4년 동안 총 6,79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연도별 신규/폐업 한육우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21/23	23/24	24/25	21/25
	(기간)	(2년)	(1년)	(1년)	(4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11,782	4,518	3,631	14,568
	그중 휴업 농장	657	266	181	892
기존 농장(경영 유지) (이전부터 농장번호 유지)		66,597	69,674	66,522	56,296
	그중 휴업 농장	2,520	3,049	3,028	2,317
폐업(이양, 판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장)		10,859	8,176	7,691	21,363
FAHMS 한육우 농장 수	비교 연도 총 농장수(B)	79,976	80,899	77,241	79,976
	당해 연도 총 농장수(A)	80,899	77,241	73,181	73,181
	A-B	923	-3,658	-4,060	-6,795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GIS 정보를 이용해 폐업(이양, 판매)한 한육우 농장의 활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4년(21/25) 동안 폐업 농장은 총 2만 1,151호였으며, 그중 1,956호(9.2%)의 부지는 축사로 활용되었으나, 1만 9,195호(90.8%)는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4/25년) 폐업 농장은 7,662호였으며, 451호(5.9%)만 축사로 활용되었고, 7,211호(94.1%)는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한우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가 (운영 상태 폐업 또는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가)	10,859	8,176	7,691	21,363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1,128	579	451	1,956
		(10.5)	(7.1)	(5.9)	(9.2)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9,632	7,553	7,211	19,195
		(89.5)	(92.9)	(94.1)	(90.8)
	합계	10,760	8,132	7,662	21,151
		(100.0)	(100.0)	(100.0)	(100.0)

주: GIS 정보로 식별한 폐업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폐업(이양, 판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신규 부지에 입지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 동안 신규 농장은 1만 4,359호였으며, 그중 1,956호(13.6%)는 기존 축사부지, 1만 2,403호(86.4%)는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4/25년) 신규 농장은 3,606호였으며, 451호(12.5%)는 기존 축사부지에, 3,155호(87.5%)는 신규 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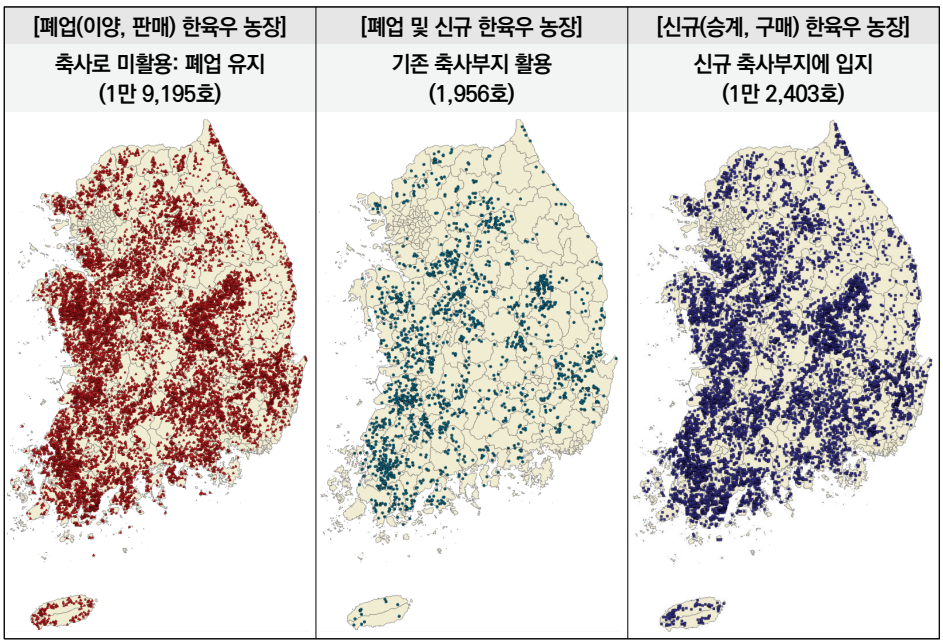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11,782	4,518	3,631	14,568
GIS 정보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1,128	579	451	1,956
		(9.7)	(12.9)	(12.5)	(13.6)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10,511	3,907	3,155	12,403
		(90.3)	(87.1)	(87.5)	(86.4)
	합계	11,639	4,486	3,606	14,359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규농장이나 당해 연도에 입식하지 않은 휴업농장 포함임.
2) GIS 정보로 식별한 신규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신규(승계, 구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4년(21/25) 동안 폐업(이양, 판매)한 한육우 농장의 분포는 경북권 4,723호(22.3%), 전남권 3,790호(17.9%), 충남권 2,987호(14.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신규 축사로 활용된 축사는 1,956호였으며, 정읍시 91호, 나주시 67호, 영주시 63호 등의 순이었다.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는 총 1만 9,195호였으며, 경주시 555호(2.9%), 상주시 476호(2.5%), 홍성군 464호(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규 부지에 입지한 한육우 농장은 총 1만 2,403호로 해남군 292호(2.4%), 구미시 286호(2.3%), 상주시 285호(2.3%), 경주시 260호(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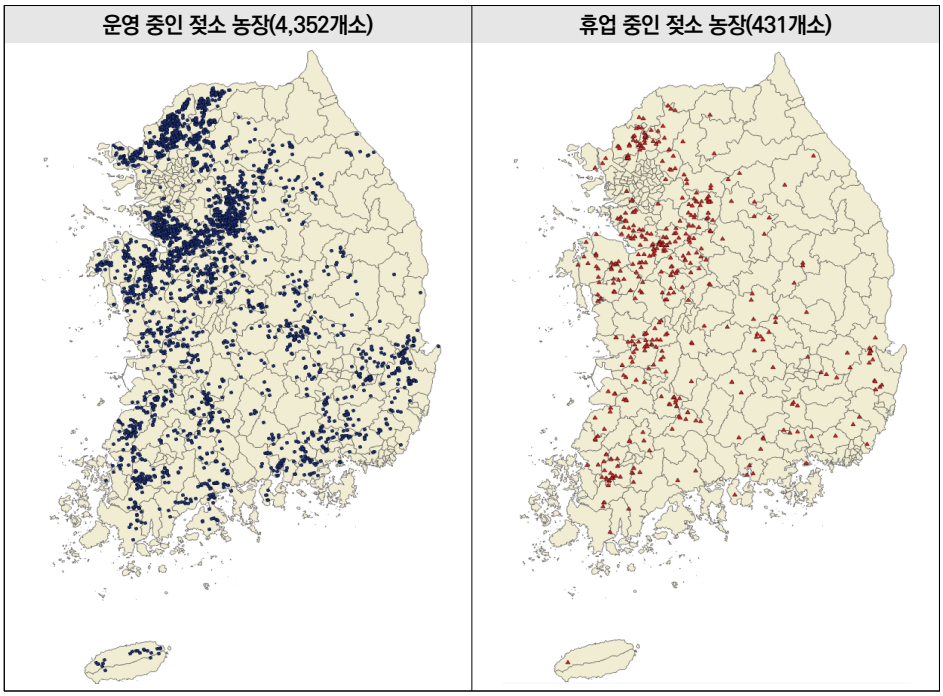


주: 시군구별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3. 젖소 농장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운영 및 휴업 중인 젖소(착유용) 농장(7마리 이상)은 4,783호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젖소 농장은 4,352호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서울) 지역이 1,733호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전/세종) 758호, 경북(대구) 408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 운영 중인 젖소 농장은 화성시 227호, 이천시 218호, 파주시 181호, 포천시 175호, 경주시 143호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주로 대도시 근교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젖소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휴업 중인 젖소 농장은 431호로 전체 농장의 9.0% 수준이었다. 지역별 휴업 중인 젖소 농장은 경기(인천) 140호, 충남(대전/세종) 95호, 전북 56호, 경북(대구) 35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안성시 21호, 화성시와 천안시 18호, 여주시 17호, 양주시 15호 등의 순으로 휴업 중인 농장이 많았다.

〈표 4-15〉 연도별 젖소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374	432	452	431
운영	4,851	4,601	4,471	4,352
팜스(FAHMS) 젖소(착유용) 농장 수	5,225	5,033	4,923	4,783
휴업비율	7.2%	8.6%	9.2%	9.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운영 중인 농장의 평균 사육 규모는 94.8마리였으며, 휴업 중인 농장의 평균 사육 규모는 57.3마리로 나타나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휴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4-16〉 젖소 농장 운영 현황과 사육규모(최대 사육규모)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운영	농장수	374	432	4,471	431
	평균 사육규모	86.0두	91.5두	93.8두	94.8두
휴업	농장수	4,851	4,601	452	4,352
	평균 사육규모	53.9두	55.6두	53.9두	57.3두
합계	농장수	5,225	5,033	4,923	4,783
	평균 사육규모	83.7두	88.4두	90.2두	91.4두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4년 6월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2025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신규(승계, 구매 등) 젖소 농장 수는 171호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실적이 있었으나 2025년 6월 운영 상태가 폐업 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311호였다. 2024년/2025년 신규 농장보다 폐업 농장이 더 많아 젖소 농장 수(7마리 이상 규모)는 140호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젖소 농장 수는 매년 신규 농장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매년 100호 이상 감소).

〈표 4-17〉 연도별 신규/폐업 젖소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460	210	171	688
	그중 휴업 농장	62	39	17	82
기존 농장(경영 유지) (이전부터 농장번호 유지)		4,205	4,300	4,198	3,746
	그중 휴업 농장	368	413	414	349
폐업(이양, 판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장)		652	320	311	1,130
FAHMS 젖소 농장 수	비교 연도 총 농장수(B)	5,225	5,033	4,923	5,225
	당해 연도 총 농장수(A)	5,033	4,923	4,783	4,783
	A-B	-192	-110	-140	-442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GIS 정보를 이용하여 폐업 농장 발생 부지에 신규 젖소 농장이 입지했는지, 폐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 동안 폐업(이양, 판매) 젖소 농장은 총 1,124호였으며, 그중 136호(12.1%)의 부지는 축사로 활용되었으나, 988호(87.9%)는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젖소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가** (운영 상태 폐업 또는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가)	652	320	311	1,130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76	29	33	136
		(11.8)	(9.1)	(10.6)	(12.1)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570	290	277	988
		(88.2)	(90.9)	(89.4)	(87.9)
	합계	646	319	310	1,124
		(100.0)	(100.0)	(100.0)	(100.0)

주: GIS 정보로 식별한 폐업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폐업(이양, 판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농장이 기존 축사가 있던 장소에 입지했는지, 신규 부지에 입지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 동안 신규 젖소 농장은 685호였으며, 그중 136호(19.9%)는 기존 축사부지, 549호(80.1%)는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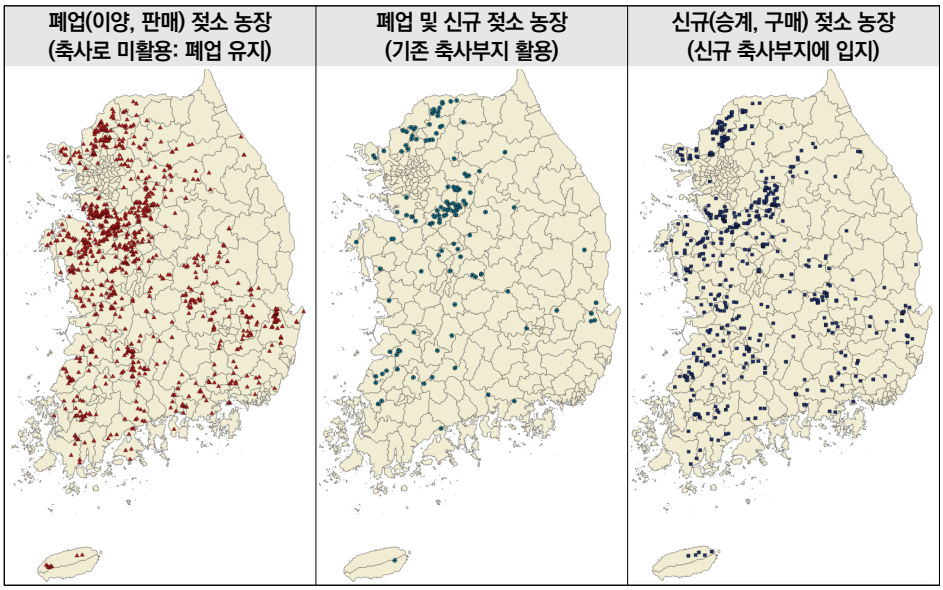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460	210	171	688
GIS 정보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76	29	33	136
		(16.6)	(13.9)	(19.3)	(19.9)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382	179	138	549
		(83.4)	(86.1)	(80.7)	(80.1)
	합계	458	208	171	685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규농장이나 당해 연도에 입식하지 않은 휴업농장 포함임.
2) GIS 정보로 식별한 신규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신규(승계, 구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4년(21/25) 동안 폐업(이양, 판매)한 젖소 농장이 신규 축사로 활용된 지역은 주로 경기권이었으며, 시군구별로는 안성시(13호), 이천시(12호), 여주시(10호) 등의 순이었다.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는 천안시(49호), 경주시와 화성시(44호), 파주시와 평택시(28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규 부지에 입지한 젖소 농장은 여주시(28호), 평택시(21호), 이천시(18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4-9〉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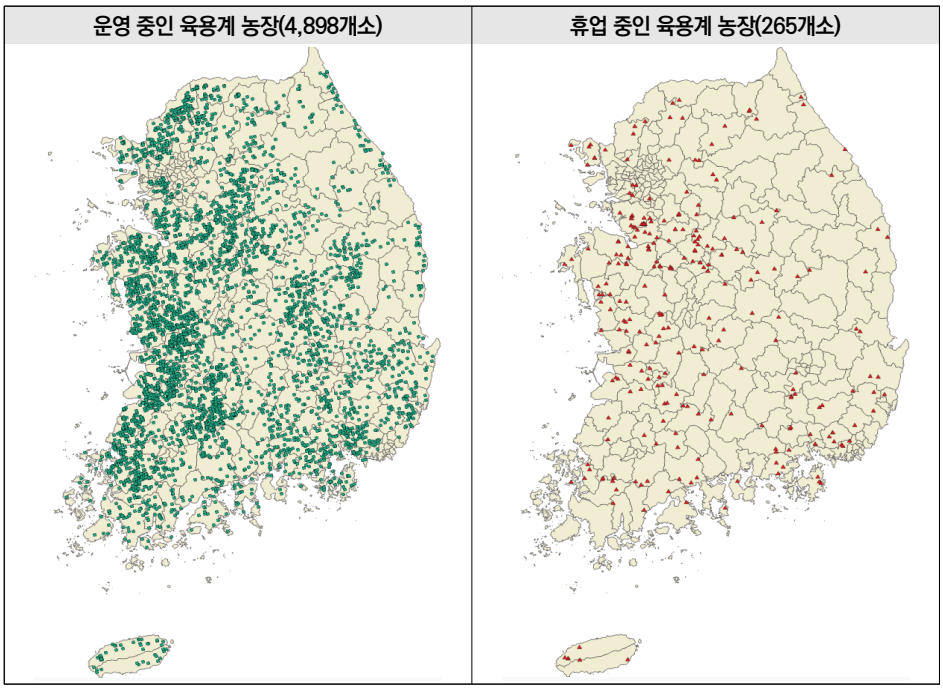


주: 시군구별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4. 육용계 농장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운영 및 휴업 중인 육용계(육계, 토종닭, 백세미 등) 농장(100마리 이상)은 5,163호로 나타났다. 그중 운영 중인 육용계 농장은 4,898호였으며, 지역별로는 전북권 986호(19.7%), 충남권 790호, 경기권 743호, 경북권 603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 운영 중인 육용계 농장은 정읍시 157호, 남원시 154호, 익산시 121호, 부여군 105호, 김제시 95호 등의 순이었다.

〈그림 4-10〉 육용계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육용계 농장 수(100마리 이상)는 5,163호였으며, 세부 축종별로는 육계 2,376호, 토종닭 1,911호, 백세미 49호, 종계 364호, 육계, 토종닭 및 종계 등을 혼합 사육하는 농장 463호였다. 사육 목적별 농장 수는 육용 전문 농장이 2,743호(53.1%)로 가장 많았고, 토종닭 중심의 기타(겸용 등) 농장이 1,593호(30.9%) 등의 순이었다.

〈표 4-20〉 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육용전문	육용종계	혼합사육 (육용계, 종계 등)	기타 (겸용 등)	합계
세부 품종	육계	2,376	0	0	0	2,376
		(86.6)	0.0	0.0	0.0	(46.0)
	백세미	49	0	0	0	49
		(1.8)	0.0	0.0	0.0	(0.9)
	토종닭	318	0	0	1,593	1,911
		(11.6)	0.0	0.0	(100.0)	(37.0)
	종계 (육계, 토종)	0	364	0	0	364
		0.0	(100.0)	0.0	0.0	(7.1)
	혼합사육	0	0	463	0	463
		0.0	0.0	(100.0)	0.0	(9.0)
합계		2,743	364	463	1,593	5,16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휴업 중인 육용계 농장은 265호로 전체 농장의 5.1% 수준이었다. 지역별 휴업 중인 육용계 농장은 경기권 60호, 충남권 53호, 경남권 33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화성시 75호, 강화군 8호, 음성군과 아산시 7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육 목적별 휴업 비중은 토종닭 농장이 많은 기타(겸용 등) 44.5%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연도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349	290	253	265
운영	6,501	5,751	5,167	4,898
팜스(FAHMS) 육용계 농장 수	6,850	6,041	5,420	5,163
휴업비율	5.1%	4.8%	4.7%	5.1%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22〉 25년 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육용전문	육용종계	혼합사육 (육용계, 종계 등)	기타 (겸용 등)	합계
운영	2,672	325	428	1,413	4,898
휴업	71	39	35	118	265
	(26.8)	(14.7)	(13.2)	(44.5)	(100.0)
합계	2,743	364	463	1,531	5,163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4년 6월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2025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신규(승계, 구매 등) 육용계 농장 수는 561호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실적이 있었으나 2025년 6월 운영 상태가 폐업 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818호로 나타났다. 4년(21/25년) 동안 신규 농장 수 1,377호 대비 3,064호가 폐업하면서 1,687호 감소하였다. 최근 1년(24/25년) 동안에도 신규 농장보다 폐업 농장이 더 많아 육용계 농장 수(100마리 이상 규모)는 257호 감소하였다.

〈표 4-23〉 연도별 신규/폐업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21/23	23/24	24/25	21/25
	(기간)	(2년)	(1년)	(1년)	(4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1,211	512	561	1,377
	그중 휴업 농장	67	21	32	84
기존 농장(경영 유지) (이전부터 농장번호 유지)		4,607	4,676	4,369	3,605
	그중 휴업 농장	223	232	233	181
폐업(이양, 판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장)		2,020	1,133	818	3,064
FAHMS 육용계 농장 수	비교 연도 총 농장수(B)	6,850	6,041	5,420	6,850
	당해 연도 총 농장수(A)	6,041	5,420	5,163	5,163
	A-B	-809	-621	-257	-1,687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GIS 정보를 이용하여 폐업 농장 발생 부지에 신규 육용계 농장이 입지했는지, 폐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년) 동안 폐업(이양, 판매) 육용계 농장은 총 3,055호였으며, 그중 284호(9.3%)의 부지는 축사로 활용되었으나, 2,771호(90.7%)는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가** (운영 상태 폐업 또는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가)	2,020	1,133	818	3,064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178	84	70	284
		(8.8)	(7.4)	(8.6)	(9.3)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1,837	1,046	744	2,771
		(91.2)	(92.6)	(91.4)	(90.7)
	합계	2,015	1,130	814	3,055
		(100.0)	(100.0)	(100.0)	(100.0)

주: GIS 정보로 식별한 폐업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폐업(이양, 판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신규 부지에 입지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년) 동안 신규 농장은 1,373호였으며, 그중 284호(20.7%)는 기존 축사부지, 1,089호(79.3%)는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4/25년) 신규 농장은 560호였으며, 70호(12.5%)는 기존 축사부지에, 490호(87.5%)는 신규 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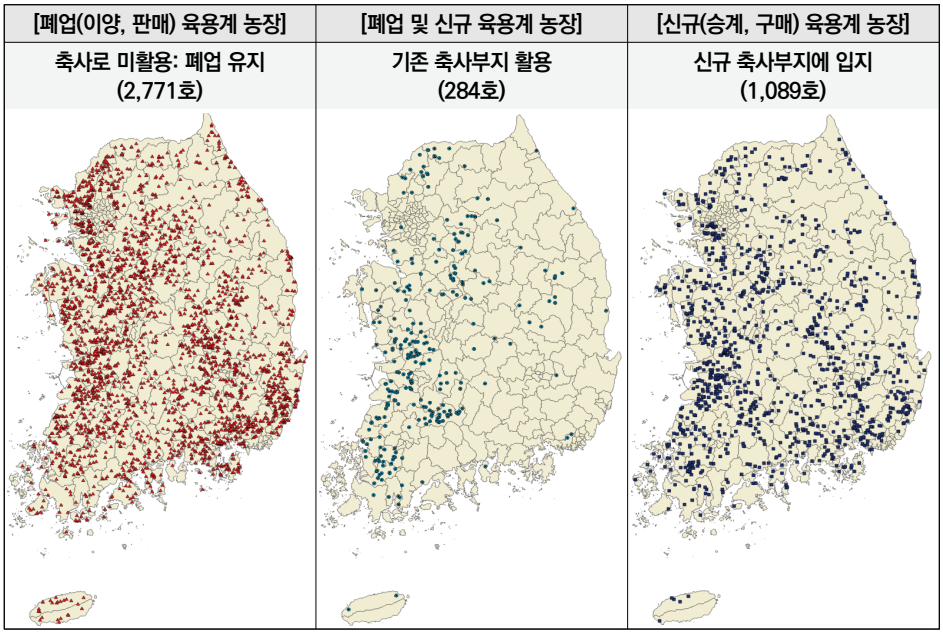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1,211	512	561	1,377
GIS 정보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178	84	70	284
		(14.7)	(16.5)	(12.5)	(20.7)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1,031	426	490	1,089
		(85.3)	(83.5)	(87.5)	(79.3)
	합계	1,209	510	560	1,373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규농장이나 당해 연도에 입식하지 않은 휴업농장 포함임.
2) GIS 정보로 식별한 신규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신규(승계, 구매) 농장 수와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4년(21/25년) 동안 폐업(이양, 판매)한 육용계 농장이 신규 축사로 활용된 축사는 총 284호였으며, 남원시(20호), 나주시(15호), 익산시(12호) 등의 순이었다.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는 총 2,771호였으며, 창원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65호), 경주시(51호), 진주시(43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규 부지에 입지한 육용계 농장은 총 1,089호로 정읍시(32호), 창원시(31호), 김제시(28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4-11〉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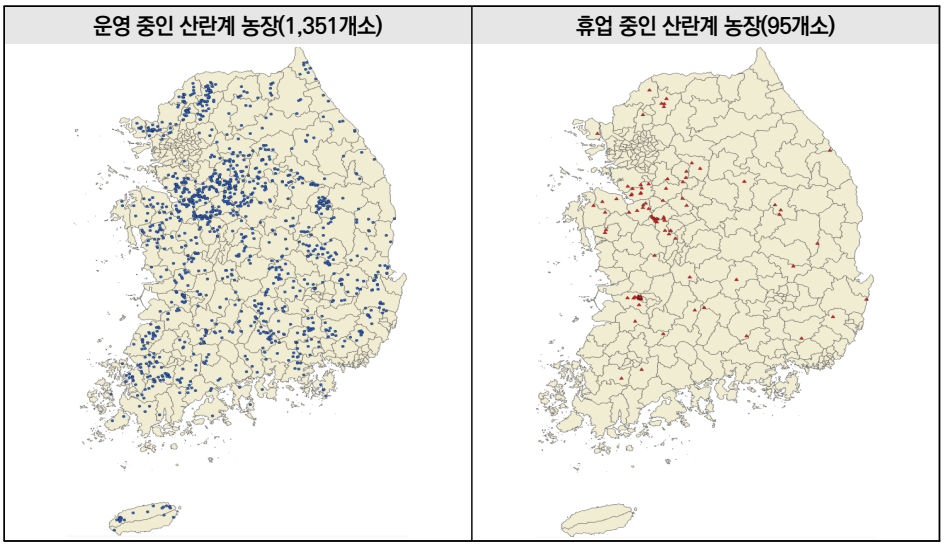


주: 시군구별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5. 산란계 농장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운영 및 휴업 중인 산란계 농장(100마리 이상)은 1,446호로 나타났다. 그중 운영 중인 산란계 농장은 1,351호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83호, 경북(대구) 219호, 충남(세종) 206호, 충북 153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별 운영 중인 산란계 농장은 천안시 64호, 포천시 49호, 음성군 38호, 안성시 33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산란계 농장 운영 현황(2025년 6월 기준)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가축동향조사에서 닭은 3천 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집계함).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사육 목적별 산란계 농장 수는 산란 전문 농장이 1,147호(79.3%)로 가장 많았고, 산란 중추 생산 농장 138호(9.5%), 혼합 사육 농장 131호, 산란종계 농장 30호로 나타났다.

〈표 4-26〉 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사육목적	산란전문	산란종계	산란중추 생산	혼합사육 (산란, 종계, 중추)	합계
농가수	1,147	30	138	131	1,446
(비중)	(79.3)	(2.1)	(9.5)	(9.1)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5년 6월 기준 휴업 중인 산란계 농장은 95호로 전체 농장의 6.6% 수준이었다. 지역별 휴업 중인 산란계 농장은 충남권 29호, 경기권 24호, 전북권 23호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김제시 20호, 천안시 8호, 평택시 7호, 아산시 6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육 목적별 휴업 비중은 산란 전문 농장이 62.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7〉 연도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146	104	121	95
운영	1,327	1,355	1,477	1,351
팜스(FAHMS) 한육우 농장 수	1,473	1,459	1,598	1,446
휴업 비율	9.9%	7.1%	7.6%	6.6%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28〉 25년 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산란전문	산란종계	산란중추	혼합사육 (산란, 종계, 중추)	합계
운영	1,088	27	118	118	1,351
휴업	59	3	20	13	95
	(62.1)	(3.2)	(21.1)	(13.7)	(100.0)
합계	1,147	30	138	131	1,446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4년 6월에 농장번호가 없었으나 2025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있는 신규(승계, 구매 등) 산란계 농장 수는 123호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6월에 농장번호 및 사육 실적이 있었으나 2025년 6월 운영 상태가 폐업 또는 농장번호 및 사육 정보가 없는 폐업(이양, 판매 등) 농장은 99호로 나타났다. 산란계 농장 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신규 농장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1년(24/25년) 동안 24호 증가하였다. 이는 산란계 사육 면적 개정 시행을 앞두고 계란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란 수급 안정 정책 등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표 4-29〉 연도별 신규/폐업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239	94	123	380
	그중 휴업 농장	32	5	3	34
기존 농장(경영 유지) (이전부터 농장번호 유지)		1,148	1,250	1,231	1,005
	그중 휴업 농장	72	78	92	61
폐업(이양, 판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장)		253	131	99	407
FAHMS 산란계 농장 수	비교 연도 총 농장수(B)	1,473	1,459	1,422	1,473
	당해 연도 총 농장수(A)	1,459	1,422	1,446	1,446
	A-B	-14	-37	24	-27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GIS 정보를 이용하여 폐업(이양, 판매) 산란계 농장의 활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4년(21/25년) 동안 폐업 농장은 총 405호였으며, 그중 68호(16.8%)의 부지는 축사로 활용되었으나, 337호(83.2%)는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연도별 폐업(이양, 판매)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폐업(이양, 판매) 농가** (운영 상태 폐업 또는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없는 농가)	253	131	99	407
GIS 정보로 식별	축사로 활용 농장	38	20	15	68
		(15.1)	(15.3)	(15.2)	(16.8)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214	111	84	337
		(84.9)	(84.7)	(84.8)	(83.2)
	합계	252	131	99	405
		(100.0)	(100.0)	(100.0)	(100.0)

주: GIS 정보로 식별한 폐업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폐업(이양, 판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신규(승계, 구매) 농장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했는지, 신규 부지에 입지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년(21/25년) 동안 신규 산란계 농장은 380호였으며, 그중 68호(17.9%)는 기존 축사부지, 312호(82.1%)는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4/25년) 신규 농장은 123호였으며, 15호(12.2%)는 기존 축사부지에, 108호(87.8%)는 신규 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연도별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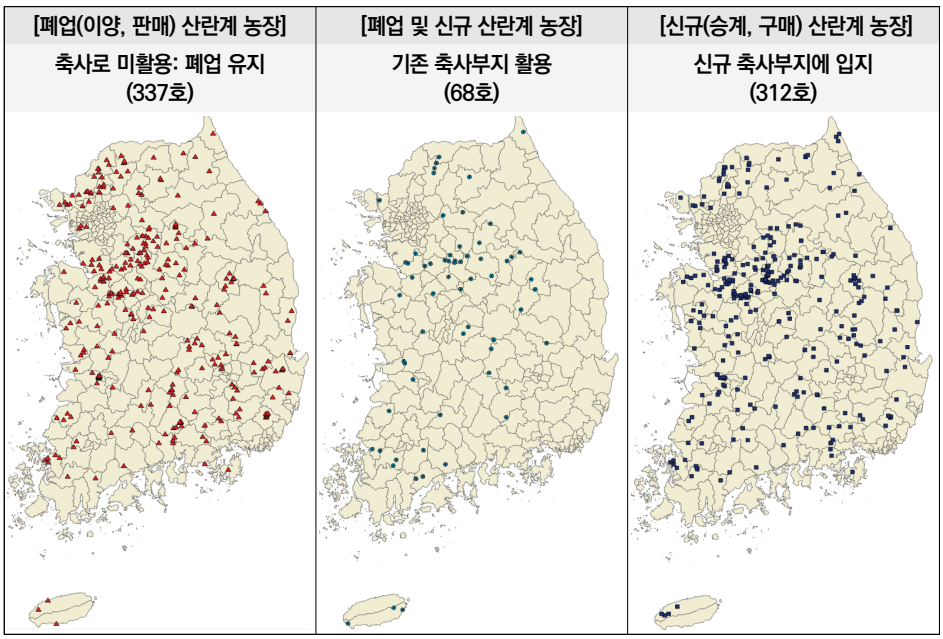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비교 연도/당해 연도 (기간)	21/23 (2년)	23/24 (1년)	24/25 (1년)	21/25 (4년)
농장번호로 식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번호가 비교 연도에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있는 농장)	239	94	123	380
GIS 정보로 식별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38	20	15	68
		(15.9)	(21.3)	(12.2)	(17.9)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201	74	108	312
		(84.1)	(78.7)	(87.8)	(82.1)
	합계	239	94	123	380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규농장이나 당해 연도에 입식하지 않은 휴업농장 포함임.
2) GIS 정보로 식별한 신규농가 세부 현황은 동일 GIS 정보에 농장번호가 다른 중복농가가 존재하여 신규(승계, 구매) 농장 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4년(21/25년) 동안 폐업(이양, 판매)한 산란계 농장이 신규 축사로 활용된 축사는 총 68호였으며, 영주시(5호), 음성군과 포천시(4호) 등의 순이었다.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업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는 총 337호였으며, 김제시(22호), 경주시(19호), 천안시(13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규 부지에 입지한 산란계 농장은 총 312호로 천안시(18호), 음성군(15호), 아산시(13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4-13〉 21/25년 폐업(이양, 판매) 및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주: 시군구별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2.6. 분석 결과 종합

2.6.1. 축사 이용

연도별·축종별 농장 수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 폐업 진행 등으로 축종별 농장 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4년간(21/25) 축종별로 한육우 농장의 감소 수(-6,795)가 가장 많았고, 육용계 농장은 감소 폭(-24.6%)이 가장 컸다.

〈표 4-32〉 축종별·연도별 농장 수

단위: 호

구분	2021년 (A)	2023년	2024년	2025년 (B)	'21/'25년 증감률(B/A-1, %)
돼지	5,510	5,333	5,205	5,134	-6.8%
한육우	79,976	80,899	77,241	73,181	-8.5%
젖소	5,225	5,033	4,923	4,783	-8.5%
육용계	6,850	6,041	5,420	5,163	-24.6%
산란계	1,473	1,459	1,598	1,446	-1.8%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축종별 축산 농가 폐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폐업 축사의 활용률은 낮았다. 축종별 폐업 축사 활용률을 보면, 4년(21/25년) 동안 돼지 31.6%, 한육우 9.2%, 젖소 12.1%, 육용계 9.3%, 산란계 16.8%였다. 축종별 폐업 축사 발생 추정량을 보면, 4년(21/25년) 동안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된 농장 수는 한육우 1만 9,195호, 육용계 2,771호, 젖소 988호, 돼지 843호, 산란계 337호 순으로 많았다.

〈표 4-33〉 축종별 폐업 축사 활용률

구분	21/23(2년)	23/24(1년)	24/25(1년)	21/25(4년)
돼지	29.0%	28.9%	40.7%	31.6%
한육우	10.5%	7.1%	5.9%	9.2%
젖소	11.8%	9.1%	10.6%	12.1%
육용계	8.8%	7.4%	8.6%	9.3%
산란계	15.1%	15.3%	15.2%	16.8%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34〉 축종별 폐업축사 발생 추정량

단위: 호

구분	돼지	한육우	젖소	육용계	산란계
21/25년 축사로 미활용 농장 수 (폐업 유지)	843	19,195	988	2,771	337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021/2025년 축종별 폐업/신규 축사의 농장당 평균 최대 사육 마릿수를 비교한 결과, 신규 농장의 농장당 평균 최대 사육 마릿수(A)가 폐업하여 축사로 미활용된 농장의 농장당 평균 최대 사육 마릿수(B)보다 모든 축종에서 더 많았다. 특히 육용계(A/B 비율 2.59), 돼지(1.65), 한육우(1.74)에서 신규 농장의 규모가 폐업 농장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4-35〉 21/25년 축종별 폐업/신규 축사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단위: 마리, 호

구분	돼지	한육우	젖소	산란계	육용계
21/25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장당 평균 최대 사육 마릿수(A)	2,594	55.5	86.9	58,623	38,553
21/25년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폐업 유지) 농장당 평균 최대 사육 마릿수(B)	1,569	31.9	65.7	45,279	14,914
A/B	1.65	1.74	1.32	1.29	2.59
〈참고〉 2025년 사육농장 평균	2,502	56.3	91.4	74,392	46,200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농가 폐업 진행 등으로 2025년 한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기반이 감소하였으나, 산란계, 육계의 사육 기반은 유지되었다. 연도별 축종별 사육 기반(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5년 6월 기준 돼지 -1.60%, 한육우 -4.05%, 젖소 -1.58%로 감소하였고, 육용계 0.09%, 산란계 0.85%로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표 4-36〉 연도별 축종별 사육기반(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돼지	1.21%	1.05%	-1.60%
한육우	9.55%	-1.76%	-4.05%
젖소	1.83%	-0.22%	-1.58%
육용계	-1.18%	-0.42%	0.09%
산란계	4.24%	0.50%	0.85%

주 1)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2) 2023년은 2021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 및 ArcGIS를 이용해 저자 작성.

3. 신규/폐업 농가 다발 시·군 특성 분석

축종별 폐업/신축 시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축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폐업 축사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육 제한 거리 규정, 인근 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제한의 엄격함과 인근 주민의 반대는 폐업 축사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영주의 고령화 정도도 폐업 축사 활용 여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축사 이전의 기회(후계자 또는 3자 양도)가 제한적인 경우 은퇴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1. 돼지 농장

돼지 농장은 축사입지 규제 환경과 농장주의 연령이 재활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폐축사 (843호) 중 상위 3개 시군은 가축사육제한거리 평균이 2,000m에 달하고 축산악취 민원 비중이 16.4%(2024년)로 폐축사가 활용되는 시군에 비해 높았다. 또한, 농장주의 70대 이상 비중이 20.6%로 폐축사가 활용된 농장(17.2%)에 비해 고령 농가의 비율이 높았다.

〈표 4-37〉 21/25년 돼지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구분		폐업 미활용(843호)			폐업축사활용(390호)			신규부지신축(466호)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m)		1,345.4	2,000.0	1,660.0	1,345.4	1,433.3	1,120.0	1,345.4	1,333.3	1,600.0
축산악취 민원비중 (시도 기준)	21년(%)	8.9	11.8	13.3	8.7	9.1	9.9	8.7	14.8	16.1
	24년(%)	7.8	16.4	16.3	7.8	10.5	11.3	7.8	11.5	13.4
전(밭)면적 비중(%)		6.1	11.0	11.4	6.1	9.3	12.5	6.1	8.7	9.7
답(논)면적 비중(%)		9.0	33.0	30.0	9.0	16.8	14.5	9.0	11.2	12.3
농장주 연령	평균 연령(세)	62.0	61.2	62.2	62.0	59.8	60.6	62.0	62.2	61.7
	60대 이상 비중(%)	64.4	61.4	68.2	64.4	51.4	53.3	64.4	69.0	65.6
	70대 이상 비중(%)	30.3	20.6	21.0	30.3	17.2	21.6	30.3	30.3	25.2
지역소멸위험지수		0.434	0.300	0.380	0.434	0.338	0.450	0.434	0.339	0.328

주 1)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임(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2)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전체 악취 민원 중에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 비중임.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일 도지역의 시군에 같은 수치를 적용함.

3)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시군 제외 평균임.

자료: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지자체별 조례, 축산악취민원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원자료, 지역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해 저자 작성.

3.2. 한육우 농장

한육우는 축사입지 규제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방치된 폐축사(1만 9,195호)가 가장 많이 분포한 상위 3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거리(766m)는 폐업축사 활용이 많은 3지역(450m)에 비해 더 엄격하였다. 축산악취 민원의 경우에도 방치축사 3개 시군의 축산악취 비율은 11.1%로 폐업축사 활용의 경우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폐업축사 미활용 3개 시군의 70대 이상 비중이 43.8%로 폐업축사 활용 3개 시군(38.3%)보다 고령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표 4-38〉 21/25년 한육우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구분		폐업 미활용(1만 9,195호)			폐업축사활용(1,956호)			신규부지신축(1만 2,403호)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 (m)		404.8	766.7	720.0	404.8	450.0	710.0	404.8	466.7	380.0
축산악취 민원비중 (시도 기준)	21년 (%)	8.7	12.9	14.1	8.7	6.2	6.2	8.7	6.3	5.7
	24년 (%)	7.8	11.1	12.8	7.8	5.9	6.0	7.8	8.5	7.0
전(밭)면적 비중(%)		6.1	8.5	7.4	6.1	10.3	9.1	6.1	8.1	7.0
답(논)면적 비중(%)		9.0	15.8	14.8	9.0	19.6	16.8	9.0	16.9	15.6
농장주 연령	평균 연령 (세)	66.7	67.2	66.6	66.7	65.1	65.6	66.7	64.3	65.6
	60대 이상 비중(%)	77.9	78.9	77.2	77.9	72.8	72.4	77.9	71.3	73.4
	70대 이상 비중(%)	43.8	43.8	41.1	43.8	38.3	37.7	43.8	33.8	39.3
지역소멸위험지수		0.434	0.248	0.232	0.434	0.277	0.364	0.434	0.375	0.312

주1)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임(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2)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전체 악취 민원 중에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 비중임.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일 도지역의 시군에 같은 수치를 적용함.

3)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시군 제외 평균임.

자료: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지자체별 조례, 축산악취민원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원자료, 지역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해 저자 작성.

3.3. 젖소 농장

젖소 축사 입지의 흥미로운 부분은 폐업축사 미활용이 많은 3개 시군의 지역소멸위험 지수가 타 축종 축사 입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폐업 젖소 농장이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입지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활용이 많은 3개 시군의 사육제한 거리도 883m로 활용지역(616m)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표 4-39〉 21/25년 젖소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구분		폐업 미활용(988호)			폐업축사활용(136호)			신규부지신축(549호)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 (m)		422.5	883.1	652.6	404.8	616.7	590.0	404.8	633.3	620.0
축산악취 민원비중 (시도 기준)	21년 (%)	8.7	14.2	12.6	8.7	7.8	11.2	8.7	10.3	10.3
	24년 (%)	7.8	12.5	11.2	7.8	9.1	12.7	7.8	9.3	9.3
전(밭)면적 비중(%)		6.2	7.9	8.4	6.2	7.9	7.2	6.2	11.2	10.7
답(논)면적 비중(%)		9.2	15.3	18.7	9.2	10.6	11.6	9.2	23.1	17.1
농장주 연령	평균 연령 (세)	63.4	62.7	62.8	63.4	57.8	57.7	63.4	61.9	62.4
	60대 이상 비중(%)	72.6	62.6	65.5	72.6	55.4	53.5	72.6	65.4	69.1
	70대 이상 비중(%)	33.3	27.9	26.5	33.3	19.9	17.7	33.3	24.6	26.1
지역소멸위험지수		0.434	0.773	0.777	0.434	0.392	0.349	0.434	0.602	0.536

주1)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임(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2)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전체 악취 민원 중에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 비중임.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일 도지역의 시군에 같은 수치를 적용함.

3)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시군 제외 평균임.

자료: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지자체별 조례, 축산악취민원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원자료, 지역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해 저자 작성.

3.4. 육용계 농장

육용계 축사는 농장주의 고령화가 폐축사 방치의 핵심 원인으로 추측된다. 폐업축사 미활용이 많은 3개 시군의 70대 이상 비율은 51.7%로 폐업축사 활용이 많은 지역(22.7%)에 비해 뚜렷하게 고령농가 비중이 높았다.

〈표 4-40〉 21/25년 육용계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구분		폐업 미활용(2,771호)			폐업축사활용(284호)			신규부지신축(1,089호)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 (m)		1,073.5	800.0	1,040.0	1,073.5	933.3	960.0	1,073.5	800.0	880.0
축산악취 민원비중 (시도 기준)	21년 (%)	8.7	10.1	11.5	8.9	7.2	7.4	8.7	10.2	8.8
	24년 (%)	7.8	7.1	8.3	7.8	11.2	11.9	7.8	9.7	11.0
전(밭)면적 비중(%)		6.2	3.9	5.5	6.2	8.5	9.1	6.2	5.6	6.3
답(논)면적 비중(%)		9.2	10.5	11.3	9.2	26.1	28.4	9.2	14.7	19.9
농장주 연령	평균 연령 (세)	64.8	67.2	66.1	64.8	60.2	60.4	64.8	64.9	63.3
	60대 이상 비중(%)	77.4	76.4	75.3	77.4	57.6	60.2	77.4	74.5	68.8
	70대 이상 비중(%)	41.1	51.4	46.2	41.1	22.7	22.6	41.1	35.5	31.0
지역소멸위험지수		0.434	0.407	0.484	0.434	0.331	0.283	0.434	0.386	0.313

주1)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임(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2)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전체 악취 민원 중에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 비중임.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일 도지역의 시군에 같은 수치를 적용함.

3)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시군 제외 평균임.

자료: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지자체별 조례, 축산악취민원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원자료, 지역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해 저자 작성.

3.5. 산란계 농장

산란계 농장의 폐업축사 활용 여부는 축산악취 민원 비중에 큰 영향을 받았다. 폐업축사 미활용이 많은 3개 시군의 평균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13.7%로 폐업축사 활용이 많은 3개 시군(6.3%)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2024년). 이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해 축사가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4-41〉 21/25년 산란계 농장 폐업/신축 시군 특성

구분		폐업 미활용(337호)			폐업축사활용(68호)			신규부지신축(312호)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전체 시군	상위 3개 시군	상위 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 (m)		1,073.5	1,166.7	1,260.0	1,073.5	1,200.0	1,380.0	1,073.5	1,433.3	1,320.0
축산악취 민원비중 (시도 기준)	21년 (%)	8.7	13.0	14.6	8.7	6.7	8.1	8.7	18.3	13.0
	24년 (%)	7.8	13.7	13.3	7.8	6.3	7.5	7.8	17.0	13.7
전(밭)면적 비중(%)		6.2	7.6	7.5	6.2	10.2	9.5	6.2	9.7	9.3
답(논)면적 비중(%)		9.2	21.8	17.9	9.2	10.2	16.4	9.2	16.7	20.7
농장주 연령	평균 연령 (세)	62.8	60.8	60.3	62.8	63.7	63.0	62.8	62.6	59.7
	60대 이상 비중(%)	71.8	57.7	57.5	71.8	69.3	64.6	71.8	64.1	56.3
	70대 이상 비중(%)	39.0	24.8	22.2	39.0	25.6	24.6	39.0	26.6	20.6
지역소멸위험지수		0.434	0.457	0.358	0.434	0.275	0.435	0.434	0.643	0.519

주1)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임(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2) 축산악취 민원 비중은 전체 악취 민원 중에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 비중임.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일 도지역의 시군에 같은 수치를 적용함.

3)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시군 제외 평균임.

자료: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지자체별 조례, 축산악취민원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원자료, 지역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5. 2. 5.),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해 저자 작성.

제5장

축산업 성장기반 유지 방안

제5장

축산업 성장기반 유지 방안

1. 축사 승계/매매/임대 및 폐축사 활용/환원

고령화와 신규 진입 부진으로 인한 인력구조의 붕괴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23년 기준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4.1%이며, 특히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29.1%에 이른다. 전체 농가 고령화율 66.4%나 논벼(71.1%)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0년 29.6%에서 급증하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농의 빈자리를 채울 후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후계자가 없는 농장은 본 보고서 조사 결과 69.7%에 달했다. 후계자가 있으면 축사를 상속하면 되지만, 없으면 축사 거래 시장을 이용해야 하고, 거래가 안 되면 유휴축사로 남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는 폐업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5년간 주요 축종 농가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 절은 축사 승계 및 매매/임대 시장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축사로 활용되지 못해 유휴축사로 버려지는 폐축사의 처리방안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1.1. 축사 승계/매매/임대 현황 및 문제점

1.1.1. 후계자 상속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79년 1,200만 원 한도로 시작하여 농업 규모 확대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꾸준히 상향되었으며, 2023년에는 공제 한도가 재산 가액 3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적용 건수는 691건, 공제금액은 4,01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엄격한 자격 조건이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비현실적 소득 제한도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후계자에게 농장 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6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사는 제3자 매매를 준비해야 한다.

1.1.2. 축사 거래시장 현황

승계가 어려운 고령 농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매매나 임대지만, 현재 축사 거래는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비대칭이 큰 시장이다. 이는 축사 자산의 유동성을 극도로 저해하며 세대 간 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 평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지만 축사 매매 시장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축사는 토지, 건물, 자동화 설비, 분뇨처리 시설 등 부속시설과 허가권이 결합된 특수한 부동산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등 일반 부동산 평가 원칙에 의존하나, 입지 규제에 따른 희소성, 최신 환경설비 가치,

실제 운영 수익성 등 핵심 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치평가 공백은 감정평가 신뢰도를 떨어뜨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장애요인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부재는 금융기관의 담보 인정 어려움으로 이어져 농가의 자금 조달 능력을 제약하며, 이는 농업 금융이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결국 이는 축산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본 유입을 막는다.

아래 <표 5-1>은 축사 이전 방식별 비교 분석이다. 이를 통해 각 방식의 제도적, 시장적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표 5-1〉 축사 이전 방식별 비교 분석

구분 항목	상속	매매
장점	- 가업의 연속성 유지 - 경영 노하우 전수	- 자산의 완전한 현금화 - 은퇴 자금 확보 용이
단점	-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 복잡한 공제 요건	- 양도소득세 부담 - 적정 매수자 탐색 어려움
주요 법적/세제 쟁점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사후관리 의무	-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 농지법상 매수자 자격
핵심 성공 요건	- 장기적인 사전 계획 - 세무 전문가 컨설팅	-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 투명한 거래 플랫폼

자료: 저자 작성.

1.1.3. 복잡한 규제 환경

축사 거래 시장은 여러 법률이 얽힌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축사는 농지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농지법의 적용[1]을 받아, 매입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비농업인의 축사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도 축사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신규 축사 건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주민 민원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기존 축사의 입지적 가치(기득권)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악취·분뇨 처리 규제 강화는 기존 축사의 운영

1)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축사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축사 건축은 목장용지에서 가능하였다.

비용을 증가시켜 자산 가치 평가 시 감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편차가 크고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하여 신규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1.1.4. 정보 비대칭성 시장

축사 거래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이다. 매물 정보, 임대료, 실거래가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는 공신력 있는 정보 플랫폼이 부재하다. 거래는 소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탐색 및 거래 비용을 발생시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농가의 20.4%가 민원 경험이 있으며, 주된 원인은 악취 문제(94.1%)로 나타나, 위치와 환경 요인이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1.1.5. 폐축사의 방치

상속이나 매매에 실패한 축사는 유휴 또는 폐축사로 방치되어, 개인 자산 손실을 넘어 농촌 공간의 질 저해 및 사회적 비용 유발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관점을 전환하면 폐축사는 새로운 가치 창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기도 하다.

폐축사 증가는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 축산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중단이 가장 크며,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노후 축사 재사용의 경제성이 악화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폐축사 방치에 관한 정확한 전국 통계는 부족하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FAHMS 데이터 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폐업한 돼지 농장 1,233호 중 68.4%(843호)가 축사로 활용되지 못했고, 한육우는 2만 1,151호 중 90.8%(1만 9,195호), 젖소는 1,124호 중 87.9%(988호), 육용계는 3,055호 중 90.7%(2,771호), 산란계는 405호 중 83.2%(337호)가 미활용 상태로 남았다. 이는 폐업 축사의 활용률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방치된 폐축사는 농촌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아 지역 사회에 상당

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폐축사 활용 방안은 크게 가축 사육 목적 재사용과 복합문화공간, 농촌체험 등 비농업적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상당한 리모델링 비용이 수반되며, 특별한 입지 조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유휴상태로 방치된다.

폐축사 재사용의 성패는 경제성과 규제에 달려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축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더 근본적인 장벽은 강화된 환경 규제다. 과거 기준의 폐축사를 현재 축산업 용도로 재사용하려면 강화된 악취 저감, 분뇨 처리, 저탄소 사양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은 막대하여 신축 비용에 육박해 재사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결국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많은 유휴 축사를 본래 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좌초자산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공 개입과 환원(철거) 정책의 배경이 된다. 무허가 축사 문제 역시 합법적 재사용을 가로막는다.

1.2. 효율적 축사 활용 방안

1.2.1. 축사은행 도입

축사은행 설립 필요성은 앞서 분석한 시장의 구조적 문제, 즉 가치평가 기준 부재, 극심한 정보 비대칭성, 복잡한 법적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축사은행의 비전은 축사 자산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축산 자산관리 허브로서, 자산 유동성 극대화, 세대 간 원활한 이전 지원, 농촌 공간의 효율적 재구조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축사은행의 기능은 아래의 <표 5-2>로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정보 플랫폼 기능은 전국 단위의 축사 현황, 유휴 축사 실태, 매매·임대 희망 정보, 실거래가 등 핵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 중개 및 컨설팅 기능은 매도자와 매

수자(또는 신규 진입자)를 연계하여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세무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사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가치 평가 기능은 축사의 부속 설비와 입지, 생산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표준화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매입·비축 및 임대 기능을 통해 경영난으로 인한 유휴 축사를 축사은행이 직접 매입·비축한 후, 청년·신규 축산인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축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보제공 및 거래 중개 역할에 추가하여 정책 및 재기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및 재기 지원 기능은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정부의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실패한 축산 경영주가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임대형 영농 모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구조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표 5-2〉 축사은행의 주요 기능 설계

구분	내용
정보 플랫폼 기능	전국 축사 현황, 유휴 축사 실태, 매매·임대 희망 정보, 실거래가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투명 공개.
거래 중개 및 컨설팅 기능	매도자와 매수자(임차인) 연결 중개·알선 서비스 제공, 영농상속공제 등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가치 평가 기능	축사 특수성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모델 개발·보급, 표준화된 평가 서비스 제공
매입·비축 및 임대 기능	은퇴 희망 또는 경영 어려운 농가 축사 직접 매입 후 자산 조성, 스마트 축사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농 등 신규 진입자에게 장기 저리 임대 또는 분양.
정책 연계 기능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성 없는 유휴 축사의 매입 및 환원(철거) 절차.
재기 지원 연계	경영회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패한 신규 진입자가 자산을 축사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축사를 재임대하여 영농을 지속할 기회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선행 연구에서도 축사은행 제도가 젊은 인력 유입 기반 강화 대책으로 제안되었으며, 기존 농가와 청년 창업농 모두 제도 도입에 공감대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농협의 농지 소유 제한 문제로 과거 시범사업이 실패했으며, 현재 농

지은행을 운영 중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실적 운영 주체로 거론된다. 성공적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1.2.2. 유휴 축사 활용 및 처리

활용 가치가 낮거나 주변 환경 악영향이 큰 폐축사는 환원(철거)을 통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폐축사 환원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주에게 있으나, 방치만을 이유로 철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공공 안전 위협(붕괴, 화재 등) 경우가 아니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며, 현실적 방안은 자발적 철거 유도 및 비용 지원이다.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마을 내 산재한 축사 등 유해요소를 계획적으로 정비(철거/이전)하고 확보된 공간을 주민 공공 공간으로 재생하여 쾌적한 농촌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며, 선정 지구에는 5년간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규모 사업비가 국비 50% 매칭으로 지원된다.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유해시설(축사 등) 철거 및 이전 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으로, 사업 초점이 유해시설의 근본적 제거에 있음을 보여준다. 괴산군 신풍지구, 합천군 웅기지구 등이 대표 사례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닌다. 재원이 국비·지방비 보조에 의존해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있고, 철거 대상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객관적 감정평가 기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모델 다각화, 철거 후 부지 활용 계획 시 경제적 자립성 강화, 기존 축사 철거와 신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연계 등 통합적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순 환경개선 사업을 넘어 사실상의 축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기능한다. 경쟁력 상실 및 환경규제 준수 어려운 한계 축사를 공공 재원으로 계획적으로 퇴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비효율적 소규모·노후 축사가 정리되고, 축산업 전체의 평균 시설 수준과 경쟁력

을 상향 조정하는 거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축사 철거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농가 협의 절차 및 보상 기준 미흡, 부지 소유권 문제, 자발적 정비 유인 부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ICT 스마트축산 보급 촉진 방안

축산업이 마주한 위기는 내부 구조 붕괴(노동력 고령화, 후계 부족)와 외부 환경 압박(환경 규제 강화, 탄소중립 의무)으로 구분된다. 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은 노동 집약적 사양 관리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악취, 분뇨 처리 등 환경 문제 민감도 증가는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CT 스마트축산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축산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 장비가 적용된 축사(협의)뿐 아니라 장비 공급 산업(광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스마트축산은 기능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며, 1세대는 원격 모니터링과 기본 자동화, 2세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의사결정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스마트축산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산성 향상, 환경 규제 준수, 동물복지 개선을 통해 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경로다.

2.1. 보급 확산의 장벽

스마트축산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8%가 이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투자수익률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

기술에 큰 규모의 부채를 감수하기 주저한다. 현재 제공되는 정책자금 등 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일반 시설자금 대출 형태여서 기술 도입 프로젝트 현금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 신규 진입 희망 청년들도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가장 큰 진입 장애요인(4.6점/5점) 및 진출 포기 이유(60%)로 지적했다.

농가 현장에서는 기술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다. 잦은 장비 고장, 다른 제조업체 장비 간 호환성 부재(상호운용성 부족),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저에는 데이터 표준 부재라는 핵심 인프라 격차가 있다. 데이터 표준이 없으면 서로 다른 장비와 농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기 어렵고, 이는 2세대 스마트축산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기술적 걸림돌이다.

데이터 표준화는 단순 기술 과제를 넘어 스마트축산 생태계 전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축이다. 표준 없이는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질병 예측, 품종 개량 등 대규모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이 어려워지고, 장비 능력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는 2세대 핵심 가치인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기반 학습을 차단하며, 특정 업체 종속 심화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데이터 표준 제정과 의무화를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2세대로 진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고령화된 농업 인구의 낮은 디지털 활용 능력과 기술 이해도는 스마트 기술 보급의 중요한 장벽이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 컨설팅, 설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계획하는 것은 이러한 인력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ICT 스마트축산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

2세대 스마트축산 도약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스마트축산 장비에 대해 데이터 형식, API, 통신 프로토콜 등을 포괄하는 국가표준(KS) 개발 및 도입 의무화가 필요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진 중인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전시켜, 단순 데이터 저

장 창고가 아닌 생태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핵심 기능을 구체화해야 한다. ① 안전한 데이터 수집 및 익명화, ② 농가별 성과 벤치마킹 분석 정보 제공, ③ AI 질병 예측 등 제3자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인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다층적 교육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령 농업인 대상 기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전문 경영인 대상 데이터 분석·활용 심화 교육, 청년 인력 대상 스마트 장비 유지보수 기술 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여, 인증된 전문가가 현장 방문 진단, 데이터 해석,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등 현장 해결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과 실제 영농 간극을 메우는 핵심 인력으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 모태펀드 규모 확대, 스마트축산 스타트업 투자 확대 등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축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신개념 분뇨 처리 기술 개발 스타트업들이 규제 제약 없이 실제 농가에서 기술 실증 및 고도화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필요하다. 스마트축산 수출 지원단 운영 등 수출 지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축산업의 스마트 기술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필수 과제다. 인구 구조 붕괴, 강화되는 환경 규제,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는 산업 근간을 위협하며, ICT 스마트축산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가장 유력한 해법이다.

3. 신규 인력 유입 촉진

3.1. 청년농 진입 촉진 정책 및 문제점

축산업은 본질적으로 초기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장치 산업이다. 특히 축사 신축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청년농의 진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축산업은 오염산업으로 인식되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점도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오염산업 인식은 더 나아가 규제로 현실화하여 축사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농업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규 진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초기 자본 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50세, 영농경력 10년 이하(무경력자 포함), 관련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시설 구입/임차,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소득이 없는 청년농에게 3년간 월 11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후계농 자금 지원 규모 5억 원은 재배업과 달리 장치산업화된 축산업에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융자 규모와 별개로 진입 실패 시 신규 진입자는 큰 부채를 안고 재기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교육 및 경험을 쌓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 지식부족, 자금 부족으로 작은 위기에도 실패할 수 있다. 축산업은 질병, 사양관리 외에도 통제 불가능한 기상 및 시장 상황으로 안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축산업에 대한 입지제한 규제는 축사부지 마련에 장애물이다.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 접근이 양호한 입지는 입지제한 규제에 막힐 가능성이 높고, 입지제한 규정을 벗어난 지역은 인프라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마련(또는 축사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 관심은 충분치 않다.

3.2.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방안

축산업 신규 진입농을 위한 정책방안은 (1) 경험과 지식을 얻을 기회 제공, (2) 초기자금 마련 지원, (3) 축사(또는 축사부지) 마련 지원, (4) 진입 실패 시 재기 기회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과 (2)의 경우 현재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3)과 (4)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은 최근 농업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였으며, 다양한 금융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의 신규 진입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질적 원인은 자본의 부족, 축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의 부재, 오염산업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둔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있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설령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더라도 축산업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3.2.1. 축사 확보 지원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청년농에게 축사 건축 용도의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의 지원책은 입지를 찾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시선을 바꾸지 못하는 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개별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에서 공공이 인허가 및 민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농이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 오직 사육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 방식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주도형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델과 둘째, 기성 축사를 공공이 매입 또는 중개하여 청년농에게 연결하는 모델이다.

가. 공공주도형 축산지구

신규 인력의 가장 큰 장벽인 부지 확보 문제 는 현행 규제 환경 하에서 개별 농가 수준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주민 동의 요구라는 강력한 규제 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공공이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집단화와 공동 관리를 통해 공공이 흡수하고 관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신규 농가

가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 오직 사육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주거지와 격리된 원격지에 축산단지를 집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추진 방안은 주거 밀집 지역과 완전히 격리된 원격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공공이 사업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 주민 협의,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이후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본 인프라를 공공 재원으로 구축한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 처리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도 필요하다. 이는 개별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과 악취 민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장치이다.

공급되는 축사는 단순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1세대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관리가 가능한 2세대 스마트축산 기술을 표준 사양으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신규 인력이 진입과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단지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이 된다.

신규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지구의 공급 방식은 분양과 함께 장기 임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신규 농가는 막대한 토지·건축 비용 대신, 임대료와 운영자금만으로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자산 경량화 진입이 가능해진다. 일정 기간 의무 임대 후, 분양 전환(우선 매수권 부여) 또는 임대 연장을 선택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초기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다.

나. 기성 축사 거래 중개

공공주도형 축산지구가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축사 은행은 기존 유휴·폐축사를 순환시키는 자산 재활용 전략의 핵심이다. 현재 기성 축사 시장의 문제점은 정보 비대칭성, 가치평가 부재,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로 요약된다. 축사 은행은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고령 농가의 자산 유동화(은퇴 지원)와 청년 농

가의 자산 확보(진입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축사은행의 실행 로드맵은 1단계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국 축사 자원 실태조사(DB 구축)를 하고, 2단계로 축사 표준 감정평가 모델 및 ICT 리모델링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3단계는 폐축사 다수 발생 지역 대상 매입·비축·임대 시범사업 착수이며, 4단계는 정보 플랫폼(중개) 기능 우선 개시 후 자산관리(매입·임대) 기능을 순차 확대하는 것이다.

3.2.2. 재기 지원

신규 진입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본 확보다.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50세, 영농 경력 10년 이하(무경력자 포함), 관련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시설 구입/임차,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융자에만 집중하여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 실패 가능성은 다루지 않고 있다. 축산업은 질병, 사양관리 외에도 통제 불가능한 기상 및 시장 상황으로 안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진입 실패 시 신규 진입자는 큰 부채를 안고 재기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교육 및 경험 유도에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 자금 부족으로 작은 위기에도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기 형식은 납입 연장, 채무 조정,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등이 될 수 있다. 기존 재배업 농가 대상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축산농가를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지은행에 해당하는 축사 은행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위험 농가의 자산을 축사 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축사를 재임대하여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인력구조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영주 고령화가 타 농업 분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이 54.1%에 달한다. 이는 2010년 29.6%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계 인력의 부재로 인한 세대 단절 현상이다. 조사 결과, 전체 축산농가의 69.7%가 확정된 후계자가 없으며, 이 중 대부분(67.9%)은 후계자 발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우 농가는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이 71.7%에 달해 산업 기반 붕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후계자 부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악취, 고강도 노동 등)'(65.9%)이 꼽혔으며, 복잡한 환경 규제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 농가의 은퇴 계획은 '제3자 매각'(52.5%)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 축사 거래 시장은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 표준화된 가치평가 기준의 부재, 복잡한 규제, 극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다.

이로 인해 운영되던 축사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이전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유휴·폐축사 문제가 발생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업 농장의 축사가 신규 농장에 의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돼지(31.6%)를 제외하면 한우(9.2%), 젖소(12.1%), 산란계(16.8%), 육계(9.3%) 등 대부분의 축종에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 자산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노동(신규 인력 확충), 시설(유휴·폐축사 활용), 기술(ICT 스마트축산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축산 관련 전공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업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77.3%)를 갖고 있으나, 경제적 안정성(77.3%가 불안정하다고 응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신규 진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89.4%)과 '축사부지확보의 어려움'(87.9%)을 꼽았다. 이는 신규 축사 건축을 제한하는 강력한 입지 규제와 불투명한 기존 축사 거래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진입 예정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역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90.9%), '축사부지 및 시설 확보 지원'(89.4%), '소득 보전 지원'(89.4%)으로 나타나, 자본과 자산 접근성 문제가 청년 유입의 핵심 걸림돌임이 확인되었다.

ICT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기술은 대부분 원격 모니터링(CCTV)이나 자동 급이·급수기 등 기초적인 1세대 기술(85%)에 편중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관리가 가능한 2세대 기술 도입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하드웨어 설비 보조에만 집중되어, 농가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장비는 갖추었으나 이를 통합·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은 부족한 '1.5세대 함정'에 빠져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의 초점을 '설치 지원'에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성과 창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비현실적인 소득 제한, 영농 종사 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축사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축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성과 입지 조건이 양호한 유휴 축사는 스마트 축사 전환 등을 통해 재활용을 유도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폐축사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철거(환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산업 구조 조정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2세대 스마트축산으로의 질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문 컨설턴트('스마트농업관리사') 양성이 시급하다. 정책 지원 방향을 하드웨어 보조금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 서비스 및 성과 창출 컨설팅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 경량화 모델 도입이 중요하다. 축사 임대를 통한 진입 경로를 활성화하고,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채무 조정,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등)을 구축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격리된 원격지에 축산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정보 비대칭, 자산 유동성 부족, 신규 진입 장벽)를 해결할 핵심 허브로서 축사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축사은행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전국 축사 정보 플랫폼 구축 및 투명한 정보 제공하며, ② 매매·임대 중개 및 법률·세무 컨설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③ 표준화된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④ 유휴 축사 매입·비축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농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대할 뿐만 아니라, ⑤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한 폐축사 환원(철거)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축사 은행은 단절된 축산자원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고, 고령 농가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의 성공적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축산업 종사자 경영 및 인력 관련 실태조사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업 종사자 경영 및 인력 관련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에서는 국내 축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인식, 경영 및 인력구조, 후계승계 계획, 스마트 축산 도입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고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축산경제연구실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김경진 연구원(☎ 061-820-2190)	실사 기관	

■ 농가의 일반 현황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 세

A3. 귀하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총 ____ 년

A4. 귀하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____ 시간

A5. 귀하의 농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_____ 도(시) _____ 시/군

A6. 귀하가 사육하고 있는 주요 축종은 어떻게 되십니까?(가장 비중이 큰 축종 선택)

① 한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육계 ⑤ 산란계 ⑥ 오리
⑦ 기타(_____)

A7. (6번 문항에서 선택 축종에 한하여) 귀하의 농장 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분		사육규모(마리)	구분		사육규모(마리)
한육우	총 사육 마릿수		육계	총 사육 마릿수	
	그 중 번식우			그 중 종계	
돼지	총 사육 마릿수		산란계	총 사육 마릿수	
	그 중 모돈			그중 종계	
젖소	총 사육 마릿수		오리	총 사육 마릿수	
	착유우			그 중 종오리	

A8. 귀하는 농장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농업회사법인 ② 개인/가족농

A9. 귀하 농장의 축산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업: 농가 소득의 대부분을 축산에서 얻는 형태 (축산만으로 생계를 유지).
1종 겸업: 축산을 주업으로 하되 일부 작물 재배나 부업을 병행하는 형태.
2종 겸업: 주업은 다른 산업(작물·비농업)이고, 축산은 보조적·부업적 성격인 형태.

① 전업 ② 1종 겸업 ③ 2종 겸업

A10. 귀하 농장의 2024년 기준 **축산업 부문의 연간 총 매출액(조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⑥ 10억 원 미만

A11. 귀하의 농장에서 획득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무항생제 축산물	□	HACCP
□	유기 축산물	□	깨끗한 축산농장
□	동물복지 축산농장	□	저탄소 축산물
□	방목생태 축산농장		

A12. 다음은 축산농가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3순위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사료, 유류비 등 생산비 급등	⑥	불안정한 축산물 가격 및 낮은 수익성
②	환경 규제 강화 (부숙도 등)	⑦	금융기관 대출 및 부채 관리
③	인근 주민의 민원(악취 등)	⑧	축사 신축/증축 및 시설 현대화의 어려움
④	필요 인력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⑨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⑤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규제	⑩	기타 ( )

A13. 귀하께서는 축산업 경영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B1으로 이동)

A13-1.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총 몇 차례 민원을 제기 받으셨습니까? (_____)회
[범위] 1 ~ 100회

A13-2. (중복응답) 무엇 때문에 민원을 제기 받으셨습니까?

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④	축사 및 축산시설 관련 문제 (무허가 축사 등)
②	축산 악취 문제	⑤	기타 ( )
③	소음 문제		

A13-3. (중복응답) 민원을 제기 받은 결과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①	고발	④	민원 취하(합의 등)
②	과태료 ( )만원	⑤	기타 ( )
③	계도		

■ 인력 구성 및 부족 현황

B1. 귀하의 농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본인 포함 총 몇 명입니까?(유형별 인력 기재)

• 가족 노동력(급여 무관):	
본인/배우자/자녀/기타가족	( )명
위 노동력 중 상시근로	( )명
• 내국인 고용 인력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 )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 평균)	( )명
• 외국인 고용 인력:	
고용허가제(E-9)	( )명
숙련기능인력(E-7-4)	( )명
방문취업(H-2)	( )명
계절근로자	( )명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 )명

B2. 귀하는 현재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다 ③ 보통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B3. 귀하는 현재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어떠한 경로로 조달받습니까?

B3-1. 내국인 근로자

①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⑤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②	관련 직업학교나 대학(축산학과 등)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인턴십, 실습생)	⑥	인력중개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③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⑦	지역 방송, 현수막, 전단지, 마을 방송 등
④	기타( )	⑧	

B3-2. 외국인 근로자

①	고용허가제(E-9 비자) 활용	⑤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②	가족, 친척, 지인 등 소개(소개비 없음)	⑥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③	인력중개업소 등 민간 서비스 업체	⑦	지역 방송, 현수막, 전단지, 마을 방송 등
④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⑧	기타( )

B4. (중복 선택)인력 부족으로 인해 귀하의 농장 운영에 발생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	경영주 본인 및 가족의 노동 강도 심화	□	계획했던 농장 확장 계획 포기
□	시설 보수 등 필수 작업의 지연	□	가축 관리 소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또는 동물복지 수준 하락
□	사육 규모 축소 또는 폐업 고려	□	높은 인건비 지불로 인한 생산비 증가
□	기타 ( )		

■ 고령화 및 후계 승계 계획

C1. 귀하는 축산업에서의 은퇴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5년 이내 ② 6~10년 이내 ③ 11~15년 이내 ④ 15년 이후 ⑤ 은퇴 계획 없음

C2. 귀하는 현재 농장 경영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있습니까?

① 예, 확정된 후계자가 있습니다. (C2-1, C2-2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하지만 후계자를 찾거나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C2-3 문항으로 이동)
③ 아니오, 후계자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C2-3 문항으로 이동)

C2-1. (후계자가 있는 경우) 후계자는 어떤 사람 입니까?

• 경영주와의 관계:		
① 아들/딸	② 사위/며느리	
③ 기타 친인척	④ 제3자(비혈연)	
• 현재 농장 업무 참여 수준:		
① 전업으로 참여	② 일부 시간만 참여	③ 전혀 참여하지 않음
• 후계자의 관련 교육 이수 여부:		
① 축산/농업 관련 학과 전공		
② 마이스터대학 등 전문 교육 이수		
③ 관련 교육 경험 없음		

C2-2 (후계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후계자에게 성공적으로 농장을 승계하기 위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
② 후계자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투자 자금 확보
③ 후계자의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교육
④ 환경·방역·사육제한 등 각종 규제
⑤ 인근 주민의 민원
⑥ 기타 ( )

C2-3 (후계자가 없는 경우)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 선택)

1순위		2순위	

①	열악한 노동환경(악취, 노동 강도 등)
②	낮은 소득
③	후계자가 감당하기에 큰 부채 규모 및 초기 투자 비용
④	복잡한 환경 규제 및 방역 의무
⑤	불안정한 기대 수입
⑥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⑦	확장을 위한 농지/축사 부지 확보의 어려움
⑧	과도한 민원

C3. 귀하는 은퇴 후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① 후계자에게 물려준다 ② 제3자에게 매각한다 ③ 제3자에게 임대한다
④ 폐업하고 시설은 철거한다 ⑤ 폐업하고 시설은 방치한다

C4. 귀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을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및 저축 ③ 농장 매각/임대 수입
④ 용돈 등 가족으로부터의 부양 ⑤ 직불금 등 정부 지원 ⑥ 쌀 등 타농업으로부터의 소득

■ 기술 도입 및 향후 운영 계획

D1. 귀하의 농장에서는 다음 중 어떤 스마트 축산(ICT)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자동 급이/급수기	☐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	축사 환경(온/습도, 환기 등) 자동 제어 시스템	☐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기타 (직접 입력:_____)
☐	도입 장비 없음		

D2. 귀하의 농장에서는 스마트 축산(ICT) 기술/장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중 어떤 종류의 기술/장비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자동 급이/급수기	☐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	축사 환경(온/습도, 환기 등) 자동 제어 시스템	☐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기타 (직접 입력:_____)
☐	도입 장비 없음		

D3. 스마트 축산 기술/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높은 초기 도입 비용	④	실제 효과(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불확신
②	어떤 장비가 좋은지 신뢰할 만한 정보 부족	⑤	판매 및 설치 업체의 부재
③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⑥	해당 농장의 설치 불가능 (노후화, 건폐율 부족 등)

D4. 향후 5년간 농장 운영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대폭 확대 ② 확대 ③ 현 규모 유지 ④ 축소 ⑤ 대폭 축소 ⑥ 폐업

D4-1. (D4 문항 ⑤, ⑥ 응답자) 농장 운영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순위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경영 악화	④	방역문제	⑦	부채 문제
②	후계자 문제	⑤	인근 주민의 민원	⑧	정부 정책 변화
③	고용 노동 문제	⑥	환경 관련 규제	⑨	축사의 노후화
⑩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	⑪	기타 ( )		

■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

E1. 아래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며,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책명	알고있다		이용해 봤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9 등)	□	□	□	□
농촌인력중개센터	□	□	□	□
축사시설현대화 등 저금리 융자 지원	□	□	□	□
공익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직불금	□	□	□	□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	□	□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 시설 지원	□	□	□	□
후계농 육성 및 영농 승계 지원 (세제, 자금 등)	□	□	□	□

E2. 다음은 축산농가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②	(규제) 환경, 방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③	(생산비) 사료,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④	(가격) 축산물 수급 조절 및 수입 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
⑤	(승계) 영농 승계 시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 강화
⑥	(자금)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저금리 융자 확대
⑦	(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E3. 귀하는 '축사은행'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은행 제도는 고령화·폐업 등으로 유휴화된 축사를 공적 기구가 매입·임대·분양하여 청년·신규 축산인에게 공급하는 제도임. 축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며, 경영 회생·연금 등과 연계해 세대교체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함.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E3-1. 귀하는 축사은행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4. 귀하는 축산지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신규 축사 신축이나 사육 규모 확대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축산지구**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E5 농가 경영에 있어 정부가 귀하의 농장을 돕기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정책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에서 요구할 경우 작성.

♣ 모든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축산업 신규 진입 및 예정자 설문조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업 신규 진입 및 예정자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에서는 향후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 예정인 농업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축산업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농업 관련 학교 재학생의 향후 농업 및 축산업의 종사 의향과 인식 등을 바탕으로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분야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축산경제연구실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김경진 연구원(☎ 061-820-2190)	실사 기관	

■ 인적 사항

1.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전공 심화
⑤ 졸업자 (졸업 연도:)

2. 귀하의 학과 및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한우 전공 ② 낙농 전공 ③ 양돈 전공
④ 가금 전공 ⑤ 말산업반려동물 전공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 세
(_____)년생

5. 귀하의 출신 지역(고등학교 졸업 지역 기준)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강원권 ③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④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⑤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⑥ 제주권

6. 귀하의 가족 중 현재 농업(축산업 포함)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① 축산(→7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축산 이외의 농업(→8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③ 해당없음(→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7. (6번 문항에서 ①번 응답한 경우) 주된 농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하나만 선택)

① 한우 ② 낙농 ③ 양돈
④ 가금 ⑤ 기타(_____) ⑥

8. (6번 문항에서 ②번 응답한 경우) 주된 농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하나만 선택)

① 쌀 ② 밭작물 ③ 과수 ④ 채소 ⑤ 기타(_____)

■ 축산업 관련 질의

9. 우리나라 사회에서 축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축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보통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11. 다음은 축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축산업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소득 변동성이 작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근무 환경이 좋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축산업은 기술 발전과 혁신(예: 스마트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동물복지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은 미래 전망이 밝다.	①	②	③	④	⑤

■ 축산업 진입 의향 관련 질의

12. 향후 축산업 분야로 진출할 의향은 어느정도 입니까?

① 졸업 후 바로 승계 ② 졸업 후 바로 창업
③ 경험 및 노하우 습득 후 승계 ④ 경험 및 노하우 습득 후 창업 ⑤ 계획 없음(18번으로 이동)

13. 만약 축산업 분야로 진출한다면,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복수 선택)

	축종	희망사육두수
□	한우/육우(축산업)	( )마리
□	낙농(축산업)	( )마리
□	양돈(축산업)	( )마리
□	육계(축산업)	( )마리
□	산란계(축산업)	( )마리
□	기타( )	( )마리

14. 축산업 진입 시 희망 사육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현재 거주 지역 ② 다른 지역

14-1. (주관식) 그렇다면 희망하시는 사육 지역은 어느 도입니까? ( )도 ( )시/군

지역구분			
	① 강원도	② 경기도(인천)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전라북도	⑥ 전라남도(광주)
	⑦ 경상북도	⑧ 경상남도	⑨ 제주도

14-2. 그렇다면 희망하시는 사육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해당 축종 특화 지역 ② 해당 지자체의 지원
③ 해당 지역의 연고가 있어서 ④ 기타( )

15. 축산업 진입시 축사 취득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① 기존 축사/축사 부지 활용 ② 신규 축사부지 이용(신규허가) (16번으로 이동) ③ 현재 미정 (16번으로 이동)

15-1. 기존 축사/축사 부지 활용 시 취득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승계 ② 매매 ③ 임대 ④신축

16. 축산업 관련 인증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인증제 구분	인지도					참여 의향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높음	있음	없음
1) 환경친화 축산농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깨끗한 축산농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 동물복지인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4) 유기축산물 인증(유기농)	①	②	③	④	⑤	①	②
5) HACCP 인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6) 무항생제 축산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7) 방목생태 축산농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8) 저탄소 축산물 인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17. ICT 스마트 축산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도입 의사가 있습니까?

구분		인지도					참여 의향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높음	있음	없음
ICT 스마트 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세부 ICT 기기별 도입 의향	ICT 자동급이/급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ICT 분뇨 처리 자동화 설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축사환경(온/습도, 환기, 자동개폐기 등) 자동제어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발정/분만/질병 감지 센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CCTV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로봇 착유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18. (12번 문항에서 ⑤를 선택한 경우) 현재 농장 승계 및 창업 의향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1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

(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자본 부족)	( )	환경오염 및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부담감
( )	과도한 노동 강도 및 긴 근무 시간	( )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우려
( )	불확실한 시장 상황 및 소득 불안정	( )	더 매력적이거나 안정적인 다른 산업 분야가 있어서
( )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또는 부정적 이미지	( )	개인적인 적성이나 흥미와 맞지 않아서
( )	축산업 관련 정보 및 경험 부족	( )	기타( )

19. 만약 귀하가 축산업에 신규로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독립적인 사업(나만의 농장) 운영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농업 또는 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 및 관심 실현	①	②	③	④	⑤
높은 소득 및 경제적 성공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최신 기술(스마트팜, 자동화 설비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한다는 보람	①	②	③	④	⑤
농촌 생활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 (자금,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	①	②	③	④	⑤

20. 축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자본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축사 부지 등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과도한 노동 강도 및 시간 부족 (휴일 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축산물 시장 가격 변동성 및 소득 불안정	①	②	③	④	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및 실질적인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냄새, 환경오염 등)	①	②	③	④	⑤
전문 지식 및 실용적인 기술 습득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가축 질병 발생 위험 및 그에 따른 관리 부담	①	②	③	④	⑤
환경 규제 강화 및 관련 비용 증가 (분뇨 처리, 악취 저감 등)	①	②	③	④	⑤

21. 축산업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청년 창업농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 (초기 자본 지원)	①	②	③	④	⑤
축사 부지 및 시설 확보 지원 (장기 임대, 구매 알선, 임대료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선도 농가 또는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장기 현장 실습 지원	①	②	③	④	⑤

항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스마트 축산 기술(ICT 장비,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축산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도 (품종, 사양, 질병, 경영)	①	②	③	④	⑤
신규 진입 초기(3-5년)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소득 보전 또는 장려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정부 주도의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합리적인 가격 지지 정책	①	②	③	④	⑤
지역 단위 공동 시설(분뇨처리, 사료제조 등) 및 고가 장비 공동 이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축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21.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보통(현재와 비슷)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답례품 지급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 모든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역별 축산농가 사육/운영 및 신규/폐업 현황

1. 돼지

〈부표 3-1〉 지역별·사육목적별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모돈사육 전문	번식용	비육전문	일관(혼합) 사육	자돈전문	합계
강원	11	17	55	100	1	184
	(2.2)	(8.3)	(2.7)	(4.3)	(1.7)	(3.6)
경기(인천)	140	22	523	357	15	1,057
	(27.4)	(10.8)	(25.9)	(15.2)	(25.0)	(20.6)
경남(부산/울산)	34	31	172	335	2	574
	(6.7)	(15.2)	(8.5)	(14.3)	(3.3)	(11.2)
경북(대구)	34	33	242	319	14	642
	(6.7)	(16.2)	(12.0)	(13.6)	(23.3)	(12.5)
전남(광주)	35	28	161	255	2	481
	(6.8)	(13.7)	(8.0)	(10.9)	(3.3)	(9.4)
전북	62	24	225	243	7	561
	(12.1)	(11.8)	(11.2)	(10.4)	(11.7)	(10.9)
충남(대전/세종)	149	27	469	437	17	1,099
	(29.2)	(13.2)	(23.3)	(18.7)	(28.3)	(21.4)
충북	32	17	139	97	2	287
	(6.3)	(8.3)	(6.9)	(4.1)	(3.3)	(5.6)
제주	14	5	30	200	0	249
	(2.7)	(2.5)	(1.5)	(8.5)	(0.0)	(4.9)
합계	511	204	2,016	2,343	60	5,1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2〉 연도별·지역별 돼지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강원	5	(3.6)	11	(6.7)	3	(1.9)	2	(1.5)
경기(인천)	33	(23.6)	59	(35.8)	51	(33.1)	46	(34.3)
경남(부산/울산)	15	(10.7)	17	(10.3)	22	(14.3)	15	(11.2)
경북(대구)	18	(12.9)	11	(6.7)	21	(13.6)	21	(15.7)
전남(광주)	16	(11.4)	9	(5.5)	10	(6.5)	17	(12.7)
전북	18	(12.9)	9	(5.5)	14	(9.1)	9	(6.7)
충남(대전/세종)	22	(15.7)	34	(20.6)	22	(14.3)	19	(14.2)
충북	10	(7.1)	8	(4.8)	8	(5.2)	3	(2.2)
제주	3	(2.1)	7	(4.2)	3	(1.9)	2	(1.5)
전국	140	(100.0)	165	(100.0)	154	(100.0)	134	(100.0)

주 1)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3〉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축사로 활용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53	(4.3)	안성시	23	(5.9)	익산시	101	(12.0)
경기권	254	(20.6)	포천시	19	(4.9)	홍성군	35	(4.2)
경남권	131	(10.6)	정읍시	18	(4.6)	김제시	30	(3.6)
경북권	149	(12.1)	이천시	17	(4.4)	당진시	26	(3.1)
전남권	116	(9.4)	제주시	16	(4.1)	이천시	24	(2.8)
전북권	225	(18.2)	나주시	14	(3.6)	포천시	23	(2.7)
충남권	215	(17.4)	홍성군	12	(3.1)	안성시	22	(2.6)
충북권	63	(5.1)	당진시	10	(2.6)	천안시	20	(2.4)
제주권	27	(2.2)	양평군	9	(2.3)	양주시	18	(2.1)
합계	1,233	(100.0)	소계	390	(100.0)	소계	843	(100.0)

주 1)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4〉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돼지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35	(4.1)	안성시	23	(5.9)	파주시	32	(6.9)
경기권	244	(28.5)	포천시	19	(4.9)	연천군	25	(5.4)
경남권	93	(10.9)	정읍시	18	(4.6)	합천군	17	(3.6)
경북권	117	(13.7)	이천시	17	(4.4)	포천시	15	(3.2)
전남권	78	(9.1)	제주시	16	(4.1)	홍성군	15	(3.2)
전북권	88	(10.3)	나주시	14	(3.6)	화성시	15	(3.2)
충남권	136	(15.9)	홍성군	12	(3.1)	이천시	14	(3.0)
충북권	39	(4.6)	당진시	10	(2.6)	천안시	12	(2.6)
제주권	26	(3.0)	양평군	9	(2.3)	철원군	12	(2.6)
합계	856	(100.0)	소계	390	(100.0)	소계	466	(100.0)

주 1) 돼지 농장 중에서 일반돼지, 종돈, 흑돼지 사육 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실험용, 멧돼지, 미니피그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돼지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6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4) 데이터 분석 기간이 2021년 6월~2025년 6월로 2021년 이전에 폐업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의 경우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2. 한육우

〈부표 3-5〉 사육목적별 한육우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번식용	비육용	일관(혼합) 사육	한육우(혼합) 사육	종축	합계
강원	1,321	286	3,653	65	0	5,325
	(4.7)	(4.6)	(10.4)	(1.7)	0.0	(7.3)
경기(인천)	538	1,259	2,783	1,183	1	5,764
	(1.9)	(20.1)	(7.9)	(30.9)	(12.5)	(7.9)
경남(부산/울산)	3,900	442	4,130	164	3	8,639
	(14.0)	(7.0)	(11.7)	(4.3)	(37.5)	(11.8)
경북(대구)	6,048	2,055	7,186	659	2	15,950
	(21.7)	(32.8)	(20.4)	(17.2)	(25.0)	(21.8)
전남(광주)	8,735	717	4,118	344	1	13,915
	(31.3)	(11.4)	(11.7)	(9.0)	(12.5)	(19.0)
전북	2,590	493	4,862	317	0	8,262
	(9.3)	(7.9)	(13.8)	(8.3)	0.0	(11.3)
충남(대전/세종)	2,961	625	5,552	828	1	9,967
	(10.6)	(10.0)	(15.8)	(21.6)	(12.5)	(13.6)
충북	1,563	335	2,580	256	0	4,734
	(5.6)	(5.3)	(7.3)	(6.7)	0.0	(6.5)
제주	256	60	298	9	0	623
	(0.9)	(1.0)	(0.8)	(0.2)	0.0	(0.9)
합계	**27,912**	**6,272**	**35,163**	**3,826**	**8**	**73,1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6〉 연도별·지역별 한육우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강원	113	(5.5)	167	(5.3)	161	(4.9)	188	(5.9)
경기(인천)	239	(11.6)	407	(12.8)	424	(12.8)	372	(11.6)
경남(부산/울산)	219	(10.6)	374	(11.8)	342	(10.3)	339	(10.6)
경북(대구)	441	(21.4)	542	(17.1)	614	(18.5)	558	(17.4)
전남(광주)	405	(19.7)	691	(21.8)	644	(19.4)	622	(19.4)
전북	211	(10.2)	336	(10.6)	376	(11.3)	390	(12.2)
충남(대전/세종)	339	(16.5)	445	(14.0)	553	(16.7)	522	(16.3)
충북	76	(3.7)	174	(5.5)	176	(5.3)	206	(6.4)
제주	17	(0.8)	41	(1.3)	25	(0.8)	12	(0.4)
전국	2,060	(100.0)	3,177	(100.0)	3,315	(100.0)	3,209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7〉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한육우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축사로 활용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1,492	(7.1)	정읍시	91	(4.7)	경주시	555	(2.9)
경기권	1,829	(8.6)	나주시	67	(3.4)	상주시	476	(2.5)
경남권	2,697	(12.8)	영주시	63	(3.2)	홍성군	464	(2.4)
경북권	4,723	(22.3)	청주시	55	(2.8)	장흥군	413	(2.2)
전남권	3,790	(17.9)	경주시	54	(2.8)	공주시	375	(2.0)
전북권	2,129	(10.1)	영암군	53	(2.7)	구미시	359	(1.9)
충남권	2,987	(14.1)	횡성군	51	(2.6)	합천군	344	(1.8)
충북권	1,280	(6.1)	안동시	44	(2.2)	무안군	334	(1.7)
제주권	224	(1.1)	예산군	43	(2.2)	예천군	330	(1.7)
합계	21,151	(100.0)	소계	1,956	(100.0)	소계	19,195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우 및 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8〉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한육우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896	(6.2)	정읍시	91	(4.7)	해남군	292	(2.4)
경기권	1,159	(8.1)	나주시	67	(3.4)	구미시	286	(2.3)
경남권	1,737	(12.1)	영주시	63	(3.2)	상주시	285	(2.3)
경북권	3,016	(21.0)	청주시	55	(2.8)	경주시	260	(2.1)
전남권	3,079	(21.4)	경주시	54	(2.8)	장흥군	259	(2.1)
전북권	1,741	(12.1)	영암군	53	(2.7)	무안군	246	(2.0)
충남권	1,718	(12.0)	횡성군	51	(2.6)	예천군	240	(1.9)
충북권	881	(6.1)	안동시	44	(2.2)	정읍시	230	(1.9)
제주권	132	(0.9)	예산군	43	(2.2)	울주군	222	(1.8)
합계	14,359	(100.0)	소계	1,956	(100.0)	소계	12,403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한육우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젖소 및 교잡우 사육농장은 제외함.
2) 한육우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4) 데이터 분석 기간이 2021년 6월~2025년 6월로 2021년 이전에 폐업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의 경우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3. 젖소

〈부표 3-9〉 연도별·지역별 젖소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강원	7	(1.9)	13	(3.0)	12	(2.7)	11	(2.6)
경기(인천/서울)	71	(19.0)	113	(26.2)	131	(29.0)	140	(32.5)
경남(울산)	11	(2.9)	25	(5.8)	21	(4.6)	23	(5.3)
경북(대구)	62	(16.6)	49	(11.3)	45	(10.0)	35	(8.1)
전남(광주)	35	(9.4)	53	(12.3)	50	(11.1)	43	(10.0)
전북	37	(9.9)	53	(12.3)	70	(15.5)	56	(13.0)
충남(대전/세종)	128	(34.2)	103	(23.8)	98	(21.7)	95	(22.0)
충북	19	(5.1)	20	(4.6)	23	(5.1)	27	(6.3)
제주	4	(1.1)	3	(0.7)	2	(0.4)	1	(0.2)
전국	374	(100.0)	432	(100.0)	452	(100.0)	431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0〉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젖소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축사로 활용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49	(4.4)	안성시	13	(4.4)	천안시	49	(5.0)
경기권	354	(31.5)	이천시	12	(4.2)	경주시	44	(4.5)
경남권	63	(5.6)	여주시	10	(3.4)	화성시	44	(4.5)
경북권	154	(13.7)	철원군	9	(3.0)	파주시	28	(2.8)
전남권	70	(6.2)	포천시	9	(2.7)	평택시	28	(2.8)
전북권	121	(10.8)	파주시	8	(2.6)	남원시	27	(2.7)
충남권	238	(21.2)	청주시	6	(2.5)	아산시	25	(2.5)
충북권	66	(5.9)	경주시	4	(2.2)	안성시	25	(2.5)
제주권	9	(0.8)	보은군	4	(2.0)	예산군	23	(2.3)
합계	1,124	(100.0)	소계	136	(100.0)	소계	988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두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1〉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젖소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35	(5.1)	안성시	13	(4.4)	여주시	28	(5.1)
경기권	252	(36.8)	이천시	12	(4.2)	평택시	21	(3.8)
경남권	39	(5.7)	여주시	10	(3.4)	이천시	18	(3.3)
경북권	74	(10.8)	철원군	9	(3.0)	양주시	17	(3.1)
전남권	46	(6.7)	포천시	9	(2.7)	연천군	17	(3.1)
전북권	95	(13.9)	파주시	8	(2.6)	천안시	16	(2.9)
충남권	93	(13.6)	청주시	6	(2.5)	청주시	15	(2.7)
충북권	42	(6.1)	경주시	4	(2.2)	파주시	15	(2.7)
제주권	9	(1.3)	보은군	4	(2.0)	화성시	15	(2.7)
합계	685	(100.0)	소계	136	(100.0)	소계	549	(100.0)

주 1) 소 사육농장 중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 집계하였으며, 한우, 육우, 교잡우, 종축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젖소 농장은 최대사육두수 기준 7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4) 데이터 분석 기간이 2021년 6월~2025년 6월로 2021년 이전에 폐업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의 경우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4. 육용계

〈부표 3-12〉 지역별·사육목적별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육용전문	육용종계	혼합사육 (육용계, 종계 등)	기타 (겸용 등)	합계
지역	강원	132	4	5	125	266
		(4.8)	(1.1)	(1.1)	(7.8)	(5.2)
	경기(인천)	475	58	58	212	803
		(17.3)	(15.9)	(12.5)	(13.3)	(15.6)
	경남(울산)	136	4	2	411	553
		(5.0)	(1.1)	(0.4)	(25.8)	(10.7)
	경북(대구)	289	16	2	315	622
		(10.5)	(4.4)	(0.4)	(19.8)	(12.0)
	전남(광주)	462	22	15	156	655
		(16.8)	(6.0)	(3.2)	(9.8)	(12.7)
	전북	573	102	210	130	1,015
		(20.9)	(28.0)	(45.4)	(8.2)	(19.7)
	충남(세종)	469	140	90	144	843
		(17.1)	(38.5)	(19.4)	(9.0)	(16.3)
	충북	164	17	81	85	347
		(6.0)	(4.7)	(17.5)	(5.3)	(6.7)
	제주	43	1	0	15	59
		(1.6)	(0.3)	0.0	(0.9)	(1.1)
합계		2,743	364	463	1,593	5,16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3〉 연도별·지역별 육용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강원	16	(4.6)	18	(6.2)	18	(7.1)	10	(3.8)
경기(인천/서울)	93	(26.6)	69	(23.8)	49	(19.4)	60	(22.6)
경남(울산)	27	(7.7)	43	(14.8)	32	(12.6)	33	(12.5)
경북(대구)	32	(9.2)	27	(9.3)	30	(11.9)	19	(7.2)
전남(광주)	34	(9.7)	30	(10.3)	22	(8.7)	27	(10.2)
전북	61	(17.5)	38	(13.1)	34	(13.4)	29	(10.9)
충남(대전/세종)	61	(17.5)	45	(15.5)	47	(18.6)	53	(20.0)
충북	23	(6.6)	17	(5.9)	19	(7.5)	28	(10.6)
제주	2	(0.6)	3	(1.0)	2	(0.8)	6	(2.3)
전국	349	(100.0)	290	(100.0)	253	(100.0)	265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4〉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축사로 활용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204	(6.7)	남원시	20	(7.0)	창원시	69	(2.5)
경기권	489	(16.0)	나주시	15	(5.3)	울주군	65	(2.3)
경남권	505	(16.5)	익산시	12	(4.2)	경주시	51	(1.8)
경북권	507	(16.6)	김제시	11	(3.9)	진주시	43	(1.6)
전남권	352	(11.5)	정읍시	11	(3.9)	안동시	42	(1.5)
전북권	378	(12.4)	고창군	10	(3.5)	청주시	42	(1.5)
충남권	384	(12.6)	논산시	10	(3.5)	구미시	41	(1.5)
충북권	210	(6.9)	부여군	10	(3.5)	김해시	38	(1.4)
제주권	26	(0.9)	영암군	10	(3.5)	정읍시	38	(1.4)
합계	3,055	(100.0)	소계	284	(100.0)	소계	2,771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5〉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육용계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51	(3.7)	남원시	20	(7.0)	정읍시	32	(2.9)
경기권	51	(3.7)	나주시	15	(5.3)	창원시	31	(2.8)
경남권	195	(14.2)	익산시	12	(4.2)	김제시	28	(2.6)
경북권	166	(12.1)	김제시	11	(3.9)	울주군	28	(2.6)
전남권	341	(24.8)	정읍시	11	(3.9)	남원시	21	(1.9)
전북권	279	(20.3)	고창군	10	(3.5)	익산시	18	(1.7)
충남권	190	(13.8)	논산시	10	(3.5)	상주시	17	(1.6)
충북권	93	(6.8)	부여군	10	(3.5)	영암군	17	(1.6)
제주권	7	(0.5)	영암군	10	(3.5)	부안군	16	(1.5)
합계	1,373	(100.0)	소계	284	(100.0)	소계	1,089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육용계, 백세미, 토종닭 및 종계(육용종계, 토종종계)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산란계, 산란중추 산란종계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육용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4) 데이터 분석 기간이 2021년 6월~2025년 6월로 2021년 이전에 폐업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의 경우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5. 산란계

〈부표 3-16〉 지역별·사육목적별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구분	산란전문	산란종계	산란중추 생산	혼합사육 (산란, 종계, 중추)	합계
강원	87	0	8	4	99
	(7.6)	0.0	(5.8)	(3.1)	(6.8)
경기(인천)	202	5	38	62	307
	(17.6)	(16.7)	(27.5)	(47.3)	(21.2)
경남(울산)	147	1	7	1	156
	(12.8)	(3.3)	(5.1)	(0.8)	(10.8)
경북(대구)	193	6	19	8	226
	(16.8)	(20.0)	(13.8)	(6.1)	(15.6)
전남(광주)	118	1	3	1	123
	(10.3)	(3.3)	(2.2)	(0.8)	(8.5)
전북	89	9	2	11	111
	(7.8)	(30.0)	(1.4)	(8.4)	(7.7)
충남(세종)	160	4	39	32	235
	(13.9)	(13.3)	(28.3)	(24.4)	(16.3)
충북	120	4	22	12	158
	(10.5)	(13.3)	(15.9)	(9.2)	(10.9)
제주	31	0	0	0	31
	(2.7)	0.0	0.0	0.0	(2.1)
합계	1,147	30	138	131	1,446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는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행정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따라서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이력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2)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3)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7〉 연도별·지역별 산란계 농장 휴업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휴업 농장수	
강원	2	(1.4)	5	(4.8)	6	(5.0)	1	(1.1)
경기(인천)	58	(39.7)	33	(31.7)	45	(37.2)	24	(25.3)
경남(울산)	7	(4.8)	6	(5.8)	2	(1.7)	4	(4.2)
경북(대구)	26	(17.8)	13	(12.5)	9	(7.4)	7	(7.4)
전남(광주)	5	(3.4)	5	(4.8)	1	(0.8)	2	(2.1)
전북	11	(7.5)	14	(13.5)	20	(16.5)	23	(24.2)
충남(세종)	29	(19.9)	21	(20.2)	24	(19.8)	29	(30.5)
충북	8	(5.5)	6	(5.8)	14	(11.6)	5	(5.3)
제주	0	0.0	1	(1.0)	0	0.0	0	(0.0)
전국	146	(100.0)	104	(100.0)	121	(100.0)	95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8〉 21/25년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폐업(이양, 판매) 농장					
			축사로 활용			축사로 미활용(폐업 유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31	(7.7)	영주시	5	(7.4)	김제시	22	(6.5)
경기권	97	(24.0)	음성군	4	(5.9)	경주시	19	(5.6)
경남권	48	(11.9)	포천시	4	(5.9)	천안시	13	(3.9)
경북권	78	(19.3)	나주시	3	(4.4)	산청군	12	(3.6)
전남권	22	(5.4)	보성군	3	(4.4)	여주시	12	(3.6)
전북권	36	(8.9)	서귀포시	3	(4.4)	원주시	9	(2.7)
충남권	48	(11.9)	안성시	3	(4.4)	김천시	8	(2.4)
충북권	39	(9.6)	평택시	3	(4.4)	안성시	8	(2.4)
제주권	6	(1.5)	군산시	2	(2.9)	양산시	8	(2.4)
합계	405	(100.0)	소계	68	(100.0)	소계	337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3-19〉 21/25년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산란계 농장 현황

단위: 호(%)

지역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주요 시군구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기존 축사부지에 입지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		
지역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시군구	농장수	(비중)
강원권	29	(7.6)	영주시	5	(7.4)	천안시	18	(5.8)
경기권	73	(19.2)	음성군	4	(5.9)	음성군	15	(4.8)
경남권	35	(9.2)	포천시	4	(5.9)	아산시	13	(4.2)
경북권	49	(12.9)	나주시	3	(4.4)	김제시	10	(3.2)
전남권	26	(6.8)	보성군	3	(4.4)	진천군	10	(3.2)
전북권	28	(7.4)	서귀포시	3	(4.4)	충주시	9	(2.9)
충남권	67	(17.6)	안성시	3	(4.4)	영주시	7	(2.2)
충북권	66	(17.4)	평택시	3	(4.4)	안성시	6	(1.9)
제주권	7	(1.8)	군산시	2	(2.9)	양산시	6	(1.9)
합계	380	(100.0)	소계	68	(100.0)	소계	312	(100.0)

주 1) 닭 사육농장 중에서 산란계, 산란종계 및 산란중추 사육농장을 집계하였으며, 육용계, 토종닭 및 육용종계 등 사육 농장은 집계에서 제외함.

2) 산란계 농장은 최대사육마릿수 기준 100마리 이상(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농장만 집계함.

3) 신규/폐업 여부는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축종 운영 현황(폐업) 및 농장번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지/신규/삭제 여부로 판단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장 삭제).

4) 데이터 분석 기간이 2021년 6월~2025년 6월로 2021년 이전에 폐업한 축사부지에 입지한 농장의 경우 신규 축사부지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연도별·축종별 사육 기반 분석 결과

〈부표 4-1〉 축종별·연도별 폐업 축사 활용률 및 폐업 축사 발생 현황

구분			21/23(2년)	23/24(1년)	24/25(1년)	21/25(4년)
돼지	폐업(이양, 판매) 농장(A)		682	356	312	1,233
		축사로 활용 농장(B)	198	103	127	390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484	253	185	843
	폐업축사 활용률(B/A)		29.0%	28.9%	40.7%	31.6%
한육우	폐업(이양, 판매) 농장(A)		10,760	8,132	7,662	21,151
		축사로 활용 농장(B)	1,128	579	451	1,956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9,632	7,553	7,211	19,195
	폐업축사 활용률(B/A)		10.5%	7.1%	5.9%	9.2%
젖소	폐업(이양, 판매) 농장(A)		646	319	310	1,124
		축사로 활용 농장(B)	76	29	33	136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570	290	277	988
	폐업축사 활용률(B/A)		11.8%	9.1%	10.6%	12.1%
육용계	폐업(이양, 판매) 농장(A)		2,015	1,130	814	3,055
		축사로 활용 농장(B)	178	84	70	284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1,837	1,046	744	2,771
	폐업축사 활용률(B/A)		8.8%	7.4%	8.6%	9.3%
산란계	폐업(이양, 판매) 농장(A)		252	131	99	405
		축사로 활용 농장(B)	38	20	15	68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214	111	84	337
	폐업축사 활용률(B/A)		15.1%	15.3%	15.2%	16.8%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동일 GIS 정보 중복농가 삭제).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4-2〉 축종별·연도별 폐업/신규 축사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단위: 마리, 호

구분		'21/'23(2년)	'23/'24(1년)	'24/'25(1년)	'21/'25(4년)
돼지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A)	2,786	2,299	2,042	2,594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B)	1,759	1,492	1,543	1,569
	A/B	1.58	1.54	1.32	1.65
한육우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A)	51.0	44.6	40.1	55.5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B)	29.6	29.5	32.6	31.9
	A/B	1.72	1.51	1.23	1.74
젖소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A)	84.8	72.2	83.1	86.9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B)	60.1	68.8	69.9	65.7
	A/B	1.41	1.05	1.19	1.32
육용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A)	31,868	25,901	21,960	38,553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B)	12,490	11,850	18,147	14,914
	A/B	2.25	2.19	1.21	2.59
산란계	신규(승계, 구매) 농장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A)	55,265	72,602	44,770	58,623
	폐업: 축사로 미활용 농장 (폐업 유지) 농가당 최대 사육 마릿수(B)	40,563	43,518	56,900	45,279
	A/B	1.36	1.67	0.79	1.29

주: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4-3〉 축종별·연도별 사육기반(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

구분			2021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6월	2025년 6월
돼지	사육 마릿수(천 마리)		11,581	11,779	11,751	11,701
	농장수(호)		5,510	5,333	5,205	5,134
	농장당 마릿수(마리)		2,102	2,209	2,258	2,279
	사육 기반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천 마리)	12,763	12,918	13,053	12,844
		전기 대비 증감률	-	1.21%	1.05%	-1.60%
한육우	사육 마릿수(천 마리)		3,452	3,625	3,519	3,373
	농장수(천호)		80.0	80.9	77.2	73.2
	농가당 마릿수(마리)		43.2	44.8	45.6	46.1
	사육 기반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천 마리)	3,989	4,370	4,293	4,119
		전년 대비(%)	-	9.55%	-1.76%	-4.05%
젖소	사육 마릿수(천 마리)		381	380	377	370
	농장수(호)		5,225	5,033	4,923	4,783
	농가당 마릿수(마리)		72.9	75.6	76.5	77.3
	사육 기반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천 마리)	437	445	444	437
		전년 대비(%)	-	1.83%	-0.22%	-1.58%
육용계	사육 마릿수(천 마리)		141,380	146,738	143,615	140,167
	농장수(호)		6,850	6,041	5,420	5,163
	농가당 마릿수(마리)		20,639	24,290	26,497	27,148
	사육 기반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천 마리)	242,199	239,330	238,321	238,529
		전년 대비(%)	-	-1.18%	-0.42%	0.09%
산란계	사육 마릿수(천 마리)		71,682	79,395	82,716	83,155
	농장수(호)		1,473	1,459	1,422	1,446
	농가당 마릿수(마리)		48,664	54,417	58,169	57,507
	사육 기반	최대 사육 가능 마릿수(천 마리)	101,826	106,139	106,667	107,571
		전년 대비(%)	-	4.24%	0.50%	0.85%

주 1)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를 적용하여 한육우와 젖소는 7두 이상, 돼지는 60두 이상, 산란계와 육용계는 100마리 이상 농장만 집계함.
2) 2023년은 2021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자료(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작성.

참고문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25), 농장정보 현행화 매뉴얼.

권기덕(2020),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연구, 한국산업연구원.

김남훈·황의식(2024),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승계가 중요하다, GS&J 인스티튜트.

김미복·오정태·안병일(20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세한·이인복·문운경(2019), "지능정보 ICT기반 스마트 축산 기술개발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36(3): 17-24, 한국통신학회.

김승재·이명훈·양광호·여현(2021),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6(12): 2429-2438, 한국통신학회.

김현중·박성진·김태후·강수진(2018),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E18-201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023), 축산 스마트팜 산업 기술 정책동향.

농림축산검역본부(2022), 역학조사를 위한 축산 스마트팜 이해.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_____(2024),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2023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대한한돈협회(2024),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마상진·박대식·엄진영·하인혜(2020),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C2019-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조재성·강혜정·조성호·윤영석·선효은(2023),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연구(한우 축사를 중심으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박대헌·김락우(2021), "양돈 중심의 영상 인식기반 스마트축산 연구 동향", 한국통신학학회지, 38(8): 34-41, 한국통신학회.

박성진·김현중(2020),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인식비교를 통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7(2): 250-267,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성주인·한이철·권인혜·민경찬·박해원(2024),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방안 연구, C2024-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손학기·한이철·민경찬·서형주(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 연구, C202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우진·이용건·최진용·임수현(20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개발 연구, C2022-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박대식·조승연·김윤진·이창원·최서리·신예진·이상지(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R9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우병준·김윤진(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R8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김현중·박성진·서강철(2019),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R8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유찬희·한봉희(2016a),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 규모 산정 연구, P2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김현중·서강철·정세미(2016b), 국민경제를 고려한 미래 축산정책 개선방안 연구, C2016-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호·박재홍·권정현·양성범·강창수·이춘수·이성빈·이재현·임건우·최한석·정재원·이인규·소남호·박지인·김근아·한별(2020), 영농 경영승계의 성공적 정착모델 개발, 농촌진흥청.
이용건·송우진·최진용·임수현(2022), 축사시설 실태조사 분석 연구, C202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춘수·강창수·양성범(2019),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7(2): 111-132, 한국유기농업학회.
정민국·이명기·황윤재·김윤형·김현중·이용건(2011),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C201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이용건·최진용·엄지범·지인배(2021),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R9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현호·신정섭·이상덕·박진기·천동원(2017), “축산 영농승계 실태 및 의향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4(2): 257-277,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2024),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시행지침.
축산환경관리원(2023), 20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축산환경관리원.
허덕·마상진·이동소(2015), FTA 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대책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부(2015),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Simitzis, P., C. Tzanidakis, O. Tzamaloukas & E. Sossidou(2021), "Contribution of precision livestock farming systems to the improvement of welfare status and productivity of dairy animals", Dairy, 3(1): 12-28.
Tedeschi, L. O., P. L. Greenwood & I. Halachmi(2021), "Advancements in sensor technology and decision-support intelligent tools to assist smart livestock farming", Journal of Animal Science, 99(2): skab038, Oxford University Press.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3. 13.),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_____(2024. 7. 22.),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_____(2025. 2. 4.), "농촌마을 12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

<온라인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농림업생산지수, 검색일: 2025. 2. 5.
_____(https://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검색일: 2025. 2. 5.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2024년 국세통계연보, 검색일: 2025. 2. 5.
통계청(https://kostat.go.kr), 가축동향조사, 검색일: 2025. 2. 3.
_____(https://kostat.go.kr), 농림어업조사, 검색일: 2025. 2. 5.
환경부(https://mcee.go.kr/),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일반 현황, 검색일: 2025. 4. 30.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지법(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물환경보전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축산법(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KREI

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3520
9 791161 498034
ISBN 979-11-6149-803-4